

2021 Spring

교육개발

특별기획

팬데믹 시대의 교육소외와 교육복지

CEO 칼럼

학습자 맞춤형 교육복지 지원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

파워인터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김사열 위원장과의 만남

특별기획

1. 재난 경험으로 다시 따져본 교육소외와 교육의 본질
2. 팬데믹 극복을 위한 교육복지 방향과 실천 시나리오
3. 언택트 사회의 평생교육

교육정책 이슈와 전망

1. 2021년 교육부 정책 방향: 학교의 일상 회복, 미래교육 도약
2. 코로나19 시대 교육 분야 개발협력 사업 지원 방안

NEW 교육 연구

디지털 지식기반 대응형 학습기술: 접근 방법들과 요소들

세계의 교육

1.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미국 바이든 정부의 교육정책과 시사점
2. 잉글랜드의 소외 계층을 위한 교육 정책
3. 소황제(小皇帝)의 등장과 중국의 가정교육

교육현장 Report

1. “나는 나를 포기하지 않기로 했다”
2.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 새로운 교육자치를 그리다

교육통계 Focus

유치원 교육여건 변화



ISSN 1228-291X

Contents

교육개발

2021 봄호



ISSN 1228-291X

발행처 한국교육개발원

발행인 원장 반상진

편집장 신경희

홍보출판심의위원

윤종혁, 신경희, 이동엽, 임종현, 조옥경, 백승주,

장혜승, 김지수, 김경애, 한효정, 임소현

편집실 정경아

디자인 디자인편집 031.893.8315

인쇄 다원기획 044.865.8115

홈페이지 <http://www.kedi.re.kr>

발행 2021년 봄호(통권 218호)

계간등록번호 진천, 마00001

등록변경 2018년 4월 26일

정가 6,500원

구독문의 043-530-9234 keditor@kedi.re.kr

「교육개발」은 한국도서잡지 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실린 내용은 우리 원의 공식견해가 아닙니다.

05



04

CEO 칼럼

학습자 맞춤형 교육복지 지원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

05

파워인터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김사열 위원장과의 만남

16

특별기획

팬데믹 시대의 교육소외와 교육복지

1. 재난 경험으로 다시 따져본 교육소외와 교육의 본질
2. 팬데믹 극복을 위한 교육복지 방향과 실천 시나리오
3. 언택트 사회의 평생교육

33 교육정책 이슈와 전망

1. 2021년 교육부 정책 방향:
학교의 일상 회복, 미래교육 도약
2. 코로나19 시대 교육 분야 개발협력 사업 지원 방안

43 **NEW** 교육 연구

디지털 지식기반 대응형 학습기술:
접근 방법들과 요소들

49 세계의 교육

1.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미국 바이든 정부의 교육정책과 시사점
2. 잉글랜드의 소외 계층을 위한 교육 정책
3. 소황제(小皇帝)의 등장과 중국의 가정교육



67 교육현장 Report

1. “나는 나를 포기하지 않기로 했다”
위(Wee) 프로젝트 우수 사례와 학교폭력
2.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 새로운 교육자치를
그리다: 마을과 학교, 행정의 교육 플랫폼 이야기

79 교육통계 Focus

유치원 교육여건 변화





CEO 칼럼

학습자 맞춤형 교육복지 지원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

반상진(한국교육개발원 원장)

최근 사회적 양극화의 심각성이 대두되어 전반적인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교육복지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이 커지기 시작한 1990년대 말부터 교육분야에서도 최소한의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정책들이 수립되었고, 현재까지 다양한 정책뿐만 아니라 예산의 규모도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그간의 교육복지정책은 공급자 중심으로 설계되고 경제적 기준에 의한 획일적인 교육복지 지원이라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취약집단에 대한 보상적 접근을 통해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게 하는 결핍 지원의 방식으로 추진되어 왔다. 이제는 지금의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여 교육복지 정책의 실태를 재점검함으로써 미래지향적 정책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필요한 때이다.

우리나라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단기간에 초·중등교육을 완성하면서, 2021년부터 고등학교 전학년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등 취학을 희망하는 학생이면 누구나 중등교육의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체제를 갖추었다. 그럼에도 2014년 기준으로 7세에서 18세 학령기 학생 중 40만 명 정도가 학교 밖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물론 학업중단 청소년을 비롯한 교육취약 집단에 대한 교육지원 정책이 시작된 것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아직은 미흡하다는 비판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교육소외 계층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먼저, 학령기 학습기회를 놓친 성인들의 교육을 지원해 온 ‘방송통

신중·고등학교’를 통해 학교 밖 교육소의 청소년의 학업 지속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전·편입으로 발생한 미이수 교과, 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희소 과목 등을 온라인으로 제공하여 학생의 학습권 및 교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원격 교육 제도 ‘온라인 수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 외 학생선수들의 대회 출전 및 훈련으로 인한 수업 결손을 보충할 수 있는 온라인 학습 제도 ‘학생선수 e-school’, 만성질환으로 인해 학교 출석이 어려운 건강장애학생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스쿨포유’, 교사 수급이나 학생 수의 문제로 개설이 어려운 소인수·심화 과목에 대해 여러 학교가 공동으로 과목을 개설하여 실시간/양방향 온라인 방식으로 수업을 제공하는 ‘온라인공동교육과정’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 지역격차나 건강상의 문제, 경제적 문제 등의 이유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 학령기 재학생이 교육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 교육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정책사업뿐만 아니라 시·도교육청 자체사업의 개선에 보탬이 되고, 이를 기반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체계를 통하여 더 나은 교육복지 정책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경제적 기준에 의한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인 교육복지 지원이 아닌, 학습자의 교육적 필요와 요구를 중심으로 한 학습자 맞춤형 교육복지 지원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기대한다. 이를 통해, 최소한의 교육기회 보장은 물론, 더 나아가서는 사회통합과 미래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미래지향적인 교육복지 정책을 설계할 수 있기를 바란다. 🌱



파워인터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김사열 위원장과의 만남

김사열(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반상진(한국교육개발원 원장)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역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통하여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주요정책에 대하여 대통령에게 자문하기 위해 2003년에 설치되었다.

주요 기능은 국가균형발전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 국가균형발전계획, 국가균형발전시책 및 사업의 조사·분석·평가·조정, 국가균형발전지표의 개발·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이다.

조직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 34명 이내로 구성, 당연직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방자치법」 제1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의체 대표자,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대통령이 위촉한다.

반상진 한국교육개발원장은 지난 2월 18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사열 위원장을 만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2021년 주요 추진과제와 향후 역점과제,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학교 통폐합 문제,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방대학과 교육혁신 등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현 시점은 지금까지 추진하던 균형발전 정책들로부터 실질적으로 체감 가능한 성과를 끌어내야만 하는 중요한 시기**”

반상진 바쁘신 일정에도 이렇게 시간을 내어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육개발 독자분들을 위해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대학 교수(경북대학교 생명과학부)로 재직하시다가 작년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2020년 3월 취임)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취임 후의 근황과 그간의 소회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사열 작년 3월 취임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다고 생각하니 시간이 매우 빠르게 느껴집니다.

2019년 말 기준으로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를 넘었습니다. 더구나 지난 한 해 코로나19는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출생보다 사망이 많은 인구 ‘데드 크로스 (dead cross)’ 현상까지 나타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 이처럼 엄중한 상황에 대한 책임감을 더욱 강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신년 KBS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가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어느 정도 인식하느냐”는 문항에 대해 79.3%가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대통령께서도 2021년 신년사에서 한국판 뉴딜의 중점을 지역균형 뉴딜에 두고, 지역경제 혁신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번 팬데믹을 통해 과다 집적, 밀집의 폐해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현시점은 지금까지 추진하던 균형발전 정책들로부터 실질적으로 체감 가능한 성과를 끌어내야만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결국 지역이 살기 위한 결론은 지역 단위에서 경기의 회복과 기업 정착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지역에서 기업을 경영하는 것이 기업의 입장에서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는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친기업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데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반상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성과에 대해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는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통하여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에 대해 자문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입니다.

균형위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근거로 국가균형발전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국가균형발전 계획, 시책 및 사업의 조사·분석·평가·조정, 국가균형발전지표의 개발·관리 등을 통해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여러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균형위는 분권·포용·혁신을 토대로 지속 가능한 균형발전을 위해 2018년 2월에 ‘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그리고 2019년 1월에 ‘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균특회계) 개편과 균형위 권한과 명칭을 복원시키는 등 균형발전의 법적·제도적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지방분권형 균형발전 추진을 위한 ‘지역혁신 거버넌스 구축’, 지역 수요에 맞는 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 도입’, 지역의 인프라 전략산업에 대한 선제적 투자를 위한 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추진한 것과 ‘균형발전지표 개발·활용’ 등을 주요 성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혁신도시 시존2, 도심융합특구 조성,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 지방대학 교육여건 개선 등 ‘사람·공간·산업’의 3대 전략에 따른 균형발전 5개년 계획상의 부문별 사업도 충실하게 추진 중입니다.

“ 유연한 권역별 발전전략 사업,
지역균형뉴딜 사업, 지역대학혁신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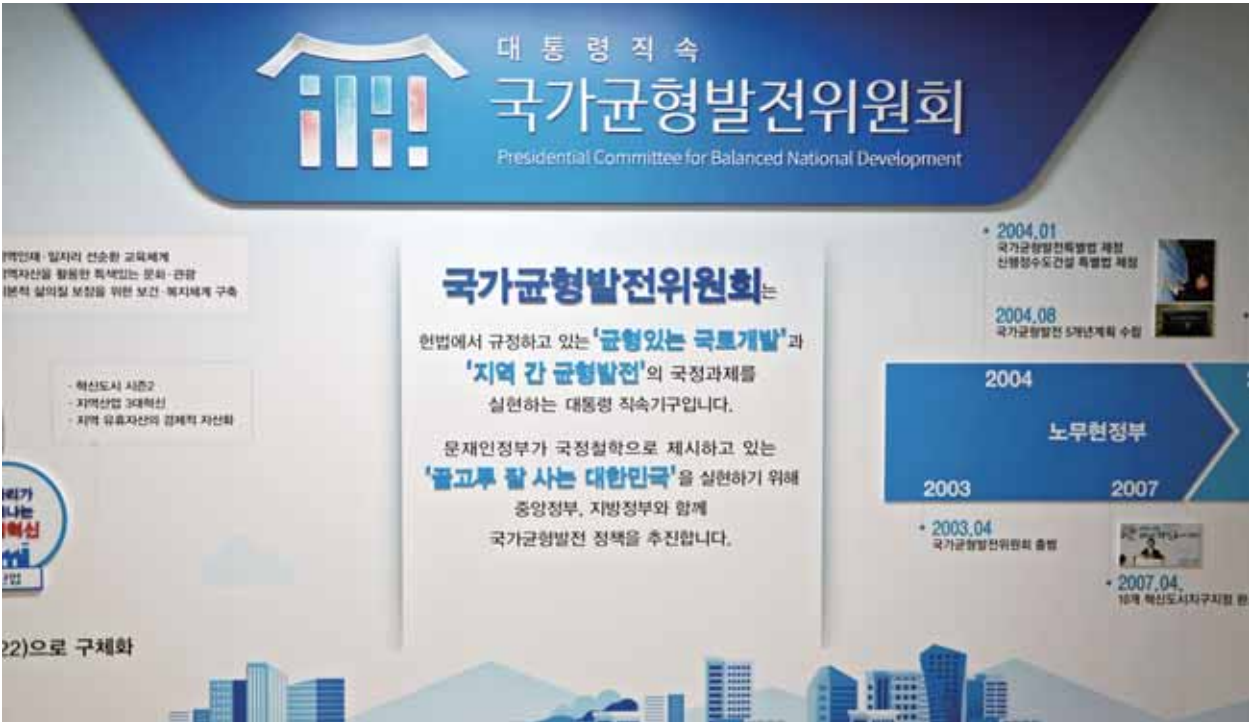
반상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2021년 주요 추진 과제, 향후 역점 과제에 대해서도 부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사열 균형위는 올해도 일관성 있는 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통해 ‘모두가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의 성과를 모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예정입니다. 여러 중요한 추진 사업들이 많지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연한 권역별 발전전략 사업’을 통해 수도권과 대등한 지역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행정구역에 얽매이지 않고, 초광역 등 자유롭고 유연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수도권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지역 경제·생활권역 형성을 위해 지역 주도의 초광역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2020년 12월에 이미 3개 선도 프로젝트를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프로젝트의 지속적인 발굴과 지원, 제도개선 추진 등 다극화된 국토 공간구조 변화에 적합한 초광역 연계교통망 확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지역균형뉴딜 사업’이라 하여 한국판 뉴딜의 주요 축으로 지역균형뉴딜이 추진 중이며, 2025년까지 총 160조 예산 중 75.3조 원(47%)이 지역에 투자될 예정입니다.





균형위는 공모사업에 균형발전지표를 활용하여 차등 가점을 부여하고, 지자체가 주도하는 지역균형뉴딜사업의 추가 발굴과 균특법 개정을 통한 지역균형뉴딜 지원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지역대학혁신 사업' 등을 통해 지역대학과 지자체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맞춤형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지역대학 육성, 지역별 전략산업 육성 등 지역산업 활성화, 농산어촌 환경 개선 등 국가균형 발전에 필수적인 각 분야의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 청소년과 청년이 지역에서
살을 영위할 수 있으려면, 교육과 취업이
지역에서 연결될 수 있어야 ”

반상진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의 폐교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김사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는 이미 시작되고 있는 문제이며, 지역 교육 기능의 존립을 좌지우지하는 주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교육의 차원에서는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문제뿐 아니라 학령 인구의 이탈과 맞물리면서 그 위기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한번 학교가 없어지면, 다시 학교를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청소년과 청년이 지역에서 살을 영위할 수 있으려면, 교육과 취업이 지역에서 연결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지역대학이 주체적으로 혁신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하고, 이에 더해 브레인 집단을 늘려 지역의 초·중등교육 생태계는 물론, 시·산·학이 어우러진 지역발전을 촉매하고 견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수한 국가인재풀 확대를 위하여, 지역의 유아·청소년(농산어촌과 도시취약계층, 다문화가정 등)의 교육환경 기준을 새롭게 정하고, 대학 졸업 시까지 교육비용을 국가가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학교, 교육 여건, 학내 시설 등 지역대학의 역량과 지역의 인구 구조, 문화적 여건, 교육 수요, 소득수준 등에 있어 지역의 수요를 맞춰 나가도록 유도하고, 지역대학이 교육, 문화, 보건·의료, 복지 등을 제공하는 지역의 종합시설로 거듭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프랑스의 경우, 대학 등록금 면제는 일종의 인구정책으로 시작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가에서 지역대학에 아낌없이 지원해 줄 수 있어야 지역대학도 살고, 지역도 살 수 있습니다.

2020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시범 실시, 2021년에는 광역지자체 간 협력 포함, 확대 예정

반상진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지방대학 육성과 교육혁신이 중요한데, 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으신지요?

김사열 지역대학의 현실은,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한 생존 위기, 수도권 인재 집중으로 인한 경쟁력 저하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대학 입학 정원이 진학 예정 인원보다 많은 첫해가 될 것이라 하고, 2024년에는 정원대비 약 12만 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대학 문제는 비단 개별 학교 하나하나의 근시안적 이슈로 봐서는 안 되고, 공동체 전체, 지역의 명운을 좌우할 수 있는 핵심적 주체이자 아젠다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인재 육성에 있어 가장 우선되어야 할 점은 대학 본연의 기능인 교육과 연구 역량을 확보하고, 이를 지역 발전을 위한 수요와 여건에 부합하도록 지역과 어우러지게 재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대학도 끊임없이 지역과 소통하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대학

의 지식과 정보, 집적된 종합적 역량을 아낌없이 제공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공동체는 물론, 지역대학의 자존감과 긍지도 높아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자체-대학 간 공동의 노력이 필요한데, 먼저 대학은 지역의 전략산업, 경제, 문화 등 지역 수요에 대응하는 학사구조와 교육과정 개편 등 인재 양성을 위해 지자체와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자체는 지역인재의 지역 정착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등을 대학과 같이 고민하고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중앙 정부 차원에서도 이러한 노력을 지속하기 위하여, 2020년에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을 시범 실시하였고, 2021년에는 광역지자체간 협력 등을 포함,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세히 설명해 드리면 2020년 신규사업으로 1,080억 원을 충북, 경남, 광주·전남 등 3개 광역단위에서 시범 실시하였고, 2021년에는 전년 대비 630억 원 증액한 1,710억 원으로 추가 지정하는 등 사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반상진 최근의 화두는 지역균형발전과 더불어 지역교육 살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 아이디어가 많지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학교 통폐합입니다. 시장 논리에 의해, 5,000개 이상의 학교가 통폐합되었고, 지금은 약간 주춤하지만 여전히 인식은 효율성의 논리에 작은 학교는 통폐합하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지방대, 지역대학의 어려움도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지역대학, 지역교육을 살리기 위한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적인 방향이나 전략은 무엇인지, 위원장님의 지혜를 얻고 싶습니다.

김사열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달리 우수한 문화를 유지하는 이유 중 하나가 기록을 하고, 교육을 통해 문화적 전승을 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많은 지식을 기록해서, 후대에 넘겨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많은 양의 지식을 전승하는 것, 교육을 많이 하는 나라들이 결국 경쟁력을 가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역소멸 문제, 인구가 감소하고 학교가 폐교되는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작은 학교와 지역 살리기를 해야 합니다.

여러 지역공동체가 같이 공존, 공유될 때 그 지역이 살 수 있는데 그 중 교육공동체의 존재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한 반에 학생이 25명인데, 중고등학교까지 한 학년에 3반 정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준을 시대에 맞게, 다르게 해야 합니다. 농산어촌에는 최소한의 인구 단위에 맞춰야 합니다. 무조건 없애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어떤 곳은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까지 있어야 하고, 또 도시가 크면 지역에 대학이 있어야 합니다.

지역 대학 또한 학령인구 감소라는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지역대학도 어느 정도 수준을 높이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서울에 있는 대학들을 공공기관처럼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어떠냐고 하는데, 수도권에 있는 국립대학은 사실 서울대 등 몇 개 안 되고, 공공기관처럼 강제성을 떨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대부분이 사립대학인데, 사립대학은 국가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지역대학을 좋게 하는 방법을 구상해야 합니다. 대학은 교육 공급량을 늘려야 좋아집니다.

서울대는 법인화 이후 10년 사이에 교수 숫자가 600명이 늘었습니다. 한 해에 60명씩 교수 숫자를 늘린 셈인데, 이렇듯 교육공급량이 많으면 최고의 대학이 됩니다. 미국 위스콘신대학의 생화학전공 교수는 100명이 넘는데, 탑5에 들려면 교수 수가 100명을 기본으로 하고,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역대학을 통폐합하면 현재보다 단위가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좋은 대학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산대, 부경대, 해양대, 창원대, 경상대 등을 통합하면 3,500~4,000명 정도인데, 5년 정도 이후에는 서울대만큼 좋아질 수 있습니다. 통합하면서 대학의 발전을 도모해야 하고, 대학이 지역 살리기를 고민해야 합니다. 동시에, 지역대학학생 교육비 지원이 선행

되지 않고는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상당한 국가예산을 투입하여 수도권 대학과의 갭을 줄여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역 플랫폼 사업에 올해는 1,700억 원, 내년에는 9개 지역에 1,000억씩 투입합니다. 부처에서는 기존 대학에 대한 지원을 반대하는데, 저는 그 돈도 적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국가 전체 예산에서 결코 큰 게 아니고, 프랑스 사례처럼 국가가 결정해 줘야 합니다.

그다음에 지역대학에 지역발전에 대한 미션을 주고 고민하도록 해야 합니다. 통합을 명령할 게 아니라, 좋은 대학이 되기 위해 각자 노력해야 합니다. 국가가 지원하면서 각 대학의 총장님들이 나서서, 각각의 캠퍼스는 두둑, 시스템 통합, 비용 절감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지역발전을 도모하도록 해야 합니다.

반상진 위원장님의 말씀에 총론적으로는 동의하면서, 구체적으로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법인화된 서울대에는 5,386억 원, 연세대, 고려대 2,000억 원, 부산대는 1,500억 원, 지방 거점국립대는 1,000~1,500억만을 국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공정한 게임입니다. 국가가 진정으로 지방국립대를 키우려면 지원을 해줘야 하고, 선연적 차원의 육성이 아니라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선언의 시그널을 주고, 예산을 통해 국가의 의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플랫폼 사업 1,700억 원으로 성공하기에는 요원한 일입니다.

지방에 있는 포항공대, 카이스트가 왜 우수한 대학이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규모의 경제를 뛰어넘는 투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수한 대학에

집중투자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지역대학들이 예전의 위상을 회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교육개발원도 계속 관련 연구를 하고 제안을 하고는 있는데 여전히 재정 문제에서 막히고 있습니다. 투자해달라고 하면 학령인구가 줄고 한계대학이 많은데 무슨 투자냐 하는데, 의사결정자의 의지와 균형발전에 대한 강한 소신이 없으면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균형위에서 교육부와 협업하여 큰 아젠다로 다뤄주시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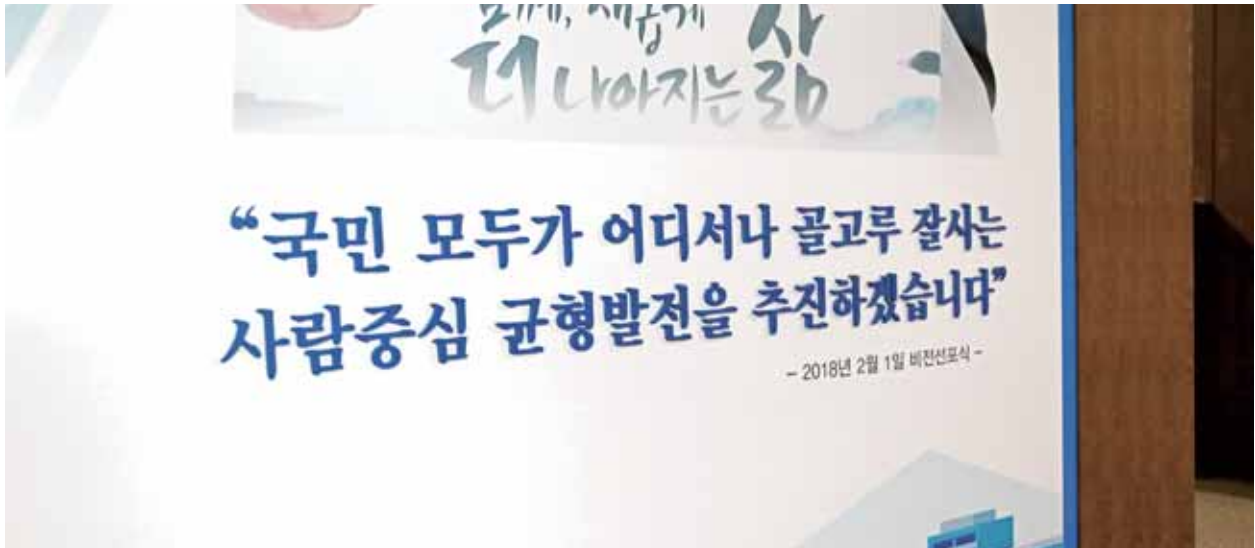
김사열 원장님 말씀처럼 돈으로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돈이 있어야 지역발전을 위한 공공적 역할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대학의 위기 속에서 교육부가 방치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만약 학령인구 감소로 예를 들어 5% 감축을 해야 한다면, 수도권, 비수도권, 사범대, 의대 모두 예외 없이 5%씩 동등하게 감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외를 두어 수도권에 대한 편중된 애정만을 표시하고, 교육부가 방치한다면 사립대학이 먼저, 그리고 나중에 국립대학이 소멸할 것입니다.

저는 사범대학을 나오고 대학에 있다 보니, 교육에 관심이 있고, 주변의 이야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교육부도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현장의 절박감과 거리감이 있습니다. 지방대 육성 관련한 계획을 교육부에서 준비하는 듯하지만 정권을 떠나서 정부, 국가의 의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 모든 대학이 특화, 특성화할 필요는 없고, 일부 대학은 특성화 역할을 하고 다른 대학이나 단과대학은 일반적인 교양교육, 고등교육의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 좋은 일자리에 대한 지역의
배려가 필요, 고민하고 같이 풀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국가가 보여줘야 ”

반상진 특성화한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특성화의 시그널이 노동시장에 영향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범대학은 지방에 있어도 임용고사를 통해 공평하게 교사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 능력에 따라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면 굳이 서울대나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특성화 결과가 직업과, 노동시장과 연결되면 해결된다고 봅니다. 공정한 학위의 신뢰성을 국가가 투자를 통해 인증하고 보장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사열 KBS 신년 여론조사를 발표했는데, “왜 서울로 오느냐”는 이유를 조사했더니, “1번은 좋은 일자리, 2번은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가지가 상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반대로 해야 지역에 사람들이 올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좋은 교육, 좋은 일자리의 예를 들자면 공공기관이 이주한 광주, 나주 지역에서는

한국전력 때문에 전남 지역의 전기전자학도가 상종가를 기록했고, 진주에 토지주택공사가 이전하고 나서, 경남대학교의 토목건축공학 관련 학과가 상위권에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단기간 내에는 안 되나 시간이 지나가면 점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일자리에 대한 지역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국가가 지역단위의 소멸을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은 무책임한 일입니다. 어떻게든 고민하고 같이 풀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국가가 보여줘야 합니다.

반상진 국가 균형발전의 미션과 기능이 있고, 위원장님의 아젠다가 있을 텐데, 균형발전에서 가장 필요한 미션은 무엇일까요?

김사열 지역에 좋은 일자리와, 좋은 인재가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선순환되기 위해서는 아직 시도하지는 않았지만, 지역에 기업이 가도록 해야 합니다.

최근의 보고서를 보면 스위스, 이스라엘 등에서는 일시적인 혜택이 아니라 항구적으로 수도권에서 멀리 갈수록 법인세를 낮춰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수도권에 유리한 조건이 많은데, 반대로 해서 민간기업이 지역에 가도록 해야 합니다. 또, 농산어촌에서도 농사만이 아니라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농촌재생,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의 성공사례로 고민하고 실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학부모에게 일자리와 집을 줬더니, 즉 공유주택 15채를 지어 입주시키고, 에디슨모터스라는 자동차 부품회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더니, 함양에 있는 서하초등학교 학생 10명 모집에 200명이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시골학교 단위로 이주할 때 물론 농사짓기를 바라는 부모도 있지만, 학부모들 모두가 농사짓기를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농촌에 다른 일자리도 줘야 합니다.

반상진 지역소멸 관련 마을 재생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연구하다 보니 하나의 요인이 아니라, 정주할 수 있는 핵심요인은 일자리, 교육, 문화 등 인프라 3가지입니다. 일해서 돈을 벌고, 교육, 문화 등의 인프라가 복합형 패키지로 가야 합니다.

혁신도시 진천의 예를 들면 일자리는 문제없으나, 정주하기 위한 인프라, 문화, 보건·의료 등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패키지지화하지 않고 하나씩 가면 추진이 느려지게 마련입니다.

김사열 정책 사업을 위해서는 패키지형, SOC 복합형 사업을 해야 하는데, 읍 단위에 각각 지으면 관리 유지가 안 됩니다. 각각의 부처가 체육시설, 육아시설, 요양원을 짓는데, 한 건물에 짓게 하는 것도 좋고, 그 도시, 그 지역이 필요로 하는 것을 다르게 지어야 합니다.

“ 국가 균형발전에는 한 가지 문제만이 아니라
복합적인 여러 문제가 얽혀 있어 ”

“ 균형위에 문제제기를 해주시면 공론화하고
해결책을 함께 모색할 수 있어 ”

반상진 진천의 경우도, 패키지형으로 볼 때 정책 추진의 미스매칭 현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혁신도시 지역 인구가 2만 명이 늘어나면, 고등학교도 늘어나야 하는데, 현재 진천에 서전고등학교 하나가 있습니다. 혁신도시 인구가 늘어나면 음성에도 고등학교가 필요한데, 학령인구, 학생 수 감소 시대라 하여 교육부는 학교설립에 미온적입니다.

김사열 그런 문제들은 디테일하게 접근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지역에서는 조건이 안 되어 사업 신청을 안 하고, 교육부는 신청을 안 하니 해결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는 의원발의로 문제를 풀 수도 있습니다. 국가 균형발전에는 한 가지 문제만이 아니라 복합적인 여러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부처들이 한 가지 문제는 해결해도 복합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는데, 여러 기관에서 와 있으니, 균형위에 문제제기를 해주시면 다 풀지는 못하더라도 공론화하고 해결책을 함께 모색할 수는 있지 않을까 합니다.

반상진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한 교육에 관하여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실효성 여부 등을 따져보고,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유관기관끼리 심층적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농촌연구와 농촌유토피아 사업, 마을재생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협동연구를 하고, 지역살리기 프로젝트로는 죽어가는 마을 살리기 운동과 관련하여 실험적으로 변화 마을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한 지역에서 실제 파일럿 리서치를 해보면 어떨까요?

김사열 균형위에서는 3월 본회의에 농산어촌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특별한 일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지정해서 구상하고 있는데, 서하초등학교 외에도 전라도, 경상도의 4개 지역 학교가 모두 신청했어요. 균형위의 국가단위 과제로 하려고 하는데 국토부, 농림식품부도 참여합니다. 지역에 기본적으로 좋은 집을 지어주는 거죠. 공유형 집을 짓기 때문에 군에서 땅과 5~7억 예산을 주고, 조직은 중하순에 시작하여, 그 문제를 적절히 풀어가려 합니다.

그동안 수도권, 비수도권, 광역단위의 불균형 시정에 관심이 많았으나 사람들의 공감대가 커져서 이제는 시군구 단위로 진화를 했습니다. 미래형으로 있던 농산어촌 유토피아 프로젝트도 이제는 진행하려 합니다. 먼 단위에서부터 살려야 하고, 교육에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에 국가가 책무를 가져야 합니다. 같이 해주시는 분들이 많고, 또 특위가 상당히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프로젝트에서 교육이 중요한 공동체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면 요청하겠습니다.

반상진 위원장님께서도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 전문위원도 역임하셨지만, 김대중 대통령 시절 교육인적자원정책 위원회 상임위원을 3년 동안 했던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지역의 문제, 인프라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 관련 이야기도 했지만, 김대중 대통령께서 특히 지역도서관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문해 능력 향상 등을 위해 지역주민에게 도서관 활성화 사업도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했는데, 그때 아이디어로 도출된 것이 문화방송과 연결하여 '농촌 도서관 살리기'를 예능 프로그램(MBC <느낌표>의 '책책책 책을 읽읍시다!코너) 형태로 풀어나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역 1호로 순천에 도서관 짓기를 시작으로 지자체에서 도서관 짓는 붐을 조성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딱딱한 뉴스보다는 지역 살리기를 엔터테인먼트와 연동하여 국민들에게 홍보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유주택 프로젝트를 국민들에게 알려주면 관심 있어 하면서 시너지 효과가 클 것 같습니다.

김사열 네, 좋은 의견입니다. 무브먼트로 접근하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농산어촌 유토피아 프로젝트를 관 주도로 하는 것은 장점도 있지만 예산 효율의 문제, 자율성, 역동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의 재판이라는 비난도 받을 수 있고요. 반드시 민간의 기구가 같이 끌고 가야 하고, 자율적으로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토지주택공사에서 셰어하우스로 지어 낮은 가격에 임대하고 도시농업 하는 친구들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살다가 떠날 수 있도록 장기간 낮은 가격에 빌릴 수 있도록 풀어가면서 접근하면 부동산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반상진 끝으로, 연구회 소속 26개 국책연구기관 중 49년의 역사를 가진 대표적 교육정책 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의 바람직한 역할, 또는 앞으로 한국교육개발원에 바라는 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김사열 국가경쟁력은 한마디로 말해서 머리싸움입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선진국이 되려면, 공유되는 지식의 양이 많아야 하는데, 그 지식이란 것도 기존에 있던 지식만으로는 안 됩니다. 남의 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이 필요하고, 결국은 그 새로운 지식이 만들어내는 공적가치가 중요합니다.

연구집단을 크게 하는 정책이 국가 전체적으로 채택이 되어야 하고, 지식인 집단이 커야 새로운 지식을 만들고 많은 양의 지식이 생산될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하게 하려면 현재의 2배 정도의 규모와 인원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교육에서도 교육 정책 연구가 아주 중요한데, 그러려면 연구진이 많아야 합니다.

교육에 대한 사회의 다양한 요구가 있고, 고등 분야와 유·초·중등 분야가 다르고, 다양한 집단과 계층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 연구하는 집단이 많아야 하고, 연구를 잘하려면 그 인원 수를 늘려야 합니다.

현재 한국교육개발원의 인원이 500명 정도라고 하는데, 2배인 1,000명 정도는 있어야 국가의 교육정책 연구가 제대로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 연구에 전력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고, 건강한 집단을 만들려면 연구직을 정규직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가 인색한데,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대박 연구가 나올 수 있고, 새로운 시대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데, 한국교육개발원이 그 역할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 지식인 집단이 커야 새로운 지식을 만들고 많은 양의 지식이 생산될 것 ❀

❀ 현재의 2배 정도의 규모와 인원이 되어야 하고, 연구에 전력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줘야 ❀



Profile

김 사 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2020 ~ 현재)
- 경북대학교 생명과학부 교수(2007 ~ 현재)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객원선임연구원(1996 ~ 1998)
- 미국 일리노이대학교 연구조교수(1993 ~ 1996)
- 코펜하겐대학교 대학원 분자생물학 박사





특별기획

재난 경험으로 다시 따져본 교육소외와 교육의 본질

최원형(한겨레신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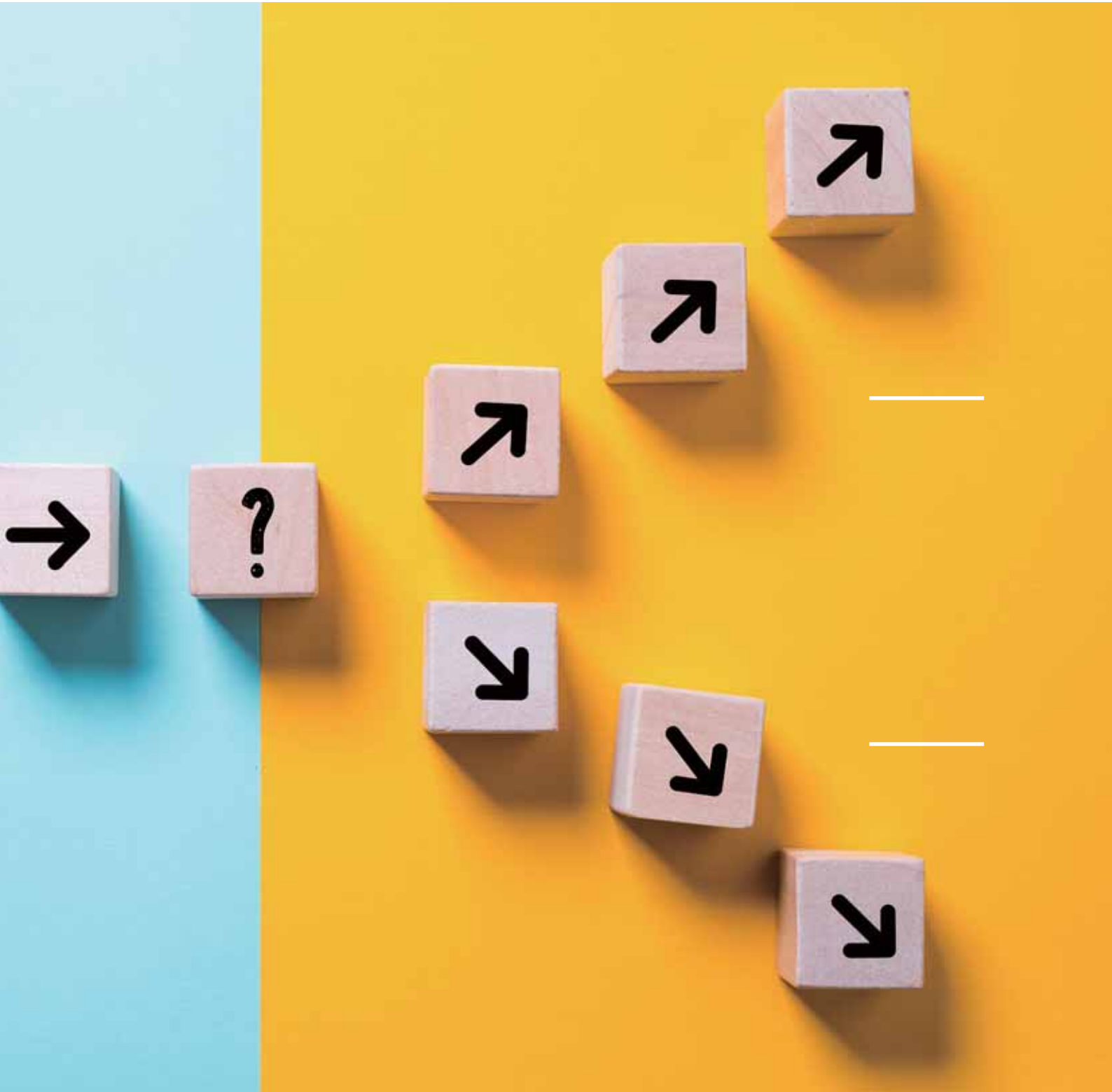
팬데믹 극복을 위한 교육복지 방향과 실천 시나리오

김경애(한국교육개발원 교육복지연구실장)

언택트 사회의 평생교육

변종임(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민학습참여진흥본부장)





재난 경험으로 다시 따져본 교육소외와 교육의 본질

최원형(한겨레신문 기자)



2020년 시작된 코로나19 유행이 교육 현장에 가져다준 혼란과 충격의 궁극적인 실체는 ‘학교의 빈자리’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 감염병 확산 우려에 따라 학교가 문을 닫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리자, 이전까지는 막연하지만 그저 당연하게만 인식됐던 학교의 존재 자체가 새삼스러운 질문의 대상이 된 것이다. 공교육은 왜 반드시 학교라는 공간에서 이뤄져야 할까? 원격으로도 가능하다면 학교는 더이상 필요하지 않은 걸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라는 물리적 공간이 꼭 필요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여태까지 학교는 그 존재의 이유를 입증할 수 있도록 제대로 운영되어 왔던 걸까? 비록 재난은 가혹하지만, 이처럼 꼬리를 무는 질문들을 불러내어 현재를 점검하고 미래를 대비하게 만든다. 특히 ‘교육소외’는 코로나19가 우리 사회 교육 문제와 관련해 던진,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고민거리 가운데 하나로 꼽을 수 있다.

— 교육소외의 의미

근대적인 의미에서 학교는 대체로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공교육, 곧 사회화를 담당하는 핵심 기관이자 제도 정도로 여겨진다. 여기서 중요한 대목은, 계획적·조직적·계속적인 교육을 위해 일정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되 “기본적이고 일상적인 생활

단위와는 전혀 별개로”(<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구축해야 한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유예’(suspension)라는 말로 이를 표현하기도 한다. 거칠게 말해, 각 개인의 사회·경제·문화적 위상에 따른 차이들의 발현을 억눌러 최대한 모든 구성원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통합하는 것이 근대 학교의 핵심 이상이다. 이 때문에 일단 학교라는 문턱을 넘어서면, 부잣집 아이도 가난한 집 아이도, 머리가 좋거나 그렇지 않은 아이도, 몸이 튼튼하거나 그렇지 못한 아이도, 국가는 모두가 동일한 환경에서 동일한 교육 기회를 누리게 해주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소외’(alienation)는 사회 구성원이 공동체에 적절하게 통합되지 못할 때 겪는 현상이다. <교육학용어사전>(서울대 교육연구소 편)에선 “개인이 그가 속해있는 사회와의 관계에서 통합되지 못하거나 거리가 있는 상태”라고 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개인이 학교에서 이뤄지는 교육 활동을 제대로 누리지 못할 경우 ‘교육소외’ 현상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사회가 동일하게 제공하는 교육 기회를 다른 이들과 같은 수준으로 보장받지 못하면, 그 개인은 자신의 잠재 능력을 제대로 계발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그 사회와 적절히 어울리는 방법까지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교육소외는 다양한 이유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부족한 교육 투자나 입시 위주의 교육 환경 등 구조적인 요인들이 교육소외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학생의 게으름이나 교사의 무관심 등 좀 더 개인적인 요인들도 교육소외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 때문에 교육소외는 학습 부진, 학력 격차, 교육 불평등 등 교육과 관련해 개인 또는 집단이 다양한 이유로 ‘결손’을 경험하고 이에 따라 ‘격차’가 발생하는 현상들 전반에 드리워져 있다.

다만 국가는 무엇보다 자신이 약속했던 학교의 이상, 곧 적어도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는 모든 학생이 동일한 환경에서 동일한 기회를 누리게 해주겠다는 약속이 실패하는 데에 따라 나타나는 교육소외 현상에 가장 큰 관심을 쏟을 수밖에 없다.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이라서 다른 학생들과 동일한 교육 기회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학교라는 시스템이 각 구성원의 사회·경제·문화적 배경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를 신경 쓴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그동안 정부는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가정 학생, 특수교육 대상자 등 사회경제적 배경을 이유로 교육소외를 겪을 확률이 높은 구성원들을 ‘교육소외층’이라 부르고,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동원해 이들을 지원하는 데 힘을 쏟아왔다. 계획적·조직적·계속적 사회화, 곧 교육의 실패는 공동체 자체의 실패와 다르없기 때문이다.

—— 재난을 맞아 심화·확대된 교육소외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재난을 맞이해, 교육소외 현상은 한편으론 심화되고 한편으론 확대됐다고 할 수 있다. 감염병 유행 위험으로 학교의 문을 닫는 대신 정부는 비대면으로 원격수업을 진행하는 등 “배움이 끊기지 않게” 하는 데 나섰다. 그러나 장애학생, 저소득층·다문화가정 학생 등 재난 이전에도 교육소외를 경험할 확률이 컸던 이른바 ‘취약 계층’ 학생들에게, 이런 조처는 가뜩이나 취약했던 환경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 수밖에 없었다. 예컨대 장애학생에겐 수어나 자막, 음성자료 등도 갖춰지지 못한 원격수업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었다. 다문화가정의 경우 원격수업과 관련한 학교의 상세한 안내가 부모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일도 많았다. 저소득층 가정 학생들은 학교에서 진행했던 다양한 프로그램들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이들에게 학교는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의 주된 창구였는데, 학교가 문을 닫으니 더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한마디로 재난이 기존 취약 계층의 교육소외를 더욱 ‘심화’시킨 셈이다.

그렇다고 재난의 영향이 단지 취약 계층에만 집중됐던 것은 아니다. 특정 집단으로 유형화하기 어려운 학생들 역시 여러 가지 이유로 교육소외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코로나19는 교육소외를 ‘확대’하기도 했다. 코로나19 유행 시기 동안 여러 교사와 교육복지사들은 “그동안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소외 학생들을 새롭게 발견했다”고 이야기한다. 비록 교육 급여를 받는 등 ‘교육소외층’으로 분류되진 않지만, 생각보다도 많은 학생들이 다양한 이유로 학교의 빈자리에 고통받고 있고, 또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더라는 얘기다. 학교가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에 주로 기대어왔다가 갑작스럽게 ‘돌봄 공백’을 견뎌야 했던 ‘중산층 맞벌이 가정’이 대표적이다. 디지털 활용 능력이 떨어지거나 옆에서 도와주는 어른이 없어 원격수업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도 있었다.

학교와 교육의 본질에 대해 새로운 질문거리가 던져지기도 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학교 문을 처음 닫았을 때, 학교 현장에서 제기된 우려는 주로 ‘학습’과 ‘돌봄’ 영역에서 발생할 결손과 격차에 집중됐다. 거칠게 말하자면, ‘학교 말고 마땅히 아이를 맡길 곳이 없다’는 것과 ‘원격수업 때문에 아이들이 공부를 제대로 안 할 것’이라는 우려가 우선이었다. 지식전달과 평가, 그리고 타아를 학교의 주된 기능으로 인식했던 셈이다.

그러나 감염병 유행이 1년 이상 장기화되면서, 학교의 빈자리는 당초 이런 우려보다 훨씬 더 광범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학습과 돌봄뿐 아니라 일상생활과 건강, 관계, 정서 등 종합적인 차원에서까지 학생들이 겪는 결손과 격차가 확인되기 시작한 것이다. 결식을 하거나 패스트푸드로 식사를 때우지만 운동은 거의 하지 않는 등 신체적 성장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다른 이들과의 소통이 거의 없어 정서적으로 위기에 빠지는 학생도 나타났다. 저학년 학생에 대해서는 ‘발달 격차’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예년에 견줘볼 때 학교 내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줄어드는 등 어려움에 처한 학생을 발견하기 더 어려워졌는데, 극단적 선택과 시도는 되레 더욱 늘어났다는 진단도 있었다.

코로나19가 교육소외를 어떻게 심화시키고 확대시켰는지는 여러 언론의 보도와 연구기관들의 연구 등으로도 그 실태가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코로나19 확산 시기, 불리한 학생들의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2020), 경기도교육연구원 ‘코로나19와 교육-학교 구성원의 생활과 인식을 중심으로’(2020) 등을 대표적인 연구 결과로 꼽을 수 있다. 이런 결과들은 가정의 사회·경제·문화적 배경의 격차가 교육소외의 핵심이며, 재난 상황은 이 격차를 좁혀주는 기능을 해온 학교로 하여금 문을 닫도록 강제함으로써 다시금 교육소외를 심화하고 더욱 확대한다는 사실을 공통적으로 확인해준다. 그렇다면 재난 상황에서 심화되고 확대된 교육소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무엇보다 학교가 예전처럼 제 기능을 다하도록 만드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다. 학교 문을 다시 여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뜻이다. 코로나19 2년차에 접어들어 정부가 “철저한 방역을 전제로 등교수업을 더 확대하겠다”고 결정한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 교육소외의 반대가 교육의 본질

그러나 그저 예전처럼 되돌아가는 것은 전진도, 제자리걸음도 아닌 후퇴가 된다. 또 재난 이전에 학교가 개인의 사회·경제·문화적 배경을 좁혀주는 기능을 과연 얼마나 충실히 해왔는지도 따져볼 일이다. 학교 문이 열려있을 때에도 교육소외, 교육 불평등은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확대해오지 않았던가? 예전 모습의 교육과 학교로, 과연 재난 이후에 더욱 크게 벌어진 상처들을 치료할 수 있을 것인가? 코로나19가 단지 가혹했던 경험으로만 머물지 않도록 하려면, 몇 가지 의문들을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먼저 그동안 우리 사회가 추구해왔던 ‘교육 복지’의 방향에 대해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재난 경험은 학교가 단지 좁은 의미의 ‘학습’만을 맡고 있을 뿐 아니라 종합적인 의미의 교육 복지를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웠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사회의 교육 복지 정책은 특정한 취약 계층을 상징하고 이들에게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채워주는 방식의 ‘결핍모델’을 중심으로 삼아왔다. 예컨대 교육부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교육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의 자녀, 한부모가족 자녀, 다문화가족 자녀, 특수교육 대상자 등 취약 계층 학생을 선별해 지원 대상으로 삼는 식이다. 코로나19 시기에도 국가는 이런 기조를 바탕으로 삼아 꾸준히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그러나 실제로 현장에서 발생한 교육소외는 대상과 원인 등 모든 측면에서 과거의 결핍모델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 학교가 기능을 멈추자, 특정 집단으로 고정되지 않는 광범위한 교육소외층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한 교육복지사는 “모든 학생이 교육 복지의 대상, 곧 누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든 파악해서 지원해준다고 생각해야만 대응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해오던 것이 이른바 ‘선별 복지’였다면, 재난 상황에서의 경험은 자연스럽게 ‘보편 복지’를 추구하고 있다.

교육 복지를 단지 학교에만 맡겨놓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코로나19를 겪으며 우리 사회 안에서 학교만큼 안전한 곳이 없다는 것이 다시 확인됐다. 교육이라는 특별한 소임을 위해 적용한 ‘유예’, 곧 학교에서는 각 개인의 사회·경제·문화적 배경에 따른 차이들이 드러나지 않도록 만든다는 원칙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를 거꾸로 말하면, 학교 밖에는 학교와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얘기가 된다. 학교가 문을 닫는 상황이 더욱 충격적이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교육과 복지가 점점 서로 얽혀가는 만큼 여태까지 해왔듯 그저 학교에 모든 걸 떠넘길 것이 아니라 지역 사회 등에서도 교육 복지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자원을 새롭게 개발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의 본질에 대한 성찰이다. 그동안 교육은 지식의 전달과 평가라는 협소한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재난이 터지자마자 많은 학생과 학부모, 교육당국이 가장 크게 관심을 가졌던 것 역시 이 대목이었다. 그러나 학교의 빈자리에 따라 발생한 결손과 격차는 단지 학습이라는 틀에만 머물지 않았다. 일상생활, 관계, 소통, 정서 등 너무나 종합적인 영역에서 결손과 격차가 발생했기에, 이를 제대로 가리킬 만한 말을 찾지 못했을 정도다. 그나마 교육이 원치 어렵듯하게 짐작하게 해줄 만한 단어들을 꼽아본다면, ‘소외’라는 말의 반대편에 있는 말들이 될 것이다. 가혹했던 재난의 경험이, 앞으로 관계, 소통, 어울림, 공동체 같은 가치들을 다시금 교육의 핵심에 되돌려놓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한다. 🌱



팬데믹 극복을 위한 교육복지 방향과 실천 시나리오¹⁾

김경애(한국교육개발원 교육복지연구실장)



— 코로나19가 교육복지에 가한 충격

코로나19는 자연스러운 일상의 방식들에 제동을 걸었다. 거기에는 교육복지 실천도 포함된다. 그동안 우리가 쌓아온 교육 복지 접근법은 ‘더불어 잘 사는 방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지역의 공동체 문화 가운데 ‘확장된 가족 구조’ 속에서 자주 접촉하면서 삶을 나누는 방식(Gladwell, 2009)을 통해 교훈을 얻기도 했고, 폭염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도 지역 구성원들이 자연스럽게 교류하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Klinenberg, 2019: 11)에서도 시사점을 얻었다. 경험적으로도 이웃의 지지와 도움 가운데 연대하여 살아가는 것이 취약한 집단에게 필수적임을 깨닫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역사회에서의 연대와 네트워크가 중추가 된 지역교육복지공동체를 교육복지의 실천방식으로 삼아 왔다(김정원 외, 2008; 류방란 외, 2013; 이혜영 외, 2011). 그런데 코로나19는 다른 어려움이나 재난과는 성격이 달랐다. 감염병 시대에는 접촉을 피하고 거리를 두는 것이 새로운 생존 방식이 되었다. 그래서 다각도의 접촉과 만남을 전제로 한 기존의 교육복지 체제는 작동할 수 없었다.

1) 본 원고는 [김경애 외(2020). 코로나19 확산시기, 불리한 학생들의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한국교육개발원의 일부를 발췌하여 본 원고의 취지와 양식에 맞게 재구성하였다.

—— 위기 극복을 위한 전환점에서도 중요한 교육복지 가치

감염병 위기는 교육복지에 있어서 새 길을 찾게 한다. 제라드 다이아몬드(Jared Diamond, 2019: 21)에 의하면 ‘위기’의 그리스어 어원에는 ‘중대한 고비’, ‘결정적 순간’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는 곧 이전과 이후가 크게 달라진다는 ‘전환점’ 혹은 ‘분기점’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전환점을 돌 때에는 어떠한 핵심가치를 가지고 얼마나 유연하게 대응하는가에 따라 이후의 삶이 달라진다. 교육복지 분야 역시 어떤 핵심 가치로 어떤 대응방식을 찾을지를 고민할 때다.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새로운 정상성’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경제적 기준 중심의 선진국에 대한 판단에 물음표를 찍으면서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는 연대, 배려, 투명성, 공유성, 비차별성 등이 확보된 사회적 가치를 안고 있는 공동체(김경애 외, 2020)를 꿈꾸게도 한다. 교육은 원래 미래세대가 살아갈 세상에 대해 꿈꾸는 바탕 위에서 이루어져 왔다. 그래서 ‘더 나은 삶’에 대한 고민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지금은 재난의 직격탄을 맞은 아픈 사람이 너무나 많아졌다. 개인이 겪은 사회경제적 상처를 어루만져 주면서 다시 지지와 연대 속에서 일어서고 희망도 발견할 수 있게 해주는 섹터로서 교육을 다시 보게 된다.

교육복지의 가치는 변하지 않았다. 교육복지의 접근은 “주변의 어려운 이웃도 나와 같은 인간적 존엄과 품위를 유지하며 살아가도록 만드는 공동선의 문제”로 이루어져 왔으며 “우리 모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에 대한 상호 인정과 관심의 문제”에 초점을 두어 왔다(김경애 외, 2011: 21). 이러한 교육복지의 가치는 재난의 불평등 시대에 더욱 강조해야 할 사회적 가치가 되었다.

반면 대응방식에 있어서는 새로운 접근이 요청된다. 이하 3가지 방향을 제시한다.

교육복지 방향 1. 교육복지를 넘어 학습생활복지²⁾로의 확대

교육복지의 핵심은 개인이 가진 배경이 어떠한 교육의 장면에서는 평등하게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데 있다. 사실 이는 공교육의 탄생 원리이기도 하다. “보편성, 평등성, 의무성, 무상성, 전문성 등의 공교육 이념”(나병현, 2001)이 교육 체계 안에서 충분히 작동하면 별도의 교육복지는 필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 개념이 다분히 물리적 공간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즉 주로 학교라는 공간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보장되어야 할 것을 다루었다. 그런데 2020년, 학생들에게 있어 원격수업 비중이 커졌다. 원격수업에서 학습의 주도권은 학생이 친다. 이제 학생이 있는 ‘지금, 여기’가 학습터가 되었다. 지역 내 다양한 공간, 즉 주민센터, 공원, 운동장, 카페, 교실, 도서관, 문화센터, 산책로 등의 한 칸이 바로 학습 공간이 된다. 이에 기존에 교육 상황에서 적용되던 형평성의 원칙들이 언제 어디서나 학습생활을 하는 과정에도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되었다. 그런 차원에서 기존의 교육복지를 ‘학습생활복지’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교육복지 실천에 있어서 학생의 필요에 맞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제공하던 기존 방식의 비중을 줄이면서 학생들이 주도성을 발휘하는 방식의 비중을 획기적으로 늘려가야 한다. 은유적으로 표현하면 그동안 영양사가 완벽하게 맞추어놓은 식단을 제공하는 ‘급식실’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일부를 선택해서 먹을 수 있도록 하는 ‘뷔페’도 넘어서서 스스로 자신이 원하는 음식을 구상하여 조리해볼 수 있는 ‘부엌’을 만들어주는 일에 힘써야 할 것이다.

2) 간단하게 ‘학습복지’라고 할 수도 있으나 아직 ‘학습’을 인지적 지식 습득 등의 상당히 좁은 의미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기에 ‘학습생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기존의 교수학습 측면보다도 넓은 범위에서 일상생활 가운데 이루어지는 학습의 측면까지 아우른다는 점, 그리고 학생의 학습 주도성을 부각하고자 한다.

교육복지 방향 2. 불리한 학생들을 위한 디지털 학습 관계 구안

초연결사회, 4차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등의 용어가 코로나19와 함께 일상 속으로 한꺼번에 들어왔다. 그 일상 중에는 교육도 포함된다. 이제 학생들의 생활이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결합된 '디지털그형'으로 변화되었다. 이들이 성인이 되어 일하는 방식도 하이브리드형이 될 것이다. 이 상황에서 제기되는 질문은 어떻게 학생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오가는 가운데, 각 플랫폼의 장점들을 결합하여 누리면서 학습을 만끽하도록 할 것인가에 있다.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겠지만 교육복지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중 하나는 학습관계망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이다. 우선 이전과 달라진 점은 초연결 시대에 학생들이 학습과정에서 전 세계 네트워크를 타고 다양한 학습자원에 접속하면서 폭넓은 학습관계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펼쳐진 자원들을 누릴 수 있는 정도에 따라서 또 다른 유불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 하지만 또 다른 축으로 곁에서 늘 자신을 지켜보면서 지지해주는 강한 연대감으로 뭉친 학습공동체가 필요하다. 그 안에서 비로소 소속감을 가지면서 자기 정체성도 만들어갈 수 있다. 이처럼 디지털 시대 학습관계로는 1) 느슨한 연결의 학습네트워크망과 2) 강력한 연대의 학습공동체의 양축이 두 개의 날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복지 방향 3. 학교, 가정, 지역사회 역할 재구성

감염병 위기를 통해 취약집단 학생들에게 학교의 의미가 얼마나 컸는지가 드러났다. 학교가 규칙적인 리듬 가운데 하루 일과를 보내면서 식사도 하고 신체 활동도 하면서 친구들과 관계를 형성하게 했다. 취약집단 학생들은 학교를 중심으로 각종 체험과 다양한 분야의 어른들을 만날 기회를 가졌으며 새로운 문화예술 분야 기술을 익힐 수도 있었다.

학교가 문을 닫고 최소한의 기능만 유지하게 되면서 그 기능 중 일부가 지역사회로 분산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 제기되었다. 기능의 분산을 통해서 위험을 분산할 수 있으며 동시에 학생들에게는 최대한의 안전하고도 질 높은 성장 여건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의 역할에 있어서 교육뿐 아니라 돌봄, 안전, 건강 보장 등도 중요하다고 해서 학생에 관한 모든 것을 학교에만 맡겨 두면 된다는 것은 아닐 것이다. 지역의 청소년, 복지, 문화예술 등의 다양한 공적 체계들이 평상시에 아동·청소년의 성장에서 담당하는 역할을 강화하고 감염병 위기 시에도 그 연장선상에서 자기 역할을 해내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일반자치와 교육자치 간의 밀접한 연계 협력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해 준다. 지자체 역할이 돋보였던 재난의 시기였다. 그 역할 안에 이제는 학생 주민, 청소년 주민을 위한 고민이 깊숙이 자리해야 할 것이다.



— 교육복지 실천 시나리오

위기의 순간에 필요한 것은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일을 고안해서 유연하게 시도하는 것이었다. 특히 인프라와 예산 등 하드웨어를 마련하는 차원보다는 학생 한명 한명에게 유의미하게 다가가는 소프트웨어적 접근이 필요한 때에는 정부 부처가 특정 정책을 추진하기보다는 현장에서 시도하는 일에 장애가 되는 부분을 걷어주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 이런 뜻에서 학교 수준과 지역 수준에서 1) 즉시적으로 필요한 긴급조치, 2) 중장기적 위기 극복 및 포스트코로나 대응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나의 시나리오처럼 제시하면 아래 표와 같다.

• <표> 실천 시나리오 개요 •

구분	학교 체계	지역 체계
코로나19 상황에서의 긴급조치 및 다음 위기 상황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고등학교 교사의 소규모 학생 대면 활동 확대 • 학습 꾸러미 제공 시 안내 동영상 함께 제공 • 학교 및 지역 공공기관에서 소규모 학습터 운영 • 교육과정 대강화 및 비상 시 교육과정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급식실이 학생 급식 허브 역할 수행 • 재난 시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비상 조직 및 역할 마련 • 분산형 소규모 사회적 가족 거점들 확보 • 코로나19로 위험도가 높아진 건강 점검을 위한 건강 검진 실시 •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생에 대한 공적 지원 • 저소득층 학부모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스마트폰 및 데이터 지원 • 방문 교육 서비스 구조화 체계 마련 • 비상 시 단계별 사회적 교육 및 돌봄 체계 마련 • 지역형 위기 대응 학습생활복지 체제 모형 개발
위기 극복 및 포스트코로나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면 및 원격수업에서 협력교사제 운영 •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15명 배치 • 중·고등학교 전 교사 담임제 시행 및 부담임 역할 강화 • 학교에서 취약집단 학생들 입장에 선 의사결정 • 학생의 주도적 학습 역량과 습관을 키우기 위한 노력 강화 • 학교에서 뒤쳐진 학생들을 면밀히 지도하는 역할 강화 • 기초 학력에 대한 학교와 학생의 책임과 참여 확대 • 초등 고학년과 중학생의 진로 준비 지원을 위한 국내외 자원 활용 • 다문화 배경 학생들을 위한 온라인 수업, 학습 자료 등에서 언어적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지원청을 ‘학생성장지원청’으로 역할 변경 • 교육지원청(학생성장지원청) 주관, 학교와 지역사회 기관 간 기초역량 협력체제 운영 • 타 부처 연계를 통한 취약집단 부모 교육 확대 • 청년 일자리 및 대학생 봉사나 인턴십 연계를 통한 학생 멘토링 확대 • 지자체에서 가족 접근을 통해서 아동·청소년 학습생활복지 지원 • 재난 시 작동하는 ‘슬세권’ 복합센터 운영: 돌봄 체계와 평생학습 체계의 결합 • 각종 사회인프라를 질 높은 학습 환경이 되도록 견인하고 위기 시 소규모 학습터 및 긴급돌봄센터로 운영 • 아동·청소년을 위한 ‘학습정보온라인플랫폼’ 운영 • 사회적 자산 형성을 통한 도약 단계 지원 • 다문화 배경 학부모를 위한 다국어 SOS 콜센터 운영 • 아동·청소년 성장 지원을 위한 일반자치와 교육자치 통합 중간 조직 운영 • 아동·청소년 성장 지원을 위한 학교와 지역사회 간 역할 균형 모색 • 학교 밖 청소년 학습비 지원

2020년이 지나고 2021년을 맞이했지만 여전히 긴급조치도 필요하고 포스트코로나를 위한 준비도 필요한 때다. 위 시나리오는 각 지역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실천 방식을 만들 때 참조할 수 있는 아이디어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김경애·김진숙·박성철·박희진·손찬희·양희준·이상은·정바울·최수진(2020). 코로나 시대, 학교의 재탄생. 학이시습.
 김경애·류방란·이은미·강영혜·김민희(2011). 현장 중심의 자율적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추진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김경애·유예림·이성화·한효정·김민정·김민희·임은미(2020). 코로나19 확산시기, 불리한학생들의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한국교육개발원
 김정원·이은미·서덕희·김경애·박인심·이경아·양병찬·김병욱·이석주(2008). 교육복지사업 발전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나병현(2001). 학교교육의 위기와 공교육 이념의 재검토. 아시아교육연구, 2(2), 139-159.
 류방란·김경애·김성식·이윤미·정연순(2013). 교육공동체를 지향하는 교육복지의 발전 과제. 한국교육개발원.
 이해영·류방란·김경애·김경희·김민희(2011). 교육복지 통합적 지원체제 구축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Diamond, J. (2019). 대변동: 위기, 선택, 변화. (강주헌 역). 김영사.
 Gladwell, M. (2009). 아웃라이어: 성공의 기회를 발견한 사람들. (노정태 역). 김영사.
 Klinenberg, E. (2019). 도시는 어떻게 삶을 바꾸는가: 불평등과 고립을 넘어서는 연결망의 힘. (서종민 역). 웅진지식하우스.



언택트 사회의 평생교육

변종임(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민학습참여진흥본부장)



— 들어가는 글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을 바꾸었다. 사람들 간의 만남을 제한함으로써 평생교육 현장에서는 멈춤과 기다림을 반복하게 되었다. 대부분의 성인들은 대면 학습을 선호한다. 그렇기에 많은 영역에서 온라인 교육이 활성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 현장은 대면 학습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변화를 그리 반기워하지 않는 성인학습자들이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는 그동안 평생교육 현장에서 제한적이거나 보조적으로만 활용하였던 온라인 교육을 점점 더 수용적으로 활용하게 되었다. 평생교육 현장에도 새로운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포용국가를 지향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지금의 사회환경 변화로 인해 평생학습 현장에서 배제되어 가는 이들이 누구인지 돌아보고, 평생교육에서 포용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위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변화의 일상 속 평생교육의 변화를 살펴보고, 평생교육의 미래교육적 대응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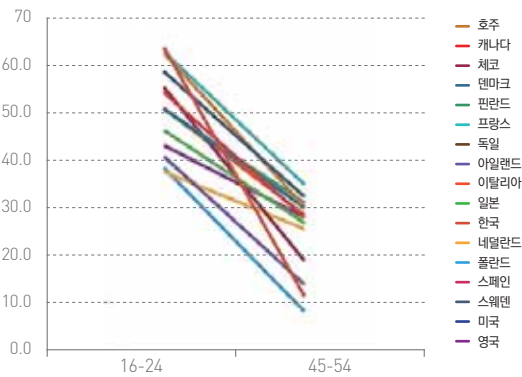
언택트 사회 무엇이 문제인가: 디지털 리터러시

세계 각국 정부마다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고자 사회적 거리두기를 추진함에 따라 언택트(untact)사회가 일상화되었다. 코로나19 위기는 전 지구적으로 퍼졌지만, 소득감소의 경제적 문제, 차별과 배제의 사회적 문제로 연결된 피해는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집중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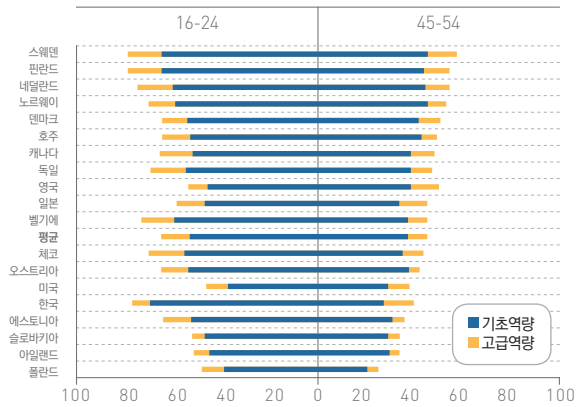
2020년 6월 세계은행이 제시한 뉴욕시 코로나19 확진 현황분석 자료에 따르면, 뉴욕에서 확진자가 집중된 곳은 인구 밀도가 높은 맨하탄이 아니라, 소득수준이 낮고 인프라가 열악한 웨스트퀸즈 지역이었다. 확진자 발생 건수는 지역별 밀도와는 관계가 명확치 않았던 반면, 소득수준과는 분명한 반비례 관계를 보였다(유네스코 뉴스, 2021.2.1). 또한 2020년 7월까지 토론토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인종과 민족 및 소득수준에 따라 분석한 그래프를 보면, 백인 및 고소득층일수록 유색인종 및 저소득층에 비해 인구 비율당 코로나19 발병 비율이 현저히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유네스코 뉴스, 2021.2.1). 이러한 데이터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에 의한 격차가 더욱 심화됨을 보여준다.

코로나19 팬데믹은 경제적 소외계층 뿐만 아니라, 디지털 소외계층에게도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온라인 플랫폼은 모든 일상의 '멈춤'으로부터 학습자들과 근로자들을 학교와 직장으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온라인으로 교육에 참여할 수 있거나 재택근무가 가능한 직업을 가진 사람은 상대적으로 충격을 덜 받으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더 큰 피해를 입는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는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를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

정보통신 기술 강대국인 대한민국의 국가 ICT 발전 정도는 상위에 해당하나, 연령별 ICT 활용 능력 격차는 아래 그림과 같이 매우 심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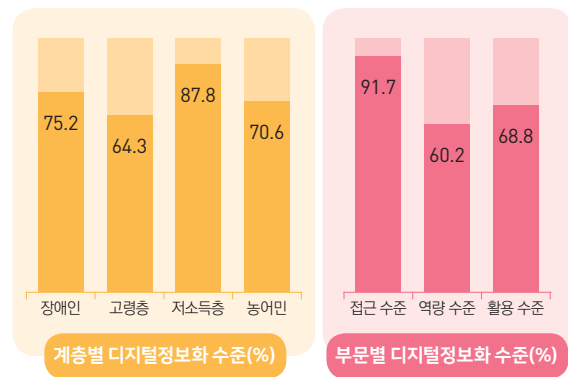
• [그림 1] ICT 활용 능력 국제비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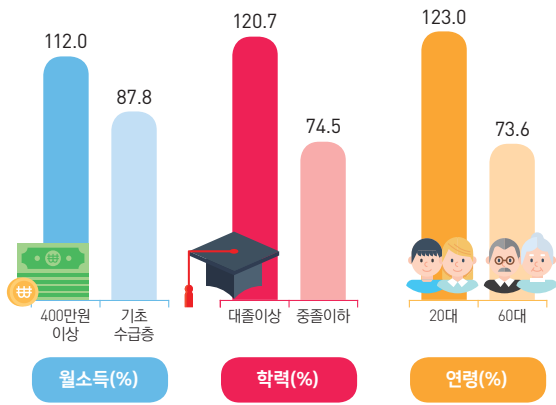
• [그림 2] 컴퓨터 활용 문제해결 능력 국제비교 •

※ 출처: OECD, Frey, Osborn & Holmes(2016). Technology at Work v2.0. Citi GPS.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일반 국민 대비 정보 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69.9%이며, 고령층의 역량 수준에서 가장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전반적으로 20-30대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가운데, 60-70대 이상에서 다른 연령대와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역별로 보면, '역량'과 '활용'수준에서 있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컴퓨터·모바일 기기 보유 및 인터넷 사용 가능 수준 관련 지표인 '접근' (91.7%)에 비해, 기본 이용 능력 관련 지표인 '역량'(60.2%)과 활용 정도 관련 지표인 '활용'(68.6%) 수준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월 소득과 학력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정보화 수준이 낮아 디지털 정보화 수준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심각함을 보여주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화진흥원, 2019).



• [그림 3] 계층별·부문별 디지털정보화 수준 •



• [그림 4] 월소득, 학력, 연령별 디지털능력 비교 •

※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2019).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 조사.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사회의 핵심 키워드가 ‘언택트’인 만큼 이러한 상황이 익숙하지 않은 학습자들을 도울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유네스코는 디지털 리터러시의 정의를 ‘디지털 미디어의 사용과 생산, 정보처리와 인출에 필요한 능력, 지식의 창조와 공유를 위한 사회적 네트워크, 그리고 직업생활에 필요한 광범위한 컴퓨팅 기술을 포함하는 기본 능력의 총체(UNESCO, 2011:1)’에서, ‘취업, 적절한 직업 및 기업을 정신을 위해 디지털 기술을 통하여 안전하고 적절하게 정보를 접근, 관리, 이해, 통합, 의사소통, 평가 및 생성할 수 있는 능력’으로 수정하였다(UNESCO, 2018:6). 이는 디지털 리터러시를 바라보는 유네스코의 관점이 디지털 정보처리와 인출과 같은 단편적인 대응에서 정보에 대한 안전, 접근, 관리, 의사소통과 평가에 이르는 다양하고 적극적인 입장으로 변화되었음을 의미한다(길혜지 외, 2018).

‘코로나19가 교육의 세계에 던지는 화두’에서 전)국가평생교육진흥원 윤여각 원장은 “익숙하지 않은 세대라 하여 유보해왔으나, 더 이상은 유보의 명분을 유지하기 어렵다. 피할 수 없는 대세라면 합리적으로 타당한 방식으로 준비해야 한다. 삶터 자체가 변하는 것이기에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생활 문해로 제공해야 한다. 누구도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학습자의 속도와 리듬을 존중하는 정책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윤여각, 2020). 디지털 리터러시는 이제 더 이상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국가적 어젠다가 되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개인의 정보기기 접근이나 정보 활용이 중요했다면, 코로나 19 이후의 디지털 리터러시는 언택트 사회를 살아가는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 전제가 된 것이다.

— 배제 없는 포용적 평생교육: 지역평생교육 로컬택트에서 해법 찾기

2020년 상반기, 코로나19로 대면 교육이 모두 멈추고, 개인중심의 생활 패턴이 만들어짐에 따라 공동체중심의 집합교육 위주인 평생교육 현장은 더욱 심한 타격을 입었다. 시·도평생교육진흥원과 평생학습 도시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지역 공동체를 기반으로 시민중심 평생교육이 활성화되던 시점에서, 평생교육 현장은 큰 혼란을 겪게 되었다.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의 경우를 예로 들면, 1만여 명의 학습자들이 학습권을 보장받지 못했으며, 1천여 명의 강사들도 생활고를 겪어야 했다. 전국적으로 평생교육에 참여하던 1천635만 명(2019년 기준)의 성인학습자들이 평생교육 현장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으며, 전 세계적으로 수억 명이 넘는 성인학습자들이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었다(금홍섭, 2020). 더욱이, 소외계층 평생교육의 대명사로 이야기 되는 문해교육의 현장을 들여다보면, 코로나19로 ‘고립된 학습자’, ‘빈약한 교육시설’, ‘부재한 자원’, ‘외로운 교수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이지혜, 2020). 그동안 소외계층 평생교육은 소통과 돌봄, 학습의 안전망의 역할을 해왔기에 그 충격은 더욱 컸다. 일반 평생교육은 지역사회 공동체 학습생태계를 조성해왔고, 문해교육은 교육의 안전망 역할을 해왔다.

코로나19로 대면이라는 노멀이 불가능해지자 언택트에서의 만남을 가능하게 하는 뉴노멀로서의 온라인 교육이 강조되었다. 많은 교육 기관에서 기존의 교육을 온라인으로 제작하기 시작했고, 유튜브는 더욱더 각광을 받게 되었다. 뉴노멀 시대 온라인 교육의 일상화는 단기적 상황이 아니라 새로운 정상성이 될 것이라 보고 있다(정민승, 2020). 교육현장에서는 다양한 공식적인 온라인 교육과 리소스들을 모바일과 데스크톱 플랫폼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 코스의 제공과 스스로 학습이 가능하게 하는 콘텐츠 제공을 통해 MOOC (Massive Open Online Course)와 OER(Open Education Resources) 제공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이를 활용하는데 기반이 되는 IT 연결성의 확보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보안 강화의 필요에 따라 정부 간, 커뮤니티 간 공감대가 더욱 확고해지게 되었다(한국연구재단, 2020).

그러나 평생교육 현장이 온라인 장비를 모두 갖추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에, 공공 온라인 채널이나 방송시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채널을 사용하고 있다. ZOOM이나 구글클래스룸을 활용하여 회의를 하고, 동영상 스트리밍이나 동영상 저장으로 콘텐츠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유튜브 채널을 사용하고 있다.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대전평생교육진흥원 등은 평생교육 콘텐츠를 직접 개발하여 제공하였다. 기존의 광역평생교육진흥원의 역할은 직접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보다는 시·군·구의 평생교육 지원과 네트워크 등 전반적인 관리와 지원 업무를 중심으로 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교육기관들의 멈춤이 반복되자, 자체 자원을 활용하여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하고 제공하는 역할로 전환하기 시작하였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1번가 유튜브 채널'은 평생교육을 전달하고 공유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식으로, 네트워크 기능뿐만 아니라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는 미디어 역할도 병행하고 있다.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은 기존에 구축해 놓은 스튜디오를 통해 평생교육 온라인 콘텐츠를 만들어 홈페이지에 탑재하던 방식을 활용하여 유튜브에 '대전시민대학 채널'을 별도로 개설하고 모든 평생학습 수요자들에게 개방하고 있다.

평생학습도시 은평구는 코로나19로 일상이 변화하면서, 수년간 지역 전체를 학습공간화하기 위해 추진해온 사업들을 온라인으로 전환하였다. 은평구 평생학습관은 평생학습 허브로서 학습관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학습리더를 위한 학습활동 플랫폼 역할을 강화하였다. 또한 학습자 대상 맞춤형 온·오프라인 학습 환경을 구축하여 콘텐츠를 개발하고, 특히 코로나 시대 기본소양으로서 시민교육 콘텐츠 개발을 강화하였다. 무엇보다도 지역주민들과 함께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위기를 전환하는 배움의 방법'이라는 주제의 포럼을 시작하였으며, 오프라인 교육이 자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온라인과 병행하거나 온라인 지원을 받으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특히 문해교육의 특성상 온라인 수업방식이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글이)평생 좋은 날'로 브랜드화하여 늘 배움 학교 온라인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문해교육 네트워크 구축, 문해교육 교수법 강의, 문해 교사 이야기 공유 등을 추진하였다. 은평우리동네배움터를 운영하여 콘텐츠를 실시간 온라인 강의로 제공하기 위한 전문가 육성을 통해 동네배움터 학습 진행을 지원하였다. 은평구는 오프라인 교육에서 온라인 교육으로 발 빠르게 전환 운영하기 위하여 유튜브 채널 개설, 은평배움모아 홈페이지 운영, 온라인 방송 설비 구축 등을 적극 추진하였다. 그러나 가장 큰 특징인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체제로의 변화 역시 은평구 평생학습은 '지역주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현영섭, 2020).

평생교육 현장을 온라인 교육의 장으로 옮기지만 한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는다. 대면 교육을 할 수 없으니 임시방편으로 온라인 교육을 해보자가 아니라, 코로나19로 열린 온라인이라는 장을 어떻게 활용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을 학습자로 불러낼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정민승, 2020). 평생교육은 주민의 요구와 의지에 의해 학습이 이루어지고, 학습의 결과로 성장하며, 다시 지역사회에 환원되는 생태계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언택트 사회에서 비대면 평생교육으로의 전환은 철저히 '지역학습 공동체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020년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디지털 시대의 열린 평생교육·훈련 혁신방안(안)」의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비대면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가칭) 평생배움터를 구축하여 학습자들이 다양한 학습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학습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다양한 기관에서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제공해 왔으나, 플랫폼 간 콘텐츠 등이 체계적으로 기획·공유되지 않아 학습자 접근 및 활용에 있어 편의성이 낮고 국가 수준에서 관리가 어렵다는 점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길혜지, 2020). 17개 시·도평생교육진흥원, 175개 평생학습도시, 행복학습관, 평생교육센터 등 지역의 공공 평생교육 자원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다양한 형태의 학습기반을 충분히 활용한다면, 누구나 쉽게 디지털 리터러시 관련 교육 기회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을 학습 플랫폼을 갖추고 있는 학습도시들이 연대하여 추진하고, 그 지역 안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학습공동체들이 적극적인 학습주체로 참여한다면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포용을 지역평생교육의 학습망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평생교육은 변화하고 있다. 그 가운데 '로컬택트'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평생교육은 만남 없이 이루어질 수 없기에, 언택트는 접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접촉 방법을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에 더 많은 학습 만남을 위한 새로운 진화가 평생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극단적인 비대면을 극복하고, 신뢰 기반의 지역연대를 바탕으로 다양한 형태의 모임 등 관계망 복원을 위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평생교육의 새로운 상상력과 촘촘한 마을 연대망이 필요하다(강대중 외, 2020). 코로나19 상황을 대처하는 평생 학습도시들의 힘은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학습동아리에서 나온다. 은평배움모아는 마스크 제작·보급 등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일들을 하고, 학교에 못 가는 아이들을 위해 공공책 배달 서비스에 나서기도 했다. 이들의 활동은 온라인을 통해 탄력을 받았다(강대중 외, 2020). 현재까지 비대면 평생학습은 그동안 추진되어온 대면 평생학습의 틀 안에서 작동되었다. 언택트가 일상이 될 수 있는 사회에서 그동안 암묵적으로 당연시 되어왔던 학습의 관행들을 다시 돌아보고, 온택트(ontact)에서 시작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나갈 필요가 있다(정민승, 2020). 온라인상에서 어떤 소통이 가능한지, 어떤 방식의 학습이 활성화 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일상의 평생학습이 외부 환경의 변화에도 멈춤 없이 지속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온라인 평생교육도 지역 안에서 지역주민 중심의 지역공동체 회복 운동과 함께 추진해야 한다. 공공의 다양한 지역평생학습 기반을 활용하여 온라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드웨어 기반을 갖추고, 소프트웨어는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주민이 만들어가는 지역학습공동체 중심의 평생교육이 지속되어야 한다.

공정하고 포용적인 새로운 평생학습 패러다임 찾기

이희수 교수는 사회적 고통을 줄이고 사회적 번영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교육시스템도 디지털 혁명에 상응하는 전환이 일어나야 한다고 했다.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시대에는 모두의 디지털 경험(Digital Experience)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그리는 미래는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가 아니라, 포용적 디지털 경험(Inclusive DX)이다(이희수, 2020). 이를 위해 몇 가지를 제안하며 마치고자 한다.

1. 새로운 평생교육 서비스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

이제 평생교육 현장에서는 새로운 교육 서비스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 기존 관념을 벗어난 혁신 평생교육 모델이 등장해야 한다. 하버드대 보다 들어가기 어려운 대학으로 유명세를 치른 미네르바스쿨은 캠퍼스가 없는 대신 상대적으로 저렴한 등록금과 현장형 온라인 교육으로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다. 경제지 포보스는 최근 미네르바스쿨을 세상에서 가장 흥미롭고 혁신적인 교육기관으로 평가하였다(한국연구재단, 2020). 코로나19 이후 평생교육 현장은 변화해야 하며, 변화하고 있다. 만남 중심의 오프라인 학습공간에서 벗어나 다양한 학습공간의 재구성을 해야 하며, 지역사회의 작은 단위까지 로컬택트가 가능하도록 확장해야 한다. 학습방법도 튜터형, 하이브리드형 등 새로운 교수학습 모델을 찾아야 하며, 학습 내용은 수직계열화에서 수평적 다양화로, 표준화에서 개인 맞춤형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교수자는 면대면 직접 교수에서 벗어나 코칭, 학습관리 전문가로 자리매김해야 한다(이지혜, 2020). 다가올 기술환경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평생 학습 모형을 학습자들과 함께 설계하고 만들어 가야 한다.

2. 시민 스스로 배우고 학습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학습자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어야 한다. 기관이 제공하는 평생교육이 아닌, 개인이 선택하고 만들어가는 평생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히 평생교육기관 중심에서 학습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학습자의 새로운 요구에 맞춰 구체적이고 다양한 개인 맞춤형 콘텐츠와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평생교육 패러다임이 운용되도록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지금은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평생교육바우처를 전 국민에게 확대하여, 학습자들이 자기 결정권을 갖고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학습자들은 저마다 처한 상태가 다르고, 학습에 참여하는 목적, 경제적 여건, 교육 수준 등도 다양하다. 학습자의 상황에 맞게 학습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과정 중심의 학습을 지원해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최근 국회에서 김민석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온국민평생학습장학금’이 구체화되면 시민 스스로 선택하고 학습하는 학습환경 조성을 좀 더 빨리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3. 소외되는 학습자가 없도록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

단순히 경제적, 물리적 취약계층을 한정하여 컴퓨터나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기계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주는 방식의 정보격차 해결에서 벗어나 더 넓은 의미의 디지털 소외계층의 학습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가정 방문형 프로그램 등 문해교육 지원유형을 다양화하고 양질의 콘텐츠를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특히 문해교육 학습자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온라인 학습 환경 구축과 더불어 맞춤형 학습지원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가령 개인의 수준과 특성에 맞는 1대1 튜터제 도입이나 EBS 문해교육 프로그램 제작 방송 확대를 통한 학년별 채널 확보 등을 검토할 수 있다. 또한 신중년층의 스마트 기기 및 SNS 활용, 유튜브 크리에이터 활동에 대한 관심과 수요에 맞추어 기초단계 학습자 대상 디지털 문해교육을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세대 간 문해교육 멘토링 사업 등 디지털 조력자(Digital supporter) 양성을 고려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자동화, 무인화, 스마트 기기의 보편화에 대응하는 실용적 디지털 생활 문해교육, 스마트폰을 이용한 티켓 발권, 음식 주문, 공공기관 서류 발급 등 생활 문해교육 확대를 위한 학습자료 개발·보급도 필요하다. 또한 부처별, 지자체별 시행되고 있는 디지털 리터러시 관련 교육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플랫폼을 통하여 학습콘텐츠를 공유,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공영역의 평생학습 기반 구축 및 학습역량 강화 정책을 강화하여 전 국민의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시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4. 비대면 상황에서도 주민중심 지역학습공동체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은 2020년 7월 유엔이 발간한 [도시에서의 코로나] 보고서를 소개하며, “모든 단계의 팬데믹 대응방안을 불평등과 장기적인 개발 격차를 없애고 사회적 통합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시행할 것”을 제시했다. 유엔과 국제사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를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것”을 중요한 과제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유네스코 뉴스, 2021.2.1).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하며 새로운 바이러스나 재해와 같은 피해로부터 회복력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들이 협력하는 한편 동시에 이를 각 지역의 환경에 맞춰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 주민단체, 학습동아리 등이 추진 주체로 활동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학습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지역공동체 회복은 대면과 비대면을 유연하게 연계하며 지속되어야 한다. 학습자들이 스스로 질문하고, 토론하며, 코로나19 상황에서 지역사회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세계시민으로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공동체적 경험 공유를 통해 함께 성장해 가도록 해야 한다.

—— 공정하고 포용적인 평생학습사회를 기대하며

연택트 사회는 우리가 다가올 것을 예측하여 준비한 사회도, 의지적으로 선택한 사회도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계속해서 살아내야 하는 사회임은 자명하다. 이러한 현실에서 성인학습자들의 평생교육에 대한 고민은 누가 교육 현장에서 배제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고령자, 저학력자, 저소득층 학습자를 포함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여전히 미래 학습의 주체이다. 연택트 사회에서 비대면 학습이 많아지는 상황을 받아들인다면 온라인평생교육에서 배제되는 사람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평생학습 기반을 토대로 모든 국민이 소외됨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로 하는 디지털 역할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모든 국민들이 자기학습에 대한 결정권을 보장 받고, 공평하게 학습 기회를 제공받으며, 학습 결과가 삶의 질 향상에 영향을 주는 학습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동시에 로컬택트의 활성화를 통해, 성인학습자들이 변화, 낯설음의 저항을 극복할 수 있도록, 혁신에 요구되는 문제들을 학습공동체를 통해 풀어가고, 혁신을 테스트할 수 있는 공동체적 기회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삶에서 소외될 위험에 대한 안전판으로서의 평생학습 공동체가 조성되어야 한다. 어떠한 위기상황에서도 지역주민의 지속적인 성장과 행복한 삶을 지켜줄 학습안전망이 구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지역주민들의 지혜를 모으고 함께 실천하는 학습공동체가 활동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어느 누구도 배제되지 않도록 시민의 평생학습 기회가 보장되며, 학습에 참여한 결과로 개인과 지역사회가 지속가능하게 발전하는 학습사회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강대중 외(2020). 코로나19, 한국교육의 짐을 깨우다. 서울: 지식공작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화진흥원(2019). 2019년 디지털정보격차실태조사. 대구: 한국정보화진흥원.

관계부처합동(2020). 디지털 포용 추진계획: 다 함께 누리는 디지털 포용 세상. 세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7). 성인문해능력조사. 서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9).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실태조사. 진천: 한국교육개발원.

금홍섭(2020). 코로나-19 이후 평생교육 과제와 전망. 월간 공공정책, 178, 19-21.

길혜지, 허준, 변호승, 노일경(2018). 정보문해능력 측정도구 개발 및 시범조사. 서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길혜지(2020). 포스트코로나 시대, 성인문해교육과 디지털 리터러시. 서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김보람(2021.2.). 우리가 살고 싶은 도시. 유네스코뉴스, 776, 4-9.
<https://issuu.com/unescokr/docs/776>

김종진(2020). 코로나19 영향과 포스트 코로나 과제 모색.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제146회 노동포럼 자료집. (pp. 19-53).

박세훈(2021.2.1). 코로나19 시대에 생각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포스트코로나 시대, 어떤 도시를 만들 것인가'. 유네스코뉴스, 776, 12-15.
<https://issuu.com/unescokr/docs/776>

배영임, 신혜리(2020). 코로나19, 연택트 사회를 가속화한다. 이슈&진단, 416, 1-26.

변종임(2020). 온라인 평생학습이 불편한 이들을 위한 지원: 포스트 코로나, 온라인 평생학습의 상상과 현실. 부천시 평생학습센터 온라인 포럼 자료집.
<https://blog.naver.com/justly68/222020065234>

유네스코한국위원회(2020). 제4차 세계 성인학습 및 교육보고서. 한국어판.

윤여각(2020). 코로나19가 교육의 세계에 던지는 화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영상 강연.
https://www.youtube.com/watch?v=ftGP3l_E7Lc&feature=youtu.be

이지혜(2020). 코로나19 시대, 문해교육의 현황과 과제. 2020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성과 공유회 및 문해교육 관계자 역량 강화 워크숍 자료집. (pp. 13-27).

이희수(2020.9.7). With COVID-19와 포용적 디지털 경험. 월간 HRD,
<http://www.khrd.co.kr/news/view.php?id=5051905>

정민승(2020). 온라인 평생학습의 상상과 허상: 포스트코로나, 온라인 평생학습의 상상과 현실. 부천시 평생학습센터 온라인 포럼 자료집.
<https://blog.naver.com/justly68/222020065234>

한국연구재단(2020). 코로나와 디지털 전환 가속화. NRF ISSUE REPORT, 2020(13).

현영섭(2020). 코로나19에 대처한 지역 평생교육 운영 사례와 방향. 서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Citi GPS. 2016. Technology at Work v.2.0 The Future is Not What It Used to Be. Oxford: Oxford Martin School.
From https://ghoster.dynu.net/filez/Citi_GPS_Technology_Work_2.pdf

UNESCO (2011). Digital Literacy in Education. Policy Brief.
From http://iite.unesco.org/files/policy_briefs/pdf/en/digital_literacy.pdf.

UNESCO (2018). A Global Framework of Reference on Digital Literacy Skills for Indicator 4.4.2. Information Paper No. 51. UIS/2018/ICT/IP/51.
From <http://uis.unesco.org/sites/default/files/documents/ip51-global-framework-reference-digital-literacy-skills-2018-en.pdf>.





교육정책 이슈와 전망

**2021년 교육부 정책 방향:
학교의 일상 회복, 미래교육 도약**

김문희(교육부 기획조정실장)

**코로나19 시대 교육 분야 개발협력
사업 지원 방안**

박효원(한국교육개발원 글로벌교육협력연구실 부연구위원)



2021년 교육부 정책 방향: 학교의 일상 회복, 미래교육 도약

김문희(교육부 기획조정실장)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교육부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누구나 희망하는 교육을 받고 미래를 선도하는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에서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사상 최초로 전체 초·중·고 온라인개학을 실시했고, 5월부터는 철저한 학교 방역을 기반으로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하고 있다. 원활한 수업을 위해 스마트기기, 원격수업도우미 등을 지원하고, 공공 학습관리시스템(e학습터, EBS 온라인클래스)을 개선했으며, 맞벌이·저소득층 가정 학생들을 위해 긴급돌봄을 제공('20.9. 기준 약 20만 명 참여)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연계한 학교 밀집도 조정, 건강상태 자가진단 앱 개발·보급, 외국인 유학생 관리 등을 통해 학교 내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고자 노력했으며, 지난 12월에는 약 43만 명의 학생이 응시한 수능시험을 시험장을 통한 확진사례 없이 무사히 실시했다.

코로나19 대응뿐만 아니라 유아부터 대학까지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 교육급여 인상, 고교 무상교육 도입, 반값등록금 확대 등을 통해 교육비 부담을 완화했으며,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공립유치원을 확충하고,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을 전면 도입했다.

2020년에는 마이스터고 1학년을 대상으로 학생 스스로 다양한 수업을 선택할 수 있는 고교학점제를 도입했고, 2025년에는 전체 고등학교에서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대학은 미래 핵심인재 양성 및 지역혁신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을 신설했고, 국립대 지원, 첨단분야 인재양성 확대 등의 노력을 통해 고등교육 혁신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육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며, 인구구조 및 산업 구조 변화 등에 대응한 미래교육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교육부는 ‘함께 성장하는 포용사회, 내일을 열어가는 미래교육’이라는 비전으로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교육부는 학습·방역·정서 안전망 구축을 통한 학교의 일상 회복,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미래교육 선도,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뒤처지는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한 사회 안전망 강화를 핵심 정책방향으로,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촘촘한 교육안전망으로 학교의 일상 회복

먼저, 올해는 더욱 체계적이고 철저한 학교방역을 통해 등교수업 시간을 보다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학생의 발달 단계상 대면수업의 효과가 높고 교사의 지원이 필요한 유아, 초등 저학년, 특수학교(급) 학생 등은 우선 등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안정적인 등교수업 확대를 위해 학교 현장에 약 5만 명의 방역 지원 인력과 방역물품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과밀학급도 단계적으로 해소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많은 학부모들이 걱정하고 있는 학습격차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초등 저학년, 기초학력 부족 학생 등을 위한 학습안전망을 강화한다. 초등 저학년 과밀학급에 교사 약 2천 명을 추가로 배치하여 협력수업 운영, 학급 증설 등을 통해 학습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를 신설하고, 두드림학교(5,000개교) 및 학습종합클리닉센터(140개소), 맞춤형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등을 통한 지원도 강화한다.

학습의 영역을 넘어서 정서·돌봄 영역까지 세심하게 살필 예정이다. 정서적 위기 학생들을 위해 전문가 학교 방문과 전문상담교사 배치를 확대하고, 문자·화상 등 다양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며, 유아, 초등 저학년, 특수학교(급) 학생을 위한 돌봄도 확대한다. 특히, 2학기부터 지자체-학교 간 협력을 통한 돌봄 모델(학교돌봄터 사업)이 새롭게 도입되고, 초등돌봄교실과 마을돌봄기관 확충을 통해 약 45만 9천 명의 초등학생이 돌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교육 시행, 누리과정 지원단가 지속 인상 등 유아부터 성인까지 생애단계별 교육비 지원도 더욱 확대된다.



—— 원격수업의 질 제고

지난해부터 학교 현장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원격수업을 고도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실시간 수업, 조·종례 등 원격수업 시 학생-교사 간 쌍방향 소통을 더욱 활성화하고, e학습터와 EBS 온라인클래스에서 화상수업에 참여할 수 있게 개선한다. 원격수업 환경에 맞는 탄력적인 교육과정과 동영상을 통한 평가를 허용하고, 「원격교육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교·사대 미래교육센터(28개소) 등을 통해 교원의 원격수업 역량 제고를 지원할 계획이다.

대학의 경우 원격수업 비율 상한(20%) 규제가 폐지되고 2학기부터 100% 온라인 석사 학위과정 운영 등을 허용하는 한편, 대학별 원격수업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체적으로 수업의 질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언제 어디서나 온·오프라인 수업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상반기 내 초·중·고 25만 2천 개 교실에 기가급 무선망을 구축하고, 국립대학 디지털 인프라를 개선할 것이다.

— 미래교육을 향한 대전환

코로나19 대응을 넘어서 미래사회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변화를 선도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학교, 교육과정, 교원 등의 새로운 역할을 정립하고, 교육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교사·학생간 소통확대	원격수업 규제혁신	원격수업 질 제고 지원	원격교육 인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시간 채팅, 조·중례 등 소통활성화 e학습터, EBS온라인클래스 화상수업 서비스 전면개통(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탄력적 교육과정 운영(원격수업 운영 기준 마련, 2월) 원격수업비율 20% 상한 폐지(1학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대 미래교육센터 10개 (2020년) → 28개 (2021년) 대학 원격수업 질 관리체계 구축 원격수업 관리위원회 구성, 강의평가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중등 교실 25.2만실 기가급 무선망 구축 교원용 수업자료 제작 플랫폼 시범운영(3월~)

1. 미래학교 전환 본격 추진

올해부터 학생 개개인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 언제 어디서나 학습이 가능한 환경을 지원하고,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의 전환을 본격화한다. 미래학교는 공간혁신, 스마트교실, 친환경·생태 교육환경, 복합화 시설 등을 토대로 교수학습 혁신을 이끌어 갈 것이다. 올해 1차 전환 대상으로 761개동을 선정하고, 2028년까지 약 18조 5천억 원을 투자하여 2,835개동을 미래학교로 전환할 예정이다. 미래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과정은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게 된다. 당사자인 학생을 비롯하여 학부모, 사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새로운 미래 교육내용과 방식 등을 논의하고 이를 토대로 2022 교육과정 개정을 추진한다.

고교학점제는 마이스터고 2학년까지 적용이 확대되며, 2022년 전체 특성학교 도입, 일반계고에 제도 부분 도입을 거쳐 2025년부터 전체 고등학교에서 전면 시행된다. 종합 추진계획 수립, 연구·선도학교 운영 확대(일반계고 937개교, 특성학교 520개교) 등 제도가 안정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할 예정이며, 이러한 새로운 교육제도를 반영한 미래형 수능 및 대입 방향(2028학년도 적용)을 수립하기 위한 논의도 시작한다. 아울러,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데 핵심 역량이 될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와 환경생태 의식을 길러주기 위해 학교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미래 변화에 맞는 교원양성체제 개편을 준비하고, 새로운 교원수급모델도 만들어갈 계획이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국민과 함께하는 2022개정 교육과정	고교학점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델학교 12교 완성 * '25년까지 57교 단계적 완성 761동 전환시작 * '28년까지 2,835동 전환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21년 하반기 총론 주요사항 발표 '21년~ 온·오프라인 대국민 의견수렴 * 학생·학부모·교사 상시협의체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이스터고 학점제 확대 2020년 1학년 → 2021년 1·2학년 '22년 일반계고 부분 도입, 특성학교 전면 도입 준비 연구·선도 학교: '20년 일반계고 542교, 특성학교 208교 / '21년 일반계고 936교, 전체특성학교 520교

2. 공유·협력 기반의 고등교육 생태계 조성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 대학은 기존의 경쟁이 아닌 상호 공유와 협력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여러 대학이 교육자원, 교육과정 등을 개방하고 개방·공유해서 디지털 신기술분야 인재를 양성하도록 지원하는 디지털 혁신공유대학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고, 서로 다른 대학 간에도 첨단분야 공동학과 설치가 허용된다.





이와 함께, 지난해 도입된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 사업'을 현장에 안착시켜 대학, 기업, 지자체 등이 협력하여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취업과 창업, 장기적인 정주 여건 개선까지 지원하는 지역혁신 사례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3개 지역혁신 플랫폼(경남, 광주·전남, 충북)에 더해 올해 1개 플랫폼을 추가 지원한다.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 현상 등으로 어려움으로 겪고 있는 지방대를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디지털혁신 공유대학	첨단분야학과	지역혁신플랫폼	학술진흥생태계 구축
 <p>48교 신규지원 ('21년, 832억원)</p>	<p>대학 내 45교 정원 증원 16교 학과 신설 ('21학년도)</p> <p>대학간 공동학과 설치 허용(2월)</p>	<p>2020년 3개 플랫폼 (경남, 충북, 광주, 전남)</p> <p>2021년 1개 플랫폼 추가 ('21년, 1,710억원)</p>	<p>학술연구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p> <p>대학연구소 지원 ('21년, 2,520억원)</p> <p>신진연구자지원 ('21년, 3,667억원)</p>

3. 전 생애에 걸친 평생직업교육체제 구축

국민의 생애 단계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체계적인 평생학습 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직무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질 높은 직업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평생교육·훈련 콘텐츠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학습·훈련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주는 '범정부 온라인 평생학습 시스템'(가칭 '평생배움터')을 구축하고, 전문대학은 단기직무과정부터 고숙련 전문인재 양성까지 다양한 수준의 직무 중심 교육과정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마이스터대'를 시범 운영한다. 특성화고는 산업과 지역 수요에 대응해서 자발적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 내 직업계고, 대학, 기업 등이 협력하여 양질의 고졸 일자리를 제공하고 후학습을 통한 역량 개발을 지원하는 직업교육 혁신지구를 신설한다.

온라인 평생학습 시스템	마이스터대	고졸 취업 활성화
<p> 평생배움터</p> <p> K-MOOC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정부 온라인 플랫폼 연계 • 학점·학위 취득 및 취업까지 연계 • 우수강좌 170개 신설 • AI 기반 서비스 도입 	<p>고숙련 전문인재 양성 전문대학 석사과정 도입</p> <p> 5교 신규 지원 ('21년, 100억원)</p>	<p>직업교육 혁신지구 5개 신설</p> <p> 고졸 일자리 DB 구축(5월)</p>

— 따뜻한 희망사회 실현

교육부는 사회부총리 부처로서, 관계부처 협력을 이끌어 코로나19 이후 변화에 미리 대비하고, 국민 모두가 질 높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아동학대, 디지털 성범죄 등을 근절하기 위한 국가의 제도적 보호를 강화하고, 입시·채용 등 영역에서 특혜, 불공정이 없도록 공공기관 채용 개선, 대입제도 개선 등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이와 함께, 범정부 인재양성 정책에 대한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해서 국가 차원의 미래인재 양성 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정적인 교육정책 추진을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지역·학교 중심의 교육자치 강화 등 교육 분야 거버넌스 개편을 지속 추진한다.

올해는 코로나19를 현명하게 극복하며 학교의 일상을 회복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위기 속에서 이루어낸 교육 현장의 도전과 변화를 토대로 우리 교육의 더 큰 도약을 시작하는 한 해로 삼을 것이다. 학생, 학부모, 교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다양한 정책제언 및 의견제시,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

코로나19 시대 교육 분야 개발협력 사업 지원 방안¹⁾

박효원(한국교육개발원 글로벌교육협력연구실 부연구위원)



COVID-19



— 들어가며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위기가 1년여 이상 이어지면서 그동안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해 노력해 온 교육 분야 개발협력 사업에도 수많은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개발협력 사업은 긴급 우선대응 차원의 인도적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교육 사업은 우선순위에서 현저히 밀리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대면수업을 지양하고 원격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온라인 기기에 대한 접근성 및 ICT 역량이 낮은 개발도상국 취약계층의 교육 접근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위협을 받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겪고 있는 개발도상국의 이러한 피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는 있지만, 개발도상국에서 수행되고 있는 개발협력 사업과 사업의 수행주체에 대한 관심은 다소 적은 편이다.

1) 본 원고는 “박효원, 안해정(2020). 코로나 시대 교육 분야 개발협력 사업 지원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IP2020-09.” 연구내용을 수정 보완하였으며, 면담조사 자료는 “안해정 외(2020).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을 위한 교육개발협력연구(IV): 교육 형평성 제고 전략. 한국교육개발원 RR2020-20.”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구체적인 예시 등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를 참고할 수 있다. <https://www.kedi.re.kr/khome/main/research/selectPubForm.do?plNum0=14010¤tPage=1&tabGb=0>

이에 코로나19에 더욱 취약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교육 분야 개발협력 사업이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 현황을 파악하고, 추후 변화되어야 할 개발협력 지원 방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 분야 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하는 여러 수행주체가 겪는 어려움을 파악하고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코로나19 시대뿐만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그리고 더 나아가 추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교육 분야 개발협력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 코로나19 시대 교육 분야 개발협력 사업의 변화

1. 개발도상국 교육 현황

코로나19가 1년 넘게 지속되면서 전 세계가 유례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특히 개발도상국의 교육 환경은 더욱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 교육 불평등도 심화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코로나19의 높은 전염성으로 인해 많은 학교가 문을 닫았기 때문에 학습 중단과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고 있는데, 개발도상국에서 학교 폐쇄로 인한 교육 접근성 및 학습권 제약은 보다 심각한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다. 둘째, 학습자의 건강 및 영양 상태가 악화되고 있다. 학교가 폐쇄되면서 급식도 제공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에 노출되는 아동의 수가 증가하고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 셋째, 학교 폐쇄가 빈번해지면서 학교교육이 대면교육에서 원격교육으로 전환되고 있는데, 원격교육이 가능한 환경이나 기기(컴퓨터, 인터넷, 전기 등)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학생들의 경우 교육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어 교육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다.

2. 우리나라 교육 분야 개발협력 사업 진행 현황 및 이슈

교육 분야는 우리나라가 국제개발협력에서 가장 강점을 보이는 분야 중 하나로, 우리나라 전체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2019년의 경우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전체 사업 중 교육 분야 ODA 사업은 24.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2021년 약정액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ODA 사업 중 교육 분야는 9.8%를 차지하여 교통, 보건 분야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지원액을 보이고 있다.²⁾ 코로나19로 인해 교육 분야 ODA 사업 건수는 크게 감소하였으며, 교육 사업 중 큰 비중을 차지하던 연수생 초청사업은 2019년 151건에서 2020년 60건으로 약 90여 건이 감소하였다.

2) 관계부처 합동(2020), '21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 기준). ODA Korea 제3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안건(제36-2호).

3. 교육 분야 개발협력 사업 수행주체가 겪는 어려움

개발도상국의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교육 사업을 주로 담당해 온 국내 비정부기구(NGO)의 사업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한 결과, 코로나19로 인해 겪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먼저 사업 수행 면에서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코로나19로 인해 현지 파견이 어려워지면서 사업이 지연되거나 원활한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살펴보았듯 우리나라 교육 분야 개발협력 사업은 연수생 초청, 전문가 파견 등 인적교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야기되는 어려움이 가장 크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지역 간 이동을 엄격히 제한하는 경우가 많아 현지 인력이 적시에 파견되지 못하거나, 재택근무 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거나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코로나19로 인해 교육 사업이 대상의 우선순위에 밀리는 것이다. 코로나19의 피해가 확대되면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식량지원이나 식수 위생 등 인도적 지원과 보건 사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상대적으로 시급성이 떨어지는 교육 사업의 경우 자연스럽게 우선순위에 밀리는 한편 긴급구조가 증가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사업 수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또한 대면하여 이루어지던 교육 사업은 학교를 폐쇄해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렵게 되었고, 우선순위에 밀린 아동들은 성적 학대나 가정 폭력 등 더 큰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교육 사업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코로나19 시대 교육 분야 개발협력 사업 추진 현황

우리나라 정부, KOICA, 국제기구, NGO 등은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개발도상국의 원격교육 지원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 방식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1. 정부 부처

정부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가장 큰 방향을 설정해주는 '2021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통해 개발도상국에서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코로나19 이후 원격교육 노후우 전수와 관련하여 개발도상국 맞춤형 원격교육 체제 구축에 집중할 것을 밝혔다. 원격교육 체제 구축 추진방향은 원격교육이 가능한 기본 기자재 패키지를 지원하고, 원격교육 분야의 선도교원 역량을 개발하며, 교원과 정책입안자 등을 대상으로 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의 방향을 지향한다. 더불어 국내 대학의 우수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개발도상국 현지 대학 수요에 맞춘 맞춤형 학과를 신설하거나 개편하는 것을 지원하고 전문대학 트랙 신설을 추진한다. 한편 개발협력 사업의 운영에도 온라인 사업 방식을 도입하여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것을 적극 고려하고 있다. 또한 직접적인 인적 교류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국제기구와의 파트너십을 통한 개발협력 사업 추진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2. KOICA

외교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우리나라의 대외 무상 협력 사업을 주관하는 KOICA의 경우에도, 그동안 교육 분야 사업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초청 연수와 봉사단 파견이 거의 불가능해짐에 따라 온라인 교육을 적극 활용하여 한국의 노하우와 경험을 공유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또한 그동안 진행한 초청 연수 프로그램 등 많은 교육 프로그램을 원격교육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한편 KOICA에서 월간으로 제공하는 국가별 개발협력 동향정보에 2020년 3월부터 개발도상국 코로나19 관련 동향을 포함하여, 2020년 기준 47개국의 코로나19 피해 현황과 교육 관련 이슈를 파악하고 그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3. 국제기구

UNESCO를 비롯한 국제기구는 코로나19 사태에 전 세계가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UN 기구, NGO, 미디어 및 IT 파트너 등 약 140개 단체 간의 다분야 파트너십인 '코로나19 국제교육연대(COVID-19 Global Education Coalition, GEC)'를 출범시키고 학습 기회 증진, 형평성 및 접근성 제고, 중복을 피하기 위한 협력 및 공동 대응, 학교 중도 탈락 방지를 위한 학생들의 학교 복귀 지원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UNESCO는 학습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전 세계 무료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과 대안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제공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한 학생들의 정신건강 및 사회·심리적 변화가 학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 이를 위한 자료도 제공하여 145개의 개발도상국에서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³⁾

4. NGO

코로나19 이후 교육 분야 개발협력 사업은 사업의 목표에서부터 수행 방식에 이르기까지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에 여러 비정부기구(NGO)들이 인식을 같이 하였다. 국내 비정부기구(NGO)는 먼저 현지 수혜자의 긴급한 수요 발생에 대응하여 교육사업의 내용을 생존 및 식량 지원을 포함한 긴급구호의 성격으로 변경함으로써 취약계층이나 취약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자 하였다. 또한 취약계층이 원격교육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원격교육에 대한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각 개발도상국마다 원격교육을 위한 기반시설 및 인프라에 큰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면서 맞춤형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인터넷이 아닌 라디오나 TV를 활용하여 원격교육이 대안적으로 가능하게끔 하고, 인터넷 연결이 비교적 원활한 국가에는 이에 알맞은 대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해 사업 진행이 지연되고 있는 현지점을 개발도상국 현장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는 기회로 삼으며 코로나19 대응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현장의 데이터를 디지털화하여 우리나라에 위치한 본부와 현지 사무소와의 의사소통 격차를 줄이고 현장 중심의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장 중심의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면 추후 원활한 사업 관리가 가능할 것이며, 코로나19 등과 같은 전 세계적인 감염병 확산 시에도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제 비정부기구(INGO)인 세이브 더 칠드런(Save the Children)은 아이들의 학교 복귀 지원과 아동, 가정, 지역 사회의 안전 지원에,⁴⁾ 플랜(Plan)은 성폭력 방지와 여아 권리 향상, 난민/이주민 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에,⁵⁾ 월드비전(World Vision)은 질병 예방 및 보건 시스템과 인력 강화에 힘쓰고 있다.⁶⁾

3) UNESCO (2020). Distance learning solutions.

<https://en.unesco.org/covid19/educationresponse/solutions>

4) Save the Children (2020). Global response plan to COVID-19: Protecting a generation of children. Save the Children International.

5) Plan International (2020a). COVID-19 response framework. <https://plan-international.org/publications/covid-19-response-framework>

6) World Vision (2020a). COVID-19 emergency response plan. <https://www.wi.org/publications/coronavirus-health-crisis/covid-19-emergency-response-plan>

— 코로나19 시대 교육 분야 개발협력 사업 지원 방안

1. 개발도상국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코로나19 시대의 교육 분야 개발협력 사업은 개발도상국 취약계층의 교육 접근성 보장을 위해 원격교육 지원, 대안적인 방법 마련, 학교로의 복귀 등 포스트 코로나19에 대한 방안 모색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원격교육 시 필요한 기자재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디지털 역량 부족 등 원격교육 준비도가 낮은 개발도상국 취약계층 학생들의 교육 기회가 박탈당하고 있으며, 교육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취약계층의 아동 및 청소년이 이탈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원격교육 시스템 및 플랫폼 구축, 필요한 시설(기자재) 지원 및 환경 개선 등을 통한 원격교육 접근성을 높임과 동시에 원격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한편 여러 가지 기자재나 여건이 제한된 환경에서 원격교육에만 매몰되지 않고 기본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라디오나 TV 등 가능한 교육 방법을 찾고 이를 제공하는 사업이 우선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개발도상국 취약계층에 채널을 이미 구비한 NGO와의 파트너십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개발도상국의 각 취약계층이 처한 상황에 빠르게 대응하여 이들의 교육 접근성이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있는 시간이 길수록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고,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되면 빠르게 학교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동시에 모색해야 한다. 일례로 세계 식량 계획(World Food Programme)에서는 학교 급식 중단에 대해 도시락(코로나19 예방 가이드라인 등 학습교재 전달), 현금 지원, 혼합형 지원 등 대안적 조치를 실행하고 있다. 정부와 유관기관이 학생들이 학교로 복귀하는 데 가장 강력한 유인책인 급식 제공 교육 사업을 지원하여 아동 및 청소년의 이탈을 막고 취약계층 학습자의 복귀를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2. 개발도상국 교육 전문가의 ICT 역량 강화 지원 확대

양질의 교육 제공을 위해 교원, 교육 공무원, 교육 분야 연구자 등 개발도상국 내 교육 전문가들의 역량 강화 사업을 지원해야 하며, 기존의 초청 연수 프로그램을 온라인 연수로 전환하는 사업에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과 매우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교육 관련 제도와 정책, 그리고 이를 둘러싼 문화와 학교 환경 역시 교육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개발도상국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발도상국 교육 전문가들의 역량 강화에도 힘써야 하며, 더 나아가 이를 비대면 방식으로 연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지원해야 한다. 예를 들어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처하며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모든 교원은 첨단(high-tech), 낮은 수준의 기술(low-tech) 또는 기술이



없는 환경(no-tech)에서 원격으로 혹은 복합적인(blended) 방식으로 가르칠 수 있는 디지털 기술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또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 가르칠 수 있는 교수역량까지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교육 전문가 역량 강화 프로그램 혹은 연수를 진행할 때, 언택트 사회의 본격적인 도래를 대비하여 양질의 원격 연수로 전환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과 온라인 교육자료 개발 그리고 개발도상국 내 온라인 여건 개선이 시급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교육 분야 개발 협력 사업 수행 과정에서부터 ICT를 활용한 학습의 보편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교육기회 확대 및 질 제고 그리고 지속가능성 확보에 동시에 기여할 수 있는 블렌디드 러닝, 오픈교육자료(OER), 온라인 공개수업(MOOC) 등 ICT를 활용한 교육을 통해 교육 분야 개발협력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비록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인해 반강제적으로 ICT 활용 교육이 활성화되었지만 이를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는 것이다.

3. 원조 유형 다각화 및 파트너십 강화

지속가능한 교육 개발협력을 위하여 원조의 유형을 다각화함과 동시에 국제기구, INGO, 민간 기업 등과의 협력을 통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국제사회의 파트너십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앞서 살펴보았듯 직접적인 인적교류를 통해 많은 사업이 추진되어 왔으나, 코로나19로 인해 개발도상국에 파견되었던 봉사 단원이 모두 귀국하였고, 2020년 예정되었던 단기 글로벌 연수는 사실상 모두 취소되는 등 기존의 인적교류 중심의 협력이 더이상 불가능하게 된 상황이다.

이에 그동안 추진되었던 교육 분야 개발협력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개발도상국과의 교육협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개발도상국 현지 사무소를 두고 있는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국내외 비정부기구와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2021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의 2021년도 원격교육 체제 구축 추진방향에서 민간 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온라인 원격연수 콘텐츠 제작 및 활용을 언급하였듯이, 때에 따라서는 민간 기업 등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직업 훈련원의 건립과 운영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던 기술·직업 교육 및 훈련(TVET) 분야 협력의 경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대면하여 실시하는 실습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그러나 TVET 분야 협력의 성과 지표가 고용 및 노동시장과 연계되는 만큼 현지 민간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현지 기업에서 훈련생의 실습을 담당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 기초교육의 경우에도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개발도상국에 현지 사무소가 있는 UNICEF, UNESCO 등의 국제기구 및 INGO 등과 협력을 확대하는 등 협력 방식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4. 수원국의 자립성 강화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교육 개발협력을 위하여 궁극적으로는 수원국의 자립을 위한 방향으로 사업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교육 분야 개발협력 사업의 경우 파견을 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거나 수원국의 수혜자가 직접 우리나라로 오고(초청연수 사업 등) 우리나라에서 관리·감독을 하기 위해 파견을 가는 인적교류 시스템이 주를 이룬다. 그러나 유럽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교육 분야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할 때 수원국에 예산만을 지원한 후 스스로 방향을 결정하게끔 한다. 즉,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닌 '물고기를 스스로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물론 최소한의 기술협력은 이루어지며 전문가 장기 파견을 통해 현지 전문가를 교육하는 방식을 취한다.

원조의 질과 개발에 있어 수원국의 자립을 위한 방향으로 교육 분야 개발협력 사업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이러한 방식을 택하였을 경우 원활한 사업 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을 받아서 사용하는 공무원의 부패 척결 및 청렴을 위해서도 인식 개선의 교육 개발협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교육을 통해 인식을 개선해 나가야 하는 사업인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꾸려갈 수 있도록 하는 지원 방안이 필수적이다.

5. 기타 방안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지원 방안으로는 앞서 언급한 방안들 외에도 귀국한 봉사단원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감염병 예방수칙, 감염병 위기 대응 및 대처 상황 교육 제공, 보건인력 양성 지원 등의 방법이 있을 것이다. 추후 다른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에도 유용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부터 교육할 수 있다면 위급상황에서 도움이 될 것이다.

더불어 긴급 상황에서 빠르게 대처하여 예산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수행주체에 어느 정도의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도 교육 분야 개발협력 사업을 지원할 때 필요하다. 계획되어 있는 예산을 항목에 맞게 사용하지 못할 경우, 객관적인 수치의 사업성과 지표를 지키기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예산 사용에 있어 유연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시대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교육 분야 개발협력 사업의 수행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

NEW
교육 연구

디지털 지식기반 대응형 학습 기술:
접근 방법들과 요소들

Digital Knowledge-based Adaptive
Learning Technology: Approaches
and Elements

최재화(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 부교수)



디지털 지식기반 대응형 학습 기술: 접근 방법들과 요소들¹⁾

최재화(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 부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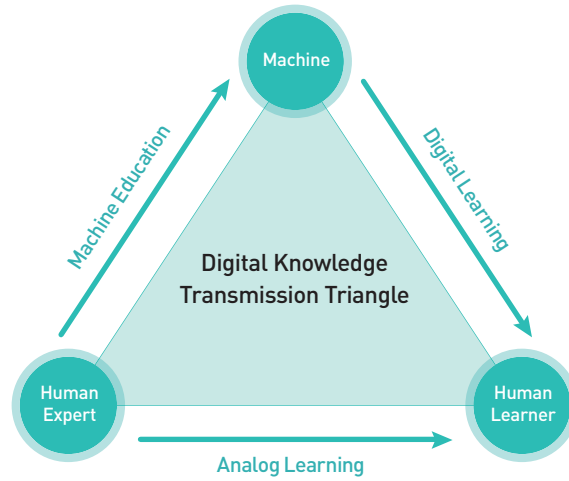
1. 디지털 지식 전달 삼각형 (Digital Knowledge Transmission Triangle)

이전 글에서 우리는 “왜 대응적 학습 기술에 대한 정의와 세부 요소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가?”에 대하여 이야기 하였다. 이번에는 디지털 지식 기반 (Digital Knowledge-based) 대응적 학습 기술과 그 요소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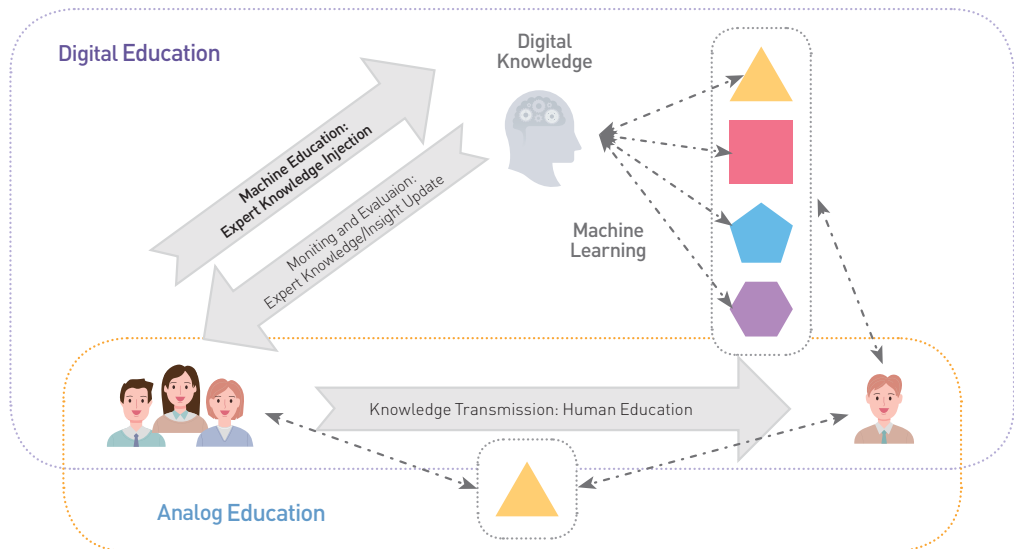
다음의 도표(디지털 지식 전달 삼각형은 해당 기술 배경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되었다. 전통적인 아날로그 학습 혹은 교육은 교육 전문가들이 직접 제작한 교육 콘텐츠/서비스를 학습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에 반하여, 디지털 지식 기반 교육은 기계 교육(Machine Education)으로 만든 디지털 지식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학습을 추가로 제공하는 방법이다.

1) 이 글은 ‘디지털 지식기반 대응형 학습 기술(Adaptive Learning Technology based on Digital Knowledge)’을 주제로 하는 3부(배경과 필요(2020 교육개발 겨울호), 접근방법과 요소들(2021 교육개발 봄호), 교육자원 플랫폼의 인프라(2021 교육개발 여름호) 연재의 두 번째 원고임.

위 삼각형에서 핵심이 되는 “기계 교육(Machine Education)”은 대응적 학습을 위한 디지털 지식을 만드는 접근방법 중 하나다. 이는 평가자(assessors) 혹은 교육 전문가의 지식의 연역적 추론(규칙 기반; rule-based)과 및 경험적 학습 데이터를 통한 귀납적 추론(즉, 데이터 기반)을 융통한다. 기술적 관점에서, 이는 대응적 학습을 위한 “생성 심리측정 모형(generative psychometric modeling)”을 베이지안 프레임워크에서 구현한 것이다. 이 방법은 점진적 학습을 가능하게 하고 전문가의 지식을 Prior에 직접 주입하여(즉, 전문가의 지식을 디지털화하여 명시적으로 표현) 귀납적 학습 혹은 추론의 단점들(예를 들어, 주관성, 과적합 또는 학습 데이터의 부족)을 보완한다.



• [그림 1] Digital Knowledge Transmission Triangel (Choi, 2017) •



• [그림 2] Services, Contents and Data Process in Digital Knowledge-based Adaptive Learning (Choi, 2017) •

위 그림은 디지털 지식기반 대응적 학습 콘텐츠/정보의 흐름을 나타낸다.

1. 전문가의 지식을 직접 주입하여 구성된 디지털 지식의 기계 생성(machine generation)으로 학습 콘텐츠/서비스를 다수로/다양하게 생성한다.
2. 이 학습 콘텐츠들은 다수의 학습자에게 다양한 학습 환경에 따라 제공되어 대량 개별화(mass tailoring/individualization)를 가능하게 한다.
3. 대량 개별화를 통해 생성되는 대량의 응답 데이터들은 다시 디지털 지식을 최적화 하는 기계학습(machine learning)의 원료로 사용된다.
4. 디지털 지식으로 축적된 학습자의 학습 정보들은 모니터링과 평가(monitring and evaluation) 과정을 통해 전문가들의 통찰과 지식을 갱신하는 원료로 다시 사용된다.

2. 디지털 지식 개발 방법들 (Approaches for Developing Digital Knowledge)

교육 혹은 학습에 참가하는 전문가들은 다양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교과 (curriculum), 교수(instruction), 그리고 평가 (assessment)에 대한 지식들이 그 대표적인 예 이다. 지식을 표현 혹은 표상(representation)할 때 문장(sentence) 혹은 도표, 그림 등을 주로 사용한다.

이 '문장'은 기술적 용어(in a formal language)로 참 또는 거짓을 정의할 수 있는 명제들과 수리적 논리들을 포함한다. 이러한 문장들은 단순한 반사작용에 의한 것처럼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지식 내부 표현들에서 작용하는 추론(reasoning)으로 만들어진다.

디지털 지식기반 대응적 교육 시스템(Digital Knowledge-based Adaptive Assessment System)은 교육 전문가 지식에 대한 위와 같은 접근 방법을 포함한다. 이 지식기반 시스템은 대응적 교육에 필요한 복잡하고 다양한 지식에 대한 표현을 형성할 수 있고, 추리 공정을 이용해서 새로운 지식 표현들을 유도할 수 있으며, 그러한 표현들을 이용해서 다음에 할 일을 연역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지식 기반 시스템(혹은 agent)의 핵심 구성요소는 지식 베이스, 지식 기지(knowledge base: KB)라 불린다. 이 지식 기지는 여러 문장의 집합이다. 지식 기지 구성을 위해서는 새로운 지식을 추가하고, 지식 기지에 있는 문장을 질의하며, 두 연산의 과정 속에는 추리(inference), 즉 기존의 문장들에서 새로운 문장을 이끌어 내는 공정들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스템 구축의 첫 과정은 시스템이 주어진 대응교육 환경에서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지식을 '주입'하는 것이다. 이 과정은 교육전문가들의 지식을 시스템이 알아야 할 지식으로 주입하여 교육하는 시스템 구축방식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선언적(declarative)' 접근방식이라 한다. 이와는 달리 적절한 행동을 프로그램 코드로 직접 구현하는 것은 '절차적(procedural)' 접근방식이라고 한다. 다른 전문가 시스템들과 마찬가지로 디지털 지식기반 대응형 학습 시스템 또한 이 두 가지 접근방식을 혼용하여 세부 모형들과 프로세스들을 제작한다.



3. 디지털 지식의 요소들 (Elements of Digital Knowled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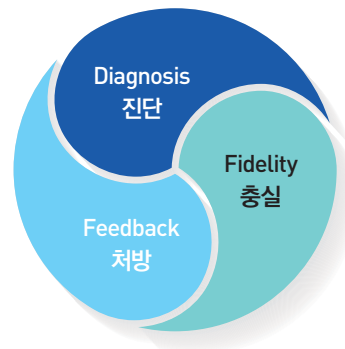
대응적 교육에 환경에서, 이러한 전문가들의 전문 지식들은 소위 '모형들'로 표상(represented)되며, 대응적 교육을 위한 계산, 예측, 혹은 제작을 돕는다. 에이전트 혹은 시스템이 다양한 환경에서 적절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 이 모형들을 '선언적 지식모형 (Declarative Knowledge Model)' 과 '절차적 지식모형 (Procedural Knowledge Model)'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선언적 지식모형은 주로 "선언적" 접근방식으로 구성된 "학습자가 알아야 할 지식"을 핵심(core)으로 하며, 세부 지식 모형들은 다음과 같다.

- **도메인 지식모형 (Domain Knowledge Model):** Represents expert knowledge about what the learners need to know. E.g., Curriculum/Knowledge Map or Task Models.
- **교수 지식모형 (Pedagogy Knowledge Model):** Represents experts' knowledge of effective approaches to enhance learners' learning. E.g., Diagnostic Model, Distractor Model, or Feedback Model.
- **학습자 지식모형 (Learner Knowledge Model):** Represents expert knowledge of how learners' learning is being formulated and progressing. E.g., Measurement Model, Calibration Model, or Learning Progression Mod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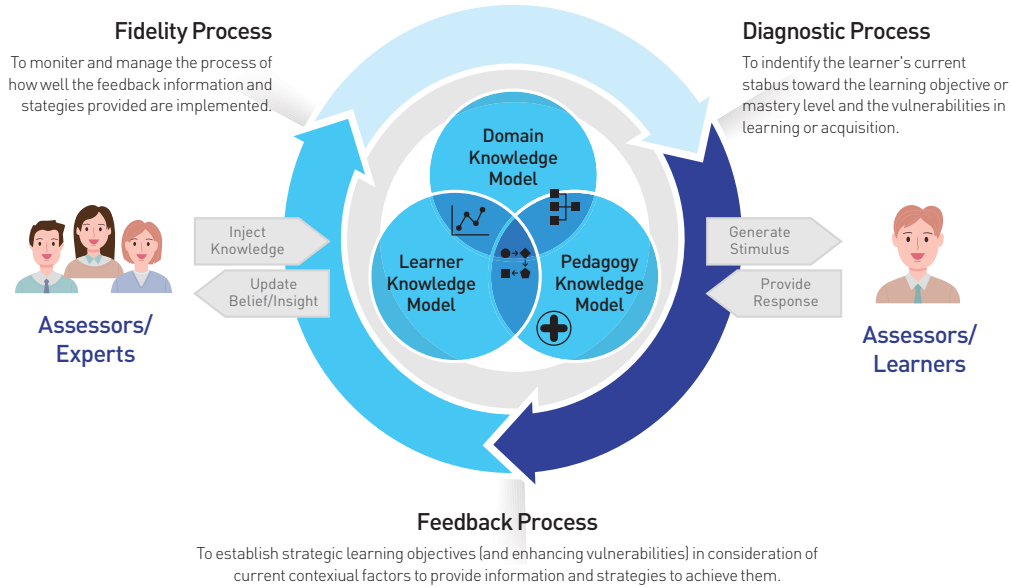
절차적 지식모형은 지식모형들에 축적된 학습자의 학습 정보를 공통으로 사용하여 주로 '절차적' 접근방식으로 구현된다. 이는 '평가 기능과 용도'를 중심으로 구성되며, 세부 평가 기능/용도들은 다음과 같다.

- **진단(diagnosis) 평가 프로세스**는 학습 목표 또는 숙달 수준에 대한 학습자의 현재 상태와 학습 또는 습득의 취약성을 식별을 주목표로 한다.
- **처방(remedial feedback) 평가 프로세스**는 현재 상황요소들을 고려하여 전략적 학습목표(취약점 강화)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학습 정보와 전략을 제시를 주목표로 한다.
- **충실(fidelity) 평가 프로세스**는 제시된 처방정보 및 전략이 얼마나 잘 이행되는지 그 과정을 관찰 및 관리를 주목표로 한다.



위 평가 프로세스들을 디지털 지식기반 대응교육에 융복합하기 위해서 Choi (2021)는 학습을 위한 평가의 삼용일체(Trinity of Assessment for Learning) 이론을 제시한다. 이 이론의 핵심은 "평가의 응용/용도들은 진단, 처방, 그리고 충실도로 나뉘지만, 이 평가들이 질서 (order)·조화(harmony)를 이루며 순환(rotate)하면서 본질 (essence)적으로 하나가 되면 교수/학습(teaching and learning)과 일체화(alined)되고 평가의 핵심 목적인 '학습자의 성취'가 극대화 된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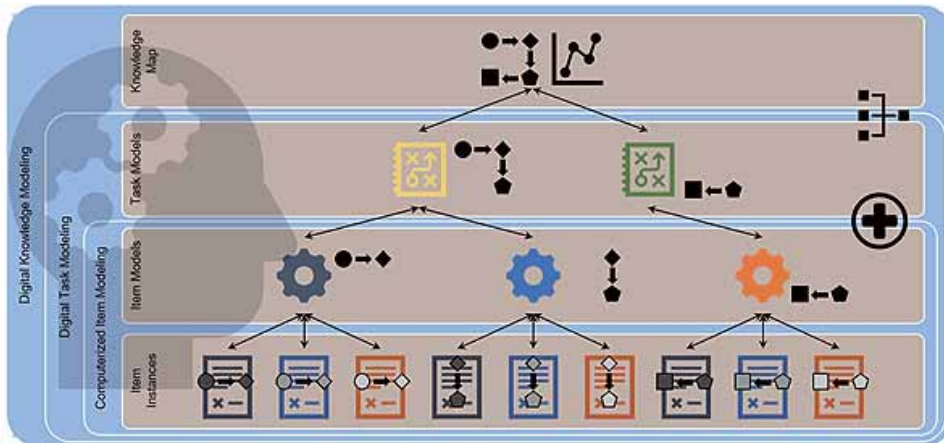
- [그림 3] Trinity of Assessment for Learning (Choi, 2017) •



• [그림 4] Models and Processes in Digital Knowledge for Adaptive Learning (Choi, 2017) •

위의 그림은 위에서 언급한 세부 지식모형들과 평가 프로세스들이 융복합된 디지털 지식이 전문가 및 학습자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 대한 지식을 표상한다.

아래 그림은 지식 요소들과 관계들이 과제 모형 (Task Model)과 문항 모형(Item Model)을 통해서 학습자의 지식을 측정하는 총괄평가 혹은 지식을 향상을 돕는 형성평가 콘텐츠/서비스로 구성되는지를 나타낸다.



• [그림 5] Layers of Generative Psychometric Modelings in Digital Knowledge (Choi, 2017) •

이 글에서 우리는 디지털 지식 기반 (Digital Knowledge-based) 대응적 학습 기술과 그 요소들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다음 글에서는 “대응적 학습 서비스/콘텐츠를 제공하는 디지털 지식기반 클라우드 플랫폼은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를 살펴보겠다. ❀

세계의 교육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미국 바이든 정부의 교육정책과 시사점

류재수(미국 미네소타 대학교 박사, 워싱턴주 전문교원개발원 (Washington Professional Educator Standards Board) 프로그램 매니저)

잉글랜드의 소외 계층을 위한 교육 정책

윤태영(영국 런던대학교 교육연구소(Institute of Education, UCL) 박사과정, 연구원)

소황제(小皇帝)의 등장과 중국의 가정교육

김현진(중국 대련한국국제학교 교사)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미국 바이든 정부의 교육정책과 시사점

류지수(미국 미네소타 대학교 박사, 워싱턴주 전문교원개발원(Washington Professional Educator Standards Board) 프로그램 매니저)



지난 2020년 1월 21일, 미국의 새로운 바이든 정부가 출범했다. 이 새로운 정부의 출범으로 미국의 유치등 교육에서 고등교육까지 전방위에 걸쳐 다양한 정책적 변화가 예견되고 있다. 바이든 정부 이전의 트럼프 정부는 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한 교육 정책을 폈다. 연방정부의 교육 예산을 대폭 줄이는 대신, 지방정부의 자율권을 늘리고 개별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는 정책 등에 중점을 두었다. 민주당 바이든 정부의 교육 정책과 철학은, 이전 트럼프 정부와는 상당히 다른 기초를 보인다. 바이든 정부는 교육 개혁에 있어서 연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공교육을 통한 교육 기회의 평등을 확대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코로나 대응에 있어서도 주정부 각자의 자율에 맡겨두는 대신,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일관적 대응을 고심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안전한 학교 정상화 방안, 교사 역량 향상을 위한 임금 및 처우 개선, 평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지역 간 교육재정 격차 해소, 보편적 유아교육의 확대, 2년제 지역 전문대학(communitry college) 무상교육, 학생들의 정신건강 상담 지원의 확대 등 굵직굵직한 교육 정책을 제안했다. 따라서 앞으로 바이든 정부가 집권하는 동안 미국 연방정부의 교육 정책은 상당한 변화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정부가 새로운 시작을 앞둔 이 시점에, 그가 내세운 주요 교육정책을 짚어보는 것은 앞으로 미국의 교육 정책과 체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미리 생각해 보고 그

의미를 되새겨볼 기회를 줄 것이다. 본 글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의 포부로 내세운 교육 정책을 정리한 “교육자, 학생 그리고 미래를 위한 계획(Plan for Educators, Students, and Our Future)”, “고등학교 이후의 교육을 위한 계획(Plan for Education Beyond High School)”, 그리고 “국가적 코비드 19 대응과 대유행 대처(National Strategy for the COVID-19 Response and Pandemic Preparedness)”를 중심으로 바이든 정부의 주요 교육 정책을 정리하고, 그 외의 문헌과 기사들을 바탕으로 시사점을 분석한다.

— 안전한 학교의 정상화

현재 바이든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저지하고 안전하게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코로나에 관련한 대책을 각 주정부에 일임했던 이전의 트럼프 정부와는 달리, 바이든 정부는 연방정부를 통해 코로나 관련 대책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다. 먼저 바이든 대통령은 학교 정상화를 위해 연방정부 기구들이 협력하여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객관적인 기준과 지침을 개발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이러한 기준과 지침을 주와 지역구, 그리고 여러 지역 사회 커뮤니티에 제공하여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방침과 정보를 활발히 소통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더불어 코로나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은 미국의 많은 초·중·고등학교들을 위해 재정적 지원을 약속했다. 바이든 정부는 코로나의 확산과 관련하여 학교기관들이 연방정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주정부와 협력하여 학교에서 일하는 교직원들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 바이러스 검진 시설을 확충하고 지침을 제공할 계획이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학생들의 학업 손실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교육격차를 줄이고 온라인 교육을 내실있게 진행할 수 있는 지침과 자료를 개발하겠다고 하였다.

코로나의 확산으로 인해 초·중·등 교육뿐 아니라, 유아 보육시설과 대학교들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 유아 보육시설의 경우 재학하는 원아들은 줄어들고 있지만, 코로나를 대비하는 물품들을 갖추기 위해서 지출은 늘어나고 있다. 대학들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많은 대학들이 재학생의 숫자가 현저히 줄어들어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보육기관과 대학기관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도 내실있게 지속적으로 운영되려면, 적절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에 따라 코로나 관련 재정지원을 확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한 대학 캠퍼스에서 대학생들과 교직원들이 백신을 접종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코로나 확산을 막고 교육 시스템을 안전하게 정상화시키는 것에 초반 임기의 주안점을 둔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한 첫날 “학교와 유아교육의 정상화와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이 행정명령으로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와 보건인적자원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는 학교, 대학, 그리고 유아교육시설이 안전하게 정상화되고 운영될 수 있는 지침을 개발해야 한다. 또한 대통령은 긴급재난구조금이 학교의 안전한 정상화를 위해 충분히 사용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국회에 1,300억 달러(\$130 billion)의 재정보조를 요청했다. 이 재정이 승인된다면, 코로나 검진을 위한 추가적 물품구매, 개인보호 장비 구매, 교통수단 및 산소호흡기 지원,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학급의 규모 축소, 교사 및 간호사의 안정적 고용, 학생들의 정서적·사회적 안정을 위한 상담사 고용, 그리고 학생들의 교과학습 지원 등에 사용될 것이다.



교사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지원 강화

교사들의 높은 이직율과 교사부족 현상은 미국 교육계의 지속적인 화두이다. 교사 부족 현상은 저소득층의 자녀가 많이 다니는 학교일수록 더욱 심각하다. 바이든 정부는 2018년도의 연구를 인용하며 미국에서 교사들의 처우는 타 직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일례로 교사들의 봉급은 비슷한 교육을 받은 다른 직업군에 비해 약 20% 정도가 낮으며, 이는 2018년 여러 주에 걸쳐 대규모 교사 동맹파업을 불러오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선거기간 동안 교육 개혁의 일환으로 교사를 위한 내실있는 지원을 약속하는 데에 우선순위를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바이든 정부의 교사중심의 교육 기조는 30년 이상 교육계에서 일해 온 질 바이든 여사의 교육 경력과 무관하지 않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질 바이든 여사는 교육자에게 교육이란 직업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피력해왔다. 따라서 바이든 정부에서는 미국 내 교사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전문적 지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NPR의 기사에 따르면 현재 미국 연방 교육부는 학교 재정의 약 10%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 중 대부분은 저소득층 학생을 지원하는 타이틀원(Title-I) 재정에서 나오며, 그 규모는 약 160억 불이다. 바이든 정부는 이 재정을 세 배 늘려 교사들의 임금을 높이고 저소득층의 수업을 개선할 계획을 갖고 있다. 교사를 위한 재정을 증대함으로써 그들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교육 인력을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것이다. 또한 교사의 재정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교사들의 학자금 대출 면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더불어 교사를 위한 양질의 멘토링, 리더십 기회, 그리고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도 역시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실력 있는 교사가 이직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정책의 목표로 삼고 있다.

교육기회의 평등과 다양성 존중 강조

공평한 교육기회의 확대가 미래의 경제적 가치를 창조한다는 신념 아래, 바이든 정부는 사는 지역, 학부모 소득, 인종, 그리고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이 성공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가치를 내걸고 다양한 교육 정책을 제시했다. 먼저는 지역 간 교육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해 타이틀원 재정을 이용해 저소득층이 많은 학교에서도 양질의 수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인종 간 차별과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현재 대부분 백인 교사들로 이루어져 있는 교사 조직에 보다 다양한 인종의 교사들이 채용될 수 있도록 하고, 더불어 학생들의 다양성을 존중할 수 있는 여러 정책과 기금을 입안할 계획을 하고 있다. 또한 저소득층과 다인종 중심의 지역 학교에 혁신적인 학교 모델을 세워 학생들의 학업적 성취를 돕고, 문제해결력과 협업심을 기르도록 도울 계획도 갖고 있다. 장애 아동들을 위해서는 현재 특수 교육법에 보장되어있는 부가적인 재정 혜택을 보장하는 데에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원래 이 법에 따르면 특수 교육 학생들은 40% 정도의 부가적인 재정 보조를 받도록 되어있지만, 현재는 약 14%의 부가적인 재정 보조만 받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으로 10년 안에 특수교육 학생들이 제정된 보조를 완전히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나아가 중고등 학생들이 양질의 직업과 기술 교육을 받아 진로를 정하는 데에 있어서 더 좋은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사회적 배경과 상관없이 많은 중고등 학생들이 진로 직업교육을 통해 실용적으로 도움되는 학력을 인정받고, 새로운 기술인 컴퓨팅 사고를 배워 미래 산업인 가상현실, 인공지능 등의 분야에도 진출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 피력했다.



유아교육 기회의 확대

바이든 정부는 교육기회 확대의 일환으로 보편 유아교육을 내세웠다. 이에 따라 모든 3~4세의 아동이 양질의 보편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정부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 시절 보편적 유아교육의 다양한 이점을 강조했다. 학습이 시작되는 결정적 시기인 유아기에 보편적 유아교육이 실시되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 간의 평생에 걸친 학습 격차를 줄이며, 부모들의 고용기회를 늘려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더불어 유아기의 신체적, 정서적 발달을 위해 소아과와 연계를 통해 아동을 위한 적절한 지원을 보장한다는 정책도 내세웠다. 지역 보건소에 유아 발달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는 재정을 보조하고, 저소득층 아이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의 소아과에 유아 발달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는 재정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또한 가정 방문을 위한 재정을 지원해, 더 많은 아동과 부모들이 유아 발달 전문가의 지속적인 방문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정책도 계획하고 있다.

고등교육의 지원 확대

바이든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 중에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고등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안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먼저 2년제 지역 대학교를 학생들이 무상으로 다닐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제도를 통해 일을 하면서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이나 서류상 등록되지 않은 이민자의 자녀, 고등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했던 사람들이 고등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나아가 더 나은 취업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공립 대학교를 무상으로 다닐 수 있는 저소득층의 대상을 확대하고, 연방정부의 학자금 대출을 점진적으로 경감해주거나 탕감해주는 정책을 다방면으로 입안하려고 한다. 초중등 교육에서 강조되던 공적 교육의 강화, 다양성 강조 역시 고등교육 정책에서도 확인된다. 영리목적은 추구하는 고등교육 프로그램의 투명성을 강조하여 학생들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도록 하는 데에 힘을 쓰고, 소수인종을 중심으로 한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등학교와 연계한 진로 및 기술 교육의 강화 역시 고등교육에서도 강조하고 있다. 주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고등학생들이 대학 등에서 다양한 진로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좋은 직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전인적 교육 확대와 안전한 학교 환경조성

바이든 정부는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들의 정신적, 심리적 지원을 강화하는 데에도 중점을 둔다. 이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정신적으로도 심리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정부는 학생들이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안정되었을 때 학업적 성취도 따라옴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먼저 학교 상담사, 양호 교사, 사회 복지사 등 학생들의 건강과 보건 관련 인력을 두 배로 늘릴 것을 약속했고, 학교를 중심으로 학생과 가족들에 대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도 힘쓸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학력 평가 중심의 교육을 탈피하고, 학생들의 감성과 사회성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전인적 교육 역시 중시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 총기 관련 사고를 없애고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학교 내 총기 관련 규제를 강화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바이든 교육 정책의 시사점과 정책 이행의 모색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바이든 정부는 굵직굵직한 정책을 내세우며 교육 예산의 상당한 증액과 교육 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먼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 학교, 대학교 그리고 유아교육 시설의 재정적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유아교육부터 초중등, 고등교육의 광범위한 분야에 이르는 포괄적인 정책을 통해 공교육을 강화하고 보편교육을 확대하여 교육기회의 평등을 확보하는 데에 방점을 두고 있다. 저소득층, 소수인종, 장애 학생 등 그동안 사회적으로 소외되었던 학생들에 대한 지원 확대, 보편적 유아교육의 확대, 고등교육에 대한 학비 보조 등을 통해 모든 학생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정책을 개편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그동안 미국 교육계에서 지속적인 문제로 여겨졌던 교사 부족 현상, 인종 및 계층 간의 교육 격차, 학력평가 중심의 경쟁체제 등에서도 연방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예고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교육 예산을 늘림으로써 교사들의 사회적 처우를 높여, 궁극적으로는 능력 있는 교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돕고, 그러한 교사들이 이직하지 않도록 하는 유인책으로 쓸 것으로 보인다. 학생 인권 및 차별 문제에 있어서도 다양성, 평등, 포용 중심의 교육 정책을 통해 인종 간, 계층 간의 갈등을 완화하고, 교육 기회에서 소외되는 학생들이 없도록 다양한 재정적 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존의 학력평가를 통한 학력 중심의 교육 체제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학업 성취뿐 아니라 정신 건강 증진, 안전, 정서적 안정 및 사회성 발달을 위한 교육 체제를 수립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다양한 일간지와 방송에 따르면, 그동안 재정적 어려움을 겪던 교육계는 지원 중심의 바이든 정책을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인 듯하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이 심화되었던 대학들과 공교육에 대한 지원을 요구했던 교사들, 행정가들은 교사 중심, 공교육 중심의 교육 정책을 반기고 있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의 교육개편을 위한 야심찬 계획의 성공 여부는 바이든 정부가 국회와 얼마나 긴밀하게 협조하는가 그리고 얼마나 기민하게 코로나 정국에 대처하는가에 달려있다. 바이든 정부가 약속한 막대한 재정 지원 정책은 많은 경우 국회의 동의를 필요하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작은 정부를 추구해왔던 공화당의 상원 의원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의 과제가 남아 있다. 많은 고등교육 관계자들 역시 대학들을 위한 재정적 지원은 반기면서도, 무상 2년제 지역대학교 교육이나 공립 4년제 대학교 학비 경감 정책 등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Inside Higher Education에 따르면, 여러 대학 관계자들이 이러한 학비 경감 정책들은 실행하는 데에 비용이 많이 들고,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보인다. 다양하게 실시되는 유초중등 대상 정책들에 있어서도 주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이 관건이다. 지방자치가 발달한 미국에서 교육 정책의 많은 중요한 결정권은 주정부와 교육구에 있다. 바이든 정부의 많은 교육 정책이 재정적 지원과 법안의 입안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 따라서 재정적 지원이 확정되더라도, 주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이 있어야 원래 이루려던 목적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정부의 야심찬 교육 개혁 정책이 얼마나 실현될지는 앞으로 더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전체적인 연방정부 교육 정책의 기조는 바이든 정부가 집권하는 기간 상당한 변화를 겪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참고문헌

- Blad, E. (2020, November 07) Joe Biden's Election as President Tees Up Massive Shifts for K-12 Policy. Retrieved from <https://www.edweek.org/policy-politics/joe-bidens-election-as-president-tees-up-massive-shifts-for-k-12-policy/2020/11>
- Fregni, J. (2021, January 22). The future of education under the Biden administration. Retrieved from <https://www.teachforamerica.org/stories/the-future-of-education-under-the-biden-administration>
- Kamenetz, A. & Nadworny, E. (2020, November 10). What A Biden Presidency Could Mean for Education. Retrieved from <https://www.npr.org/2020/11/10/933423976/what-a-biden-presidency-could-mean-for-education>
- Murakami, K. (2020, November 09) Biden's Victory Could Be Transformative. Retrieved from <https://www.insidehighered.com/news/2020/11/09/what-biden-presidency-could-bring-higher-education>
- National Strategy for the COVID-19 Response and Pandemic Preparedness [PDF file]. (2021, January). Retrieved from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1/01/National-Strategy-for-the-COVID-19-Response-and-Pandemic-Preparedness.pdf>
- Norwood, C. (2020, Dec 29). How Biden's Education Department will tackle pandemic and Trump-era policies. Retrieved from <https://www.pbs.org/newshour/politics/how-bidens-education-department-will-tackle-pandemic-and-trump-era-policies>
- Plan for Education Beyond High School: Joe Biden (2020, August 03). Retrieved from <https://joebiden.com/beyondhs/>
- Plan for Educators, Students, and Our Future: Joe Biden. (2020, October 02). Retrieved from <https://joebiden.com/education/>



잉글랜드의 소외 계층을 위한 교육 정책

윤태영(영국 런던대학교 교육연구소(Institute of Education, UCL) 박사과정, 연구원)



— 신자유주의 교육의 시작과 교육 불평등 확대

1976년 10월 18일 잉글랜드 제임스 캘러한(James Callaghan, 1912-2005) 총리의 옥스퍼드 대학교 러스킨 컬리지[Ruskin College Oxford] 연설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시작된 잉글랜드의 진보적이고 포용적인 국가 주도 교육에 종식을 고하고 새로운 교육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신호탄과 같았다. 급격한 세계화의 흐름 속에 교육과 산업(경제)의 보다 직접적 관계를 강조한 이 연설을 시작으로 모든 계층을 위한 공공재로서 정의되던 교육은 경쟁·효율·결과를 바탕으로 한 신자유주의[Neoliberalism]적 경제 논리가 지배하며, 자본에 의해 형성되고 소비되는 서비스 시장으로서 새롭게 정의되었다(Ball, 2017). 신자유주의적 교육시장에서는 모든 사회·경제적 계층이 동일한 수준의 교육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며, 교육서비스 소비자인 학부모와 학생들이 마치 백화점에서 물건을 고르듯 자신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적합한 교육서비스를 선택한다. 학교는 더욱 '가성비'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비싸지만 누구도 쉽게 따라 할 수 없는 '명품' 교육을 제공하는 등 나름의 경쟁력을 갖추어야 '좋은' 학교로 인식되고, 보다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의 선택을 받게 된다.

신자유주의적 교육 정책 기조는 1979년 정권을 탈환한 보수당[Conservative]에서 더욱 강화되었다. 특히, 소비자로서의 학부모 권리가 강조된 ‘학교 선택[school choice]’ 개념과 학생들의 학습 내용을 처방하고 성취 수준을 규정한 ‘국가교육과정[The National Curriculum]’의 도입으로 대표되는 ‘1988년 교육개혁법[1988 Education Reform Act]’ 제정은 신자유주의적 개방성과 신보수주의[Neo-conservatism]적 통제성이 절묘하게 조화된 새로운 교육 토양을 제공하였다. 이후, 1992년 설립된 ‘교육기준청[Office for Standard in Education]’은 엄격한 학교 감사 제도 운영을 통해 학교의 교육 내용과 방법을 통제함과 동시에 주요 시험 결과를 공개하는 이른바 ‘학교 순위표[school league table]’를 발표하여 학부모와 학교(교육) 선택을 부추기고 학교 간 교육 결과 경쟁을 더욱 심화시켰다.

보수적 지식인들은 경쟁 기반 선택이야말로 새로운 교육 평등 시대를 가져올 최적의 수단이라고 역설했지만(John Clark et al, 2006), 그들의 기대와 달리 강화된 경쟁은 심화된 교육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다. 2018년에 발표된 국제학업성취도평가[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결과를 해석한 잉글랜드 결과 보고서¹⁾에 따르면, 영국의 15세 학생들의 사회·경제적 계층 간 교육 격차는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매우 크다고 보고되었다²⁾. 또한 ‘교육정책연구소(The Education Policy Institute)’가 2019년 수행한 교육 격차 관련 연구³⁾에 따르면, 중학교 졸업 시점에서 취약(노동자) 계층 학생들은 일반 학생들에 비해 평균 18.1개월, 최대 22.6개월 이상 학습이 뒤처져 있다고 밝혀졌다. 일부 학자들은 상류층과 중산층의 사회·경제적 지위나 자본에 유리한 ‘학교 선택’과 같은 교육 정책이 오히려 소외 계층에게는 기회의 불평등을 의미하며, 계층 간 이동을 막고 있다고 지적한다(Vincent et al, 2010; Hutchinson et al, 2020).

— 1997-2010: 노동당의 소외 계층을 위한 교육 정책: 슈어 스타트와 엑셀런스 인 시티 프로그램

1997년 집권한 노동당(New Labour) 토니 블레어(Tony Blair, 1953-present) 정부는 전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교육 정책에서 완전히 벗어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실제로는 경제 발전을 위한 교육 경쟁 강화와 공정한 사회를 위한 교육 불평등 해소라는 다소 상충되는 개념이 혼합된 교육 목표를 세운 채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을 일부 계승하여 놀라움을 주었다(Ruth & Polina, 2013). 이러한 모순된 목표는 토니 블레어 정부가 영국의 저명한 사회학자이자 ‘제3의 길[The Third Way]’⁴⁾의 저자인 ‘앤서니 기든스(Anthony Giddens, 1938-present)’의 주장에 근거한 중도적 교육 정책 노선을 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이해된다. 신자유주의와 사회 민주주의를 모두 반대하는 앤서니 기든스의 ‘제3의 길’은 보수적 가치와 진보적 가치가 적절히 조화된 새로운 사회 발전 모델을 제안했다. 따라서 노동당 정부는 전반적인 교육 경쟁력 및 결과 강화를 위해 지난 보수당 정부에서 시작된 학교 선택과 학교 간 경쟁, 국가교육과정을 통한 통제, 교육기준청을 통한 책무성 강화 등의 정책을 유지하면서도, 교육 평등 확대를 위한 교육 예산의 증대, 유아 교육의 강화, 사회 정의와 포용 강조 등의 적극적 개입 정책을 동시에 도입하여 교육 결과 향상과 평등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자 했다(Adams, 2010).

통계에 따르면, 보수당 집권 말기(1997년) 전체 국내 총생산(GDP)의 4.5%에 불과했던 교육 지출은 노동당 집권 후 약 13년간 지속적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0년에는 전체 국내 총생산의 6.2%까지 증가되었다(Ruth & Polina, 2013). 교육

1) National Foundation for Educational Research, Achievement of 15-year-olds in England: PISA 2018 results, December 2019.

2) 최근 잉글랜드의 PISA 결과에 관한 The Education Policy Institution 분석 참조.

3) Education Policy Institute, Education in England: Annual Report 2020, August 2020.

4) 앤서니 기든스는 영국의 사회학자로서 신자유주의와 사회 민주주의를 모두 반대하고 자신이 ‘제3의 길’이라 주장한 새로운 사회 발전 모델을 제안한다. 제3의 길은 국가가 개인의 역할을 대신해 주는 전통적 사회 민주주의(복지 국가)를 반대하지만, 연대와 평등의 개념이 없는 신자유주의의 개인주의도 반대한다. 이와 같이 모호한 이념적 성격으로 제3의 길은 중도 좌파로 분류되기도 하고 진보적 자유주의로 분류되기도 한다(통합논술 개념여사전, 한림학사).

예산의 증가는 교사 고용 및 임금 증가와 행정 업무 감소를 의미했고, 학령인구 감소와 맞물리며 학급당 학생 수 감소로 이어졌다. 또한 이 시기에 시작된 보조교사(Teaching Assistants) 고용 정책 등과 조화되며 잉글랜드 학교 전체에 보다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소외 계층 지원 교육 정책들이 시행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노동당 정부의 소외 계층을 위한 교육 정책 중 가장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히는 것은 모든 학령기 어린이들에게 최선의 교육 출발점을 제공하고자 마련된 ‘슈어 스타트 프로그램(Sure Start Programme)’과 사회·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도시 학교에 추가 예산을 지원하는 ‘엑셀런스 인 시티 프로그램(Excellence in Cities Programme)’이었다.

슈어 스타트 프로그램(Sure Start Programme)은 노동당 정부 출범 당시 영국 아동의 상대적 빈곤율⁵⁾이 전체의 35%에 육박했으며, 절대적 빈곤율⁶⁾은 45%를 넘어섰다는 통계⁷⁾를 바탕으로, 정부가 4세 이하의 학령기 이전 자녀를 둔 소외 계층 가정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고자 시행되었다. 먼저, 정부는 잉글랜드 전역에 분포된 빈곤 가정 자녀들을 위한 학습 기술, 정신 및 신체 건강, 사회성 및 정서적 능력 발달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슈어 스타트 아동 센터’를 건립했다. 프로그램 마련과 인프라 구축을 위해 초기 3년간 투입된 예산은 약 8,100억원(£540 million)이었고, 이 기간 동안 약 15만 명의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경험했다. 곧이어 정부는 2010년까지 슈어 스타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을 전국 3,500개로 늘리겠다고 발표한 뒤, 2005년부터 슈어 스타트 프로그램의 구체적 운영 전반을 지방 정부에 이양했다. 현재 대부분의 슈어 스타트 프로그램은 슈어 스타트 아동 센터와 기타 자선단체나 교육 프로그램 제공 시설 기관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비단 빈곤층 자녀뿐이 아닌 해당 지역 모든 아동이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가 되었다. 일반적인 슈어 스타트 아동 센터에서는 하루 10시간 이상의 학습 및 아동 돌봄 서비스가 1년 48주 이상 제공되며, 육아도우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고, 육아 상담, 부모 대상 언어 및 소통 치료, 직업 훈련, 건강 돌봄 서비스 등 다양한 가족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런던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 중 하나인 캠든(Camden)구의 경우 모두 여덟 곳의 프로그램 제공 아동센터 및 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어린 아이를 키우는 캠든구 거주자라면 누구든지 위 프로그램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⁸⁾ 하지만 새 정부가 들어선 2010년부터 지금까지 슈어 스타트 프로그램 예산은 점차 삭감되었고, 지방 정부의 재정 부담이 증가하자 2011년에만 최대 250개의 프로그램 제공 센터가 문을 닫았다.⁹⁾ 더럼 대학교[University of Durham]는 지역 내 세 개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슈어 스타트 프로그램의 효과를 연구한 보고서¹⁰⁾에서 슈어 스타트 프로그램이 소외 계층 유아의 학교 학습 준비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국가 주도로 슈어 스타트 프로그램의 중·장기적 효과를 연구한 2008년,¹¹⁾ 2010년,¹²⁾ 2015¹³⁾년 연구 보고서[National Longitudinal Evaluation of Sure Start]들은 이 프로그램이 소외 계층 유아의 학습 뿐 아니라 노동자 계층의 전반적인 가정환경과 삶의 만족도를 끌어올리는데 상당 부분 기여 했다고 평가하였다.

당시 교육기술부[Department for Education and Skills]가 소외 계층 교육 환경 및 결과 개선을 위해 실시한 또 다른 대표적 정책은 ‘엑셀런스 인 시티[Excellence in Cities]’이다. 이 정책은 전국 72개 지역(약 1,300여 개 학교)을 ‘에듀케이션 액션존[Education Action Zone]’으로 지정하여 교육과정 최적화, 교사 처우 개선, 학부모 문해교육 등을

5) 영국에서 한 가정이 상대적 빈곤에 처해 있다는 것은 그 가정의 연간 전체의 수입이 영국 내 모든 가정의 연간 평균 수입의 60% 보다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필자 주).

6) 영국에서 한 가정이 절대적 빈곤에 처해 있다는 것은 그 가정의 연간 수입이 기준 연도(2020년 현재 2010/2011년)의 영국 내 모든 가정의 연간 평균 수입의 60% 보다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필자 주).

7) House of Commons Library, Poverty in the UK: Statistics, June 2020.

8) 런던 캠든 구의 슈어스타트 프로그램

9) 슈어 스타트 센터 폐쇄 관련 BBC 보도

10) 더럼 대학교 슈어스타트 프로그램 보고서

11) 2008년 National Longitudinal Evaluation of Sure Start 보고서

12) 2010년 National Longitudinal Evaluation of Sure Start 보고서

13) 2015년 National Longitudinal Evaluation of Sure Start 보고서

위한 예산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1998년 9월에 시작되었다. 에듀케이션 액션존의 학교들은 지역별로 네트워크를 구축한 후 예산 관리 단체인 '액션 포럼(Action Forum)'을 조직하여 예산의 구체적 계획을 세우고 교육기술부의 승인을 받았다. 2년 후, 에듀케이션 액션존 지정 학교 중 일부 학교들은 도시 내 낙후 지역 학교의 학습 결과 향상과 및 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시작된 '엑셀런스 인 시티' 프로그램에 편입되었다(Office for Standards in Education, 2003). '엑셀런스 인 시티'는 1999년 당시 25개 지역 교육청의 438개교로 시작하여, 이후 33개 지역 교육청 관할 600여 개 학교로 확대되었다. 각 학교는 재학생 한 명당 연간 약 18만 원(£120)의 별도 예산을 3년간 지원받았으며, 교육기술부가 지원한 예산 총액은 연간 약 5,250억 원(£350 million)에 달했다. 이 기금은 학습 결과(성취도) 향상, 다양성 추구, (학교 간) 네트워크 형성, 교육 기회의 확대라는 4대 목표 아래 학습 멘토(Learning Mentors) 고용, 교내 학습 지원 기구(Learning Support Unit) 설립, 도시 학습 지원 센터(City Learning Centres) 설립, 각 분야 영재 지원(Provision for students identified as 'gifted and talented') 등의 다양한 영역에 사용되었으며(Ruth & Polina, 2013), 소외 계층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그들에게 희망과 자신감을 불어 넣어 주고, 학생들의 전반적인 출석률, 행동 개선, (특히 영어와 수학) 학습 결과 향상 및 사회 통합에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되었다(Office for Standards in Education, 2003).

— 2010-2015: 보수당과 자유민주당 연정 정부의 소외 계층을 위한 교육 정책, 피플 프리미엄

노동당의 이러한 정책적 노력에도 소외 계층 가구의 비율¹⁴⁾과 계층 간 교육 격차는 좀처럼 눈에 띄게 줄어들지 않았다. 이러한 가운데 실시된 2010년 5월 총선은 뚜렷한 승자 없이 끝났고, 결국 보수당(Conservative)과 자유민주당(Liberal Democrat)이 연정 정부(Coalition Government)를 꾸렸다. 새 정부의 가장 큰 교육 분야 과제는 교육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학생들의 교육 결과를 뚜렷하게 향상시키고, 지식·정보 사회를 이끌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인적 자원을 길러내는 것이었다(Adams, 2014). 이러한 맥락 가운데 마련된 연정 정부의 소외 계층 교육 지원 정책은 노동당 정부의 그것과 표면적 목표(교육 결과 향상과 교육 평등 확대라는 두 가지 목표의 공존)는 같았지만, 이면적 본질은 달랐다. 노동당 정부에게 소외 계층을 위한 교육이란 교육기회의 확대를 통해 사회·경제적 계층 간 격차를 줄이는 보다 근본적 목표 달성을 위한 하나의 중요한 영역이었지만, 연정 정부에게 그것은 국가의 전반적인 교육 결과 향상과 경쟁력 있는 개인 양성이라는 단기적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여겨졌다. 따라서, 연정 정부의 소외 계층 교육 지원 정책들은 국가 전체의 교육 결과 향상을 위한 교육 책무(통제)성 정책과 학교 간 경쟁을 촉진하는 정책들의 큰 틀 속에서 시행될 수 밖에 없었고, 그 중 대표적인 정책은 '피플 프리미엄(Pupil Premium)'¹⁵⁾이다.

'피플 프리미엄(Pupil Premium)'은 공립학교에 재학 중인 취약 계층 아동(Disadvantage Children)(무료급식대상자와 돌봄대상자)¹⁶⁾들의 학업 결과 향상을 위해 각 학교에 지급되는 별도의 정부 지원금이다. 2011년, 교육부는 학생 한 명당 약 73만 원(£488)을 지원하였으며, 이 금액은 2012년에 약 90만 원(£600)으로 증액되었고, 2021년 현재는 무료급식 대상 초등학생 한 명당 약 211만 원(£1,345), 중학생 한 명당 약 143만 원(£955), 돌봄대상자 한 명당 약 351만 원(£2,345)으로 증가했다. 이 정책의 구체적 해석(지원금의 사용 용도)은 각 학교에 맡겨지지만, 기본적으로 학교는 연수 프로그램 등을 통한 교원 전문성 향상 및 일대일 및 소그룹 학습 교습, 학습 보조교사 고용 등 교과 학습 지원 영역에 지원금을 사용하고 교육기준청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학교는 재량으로 활용 폭을 넓혀 학생들의 교육

14) 2010년 기준 상대적 빈곤아동 비율은 약 33% 이상, 절대적 빈곤율은 30% 정도였음 (House of Commons Library, Poverty in the UK: Statistics, June 2020.)

15) 잉글랜드 교육부의 'Pupil Premium' 정책 안내

16) 우리나라의 '취약 계층 아동 또는 사회보장 대상자' 등과 상응하는 개념으로 잉글랜드에서 사용되는 'disadvantage children'은 각 지방정부에서 각 가정의 소득 수준을 고려해 선정하는 학교 무료급식(Free School Meals) 대상자와 돌봄 대상자(Looked-after children)를 일컫는다(필자 주).

결과 향상에 간접적 영향을 주는 다양한 영역에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학교들은 이 지원금을 활용하여 아침을 제공하거나, 예체능 활동, 체험활동, 언어 및 행동 치료 등을 지원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일부 학교들은 이 지원금을 대상 학생들의 진로 찾기와 자신감이나 회복력 향상을 위한 활동을 기획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수혜 대상자의 범위를 넓혀 정부 지원의 경계선 또는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을 지원할 수도 있다. 2013년, 교육부는 퓨필 프리미엄의 사용 및 효과에 관한 보고서¹⁷⁾를 발간하였는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학교들은 지원금이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된 영역으로 추가 직원(교사, 행정 직원 등) 고용(75%), 수업 중(보조 교사를 활용한) 수준별 학습 지원(70%), 수업 외 학습 지원(일대일 교과 교습 등, 60%) 등을 꼽았다. 또한, 지원금을 수령한 학교들은 대부분 이러한 방향성의 정부 개입 정책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 이유는 지원금의 활용이 소외 계층 학생들의 학습 결과 향상 뿐 아니라 출석률 증가, 자신감 향상, 문제 행동 개선 등 전반적인 학습 태도의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학생 프리미엄이 여러 가지 책무성 및 경쟁 기반 교육 정책들의 틀 내에서 시행되었기 때문에 보다 중요시되는 다른 정책들의 간섭 및 지배 현상을 피할 수 없었다.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퓨필 프리미엄 예산이 소외 계층을 위한 교육 지원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기보다 학교 전체의 교육 결과를 끌어올리기 위해 전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연정 정부의 가장 대표적인 책무성 정책 중 하나인 강화된 교육기준치의 감사제도와 가장 대표적인 경쟁 기반 교육 정책 중 하나인 ‘아카데미(Academy)’ 학교제도의 도입을 퓨필 프리미엄과 연관 지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잉글랜드 교육기준치는 잉글랜드 교육부에 등록된 모든 교육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교육 결과 및 성과 중심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감사 결과에 따라 학교를 네 가지 등급¹⁸⁾으로 분류한다. 그 중 가장 낮은 등급인 ‘부적합(inadequate)’ 등급을 받은 공립학교들은 시급히 개선해야 할 교육 영역이 명시된 보고서를 받게 되고 교육 활동에 규제를 받게 될 뿐 아니라 보다 효율적 학교 운영과 교육 결과 향상을 위한 새로운 학교 형태인 아카데미로의 전환을 강하게 요구받는다. 아카데미는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지만 관할 교육청의 직접적인 관리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자율학교이다.¹⁹⁾ 공립학교가 아카데미로 전환되면 국가교육과정을 따르지 않아도 되며, 교사들의 급여를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고, 수업 일수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게 되는 등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받는다. 하지만 여전히 교육기준치의 철저한 감시 아래 놓이기 때문에 아카데미의 자율성은 교육 결과 향상 극대화에 활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아카데미에 지원된 퓨필 프리미엄 역시 소외 계층의 구체적 필요를 위해 사용되기보다 학교의 전반적인 교육 결과 향상에 도움을 주는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2015년에 ‘The National Audit Office’에서 발간한 보고서²⁰⁾는 “퓨필 프리미엄은 소외 계층 아동들의 학습 결과 향상에 분명히 개선시킬 것이지만 투자 대비 효과를 장담하기엔 이르며 아직 갈 길이 멀다.”라고 평하며 퓨필 프리미엄의 사용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2019년에 발간된 ‘All-Party Parliamentary Group on Social Mobility’의 보고서²¹⁾와 ‘The Education Committee’의 보고서²²⁾는 “퓨필 프리미엄의 상당액이 보조교사 채용에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예산이 보다 합목적적(소외 계층의 직접적 지원)으로 사용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 교육을 통해 계층 이동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영역에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해에 실시된 ‘Sutton Trust’의 설문²³⁾ 결과 설문에 참여한 교사 중 55%는 퓨필 프리미엄이 교육

17) TNS BMRB, TECIS, Centre for Equity in Education, University of Manchester & Newcastle University, Evaluation of Pupil Premium Research Report, July 2013.

18) 감사 결과는 가장 높은 등급부터 낮은 등급 순으로 outstanding, good, require improvement, inadequate이며, 등급에 따라 차기 감사 시기와 횟수 및 개선 과제 등이 다르게 부과된다. 모든 학교의 감사 결과 보고서는 일년에 공개된다(필자 주).

19) 연정 정부 출범 시기인 2010년에 203개의 학교가 아카데미로 전환 되었다. 2019년 1월 기준 전국의 모든 공립 중·고등학교 중 77%, 공립 초등학교 중 35%가 아카데미로 전환되어 9,000개에 이르고 있다(출처: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open-academies-and-academy-projects-in-development>).

20) National Audit Office, Funding for disadvantaged pupils, June 2015, p11.

21) All-Party Parliamentary Group on Social Mobility, Closing the Regional Attainment Gap, February 2019, pp3&5.

22) Education Committee, A ten-year plan for school and college funding, 19 July 2019, HC 969, HC 969 2017-19, pp25-32.

23) School funding and pupil premium 2019, Sutton Trust, 18 April 2019.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지만, 15%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했고, 특히 설문에 참여한 중·고등학교 교사의 27%는 “퓨필 프리미엄이 소외 계층을 위해 사용되기보다 학교의 다른 부족함(인프라 구축, 인력 부족 등)을 채우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The Social Mobility Commission’의 보고서²⁴⁾도 동일한 맥락에서 “정부는 퓨필 프리미엄이 정말 소외 계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지 들여다보아야 하며 학생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차등 지급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2015-2021: 보수당과 팬데믹 그리고 소외 계층을 위한 교육 정책, 캐치업 프리미엄

잉글랜드 소외 계층의 교육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 것은 코로나바이러스(Covid-19)의 전국적 대유행으로 인한 학교 폐쇄 조치였다. 2015년에 집권한 보수당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의 급속한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1차 국가봉쇄가 시작된 2020년 3월 20일부터 같은 해 9월 첫 주까지, 그리고 3차 국가봉쇄가 시작된 2021년 2월부터 현재까지 전국의 모든 학교에 폐쇄령을 내렸다. 학교 폐쇄와 함께 시작된 원격 학습의 질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자본, 부모의 참여 정도, 가정의 온라인 수업 인프라 등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교육정책연구소’[Education Policy Institute]는 최근 보고서²⁵⁾에서 16-19세(우리나라의 고등학교 시기)가 교육 공급이 가장 느슨해 질 수 있는 시기임을 지적하며, 코로나바이러스 발생 이후, 중학교 졸업자격시험(GCSE)과 대입수학능력시험(A-Level)이 치러지지 못하는 상황으로 인해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이 공급되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한 성적이 부여되며, 실업률이 증가 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또한 ‘Children’s Commissioner’에서 발간한 보고서²⁶⁾는 경제적 빈곤 가정의 자녀는 공부할 수 있는 조용한 공간을 가정에서 얻기 힘들고, 인터넷 접속이 어려우며, 학업에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없는 부모 또는 보호자와 살고 있기 때문에 부유한 가정의 자녀보다 학업 성취도가 뒤처질 위기에 놓였다고 지적하였다.

예상치 못했던 위기가 닥치자 2020년 7월 잉글랜드 교육부[Department for Education] 장관 가빈 윌리엄슨[Gavin Williamson, 1976-present]은 코로나바이러스가 벌려 놓은 교육 격차를 봉합하고, 원격 수업으로 인한 학습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캐치업 프리미엄’[Catch-Up Premium]²⁷⁾ 정책을 마련하였으며, 이 정책 사업에 약 1조 5000억 원(£1 billion)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이 예산 중, 약 9,750억 원은 공립학교 학생들의 교육 격차 및 학습 손실 해소를 위해 사용하고, 나머지 약 5,250억 원은 소외 계층 학생을 위한 ‘내셔널 튜터링 프로그램’[National Tutoring Programme, 국가 주도 개인·소그룹(교과) 교습 지원 프로그램]²⁸⁾에 투입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캐치업 프리미엄은 앞서 소개된 바 있는 퓨필 프리미엄을 모태로 한 정책으로서 잉글랜드 교육부 등록 공립학교에 재학 중인 준비학년(Reception)부터 11학년(중학교 졸업 학년)까지의 학생에게 한 명당 £80(약 12만 원)을 지원하는 일회성 교육 격차 및 학습 손실 해소 지원금이며, 내셔널 튜터링 프로그램은 소외 계층 학생 등 가장 절실하게 교과 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에게 일대일 개인 교습이나 학습 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2020년 9월부터 일선 학교에 캐치업 프리미엄이 지급되었고, 2021년 상반기까지 모든 학교에 지원금 배분을 마치게 되는 가운데, 각 학교는 지원금을 활용한 각종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행하느라 분주하다. 예를 들어 잉글랜드 중서부 지방에 위치한 ‘블랙히스 초등학교’[Blackheath primary school]²⁹⁾의 경우 약 5,352만 원(£35,680)의

24) Social Mobility Commission, State of the Nation 2018-19: Social Mobility in Great Britain, April 2019, pp v & 52.

25) Education Policy Institute, Preventing the disadvantage gap from increasing during and after the Covid-19 pandemic, May 2020.

26) Children’s Commissioner, Tackling the disadvantage gap during the Covid-19 crisis, April 2020.

27) 정책 원문

28) National Tutoring Programme 공식 웹사이트

29) Blackheath primary school의 Catch Up Premium 사용 계획

예산을 수령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그 중 약 2,920만 원(£ 19,482)을 학업 성취도 수준이 중간 또는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의 교육 격차 및 학습 손실 회복을 돕는 소그룹 교과 멘토 고용 프로그램에 사용할 예정이다. 잉글랜드 북동부 '뉴캐슬(Newcastle)'에 위치한 '백워스파크 초등학교[Backworth Park Primary School]'³⁰⁾은 약 2,424만 원(£ 16,160)의 예산을 지급 받을 예정인데, 이 예산은 일대일 읽기 개인 교습, 64대의 태블릿 컴퓨터 구입, 다양한 교과용 및 참고용 도서 구입 등의 용도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캐치업 프리미엄을 수령하는 학교는 정부가 마련한 예산 집행 가이드라인³¹⁾과 각 학교가 처한 상황에 따라 적절한 예산 사용 전략을 세워 각 학교의 웹사이트에 게재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내셔널 튜터링 프로그램(일대일 개인 또는 소그룹 교과 교습)을 포함하고 있다.

캐치업 프리미엄과 내셔널 튜터링 프로그램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정책인 만큼, 이 지원금들이 소외 계층의 교육 지원에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에 대한 믿음만한 연구결과나 보고서는 아직 출간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전개 양상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 소외 계층을 위한 잉글랜드의 선택

1997년부터 2000년까지 집권했던 노동당 정부를 제외하면,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대부분의 잉글랜드 정부는 소외 계층의 교육적 필요를 집중적이고 포괄적으로 지원하는데 집중하기 보다 통제와 경쟁을 통해 학교의 전반적인 교육 결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렇게 강화된 신자유주의적 결과 및 경쟁 기반 교육 문화 속에서 학교 선택은 너무나 당연한 교육소비자들의 권리가 되었다. 6학년 또는 11학년 자녀를 둔 중산층 이상의 부모들은 매년 1, 2월 또는 그 이전부터 자신의 자녀를 위한 최적의 학교를 고르는데 분주하지만, 노동자 계층의 자녀들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거주 지역의 공립학교를 보내는 것 외에 별다른 선택지가 없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학부모들의 선택을 많이 받지 못하는 낙후된 지역의 공립학교 대부분은 예산도, 인력도, 시설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교육기준청 감사를 통과하기 위해 해야 할 다른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소외 계층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집중할 여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소외 계층이 가장 많이 분포해 있는 도시 낙후 지역 학교들의 경우 소외 계층을 위한 지원금인 류필 프리미엄이나 캐치업 프리미엄이 의미 있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신자유주의적 능력주의와 자본주의에 부리를 둔 정책들이 강력하게 지배하는 현재 잉글랜드의 교육 환경 속에서 교육 당국은 과연 진정으로 소외 계층의 필요를 지원하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여 사회 통합을 이루어 내고자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깊어지는 가운데, 오늘도 수많은 아이들이 벌어지는 빈부 격차와 교육 격차로 인해 꿈을 포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지울 수 없다. ❀

참고 문헌

- Adams, P. (2014) Policy and Education. Abingdon: Routledge.
- Clarke, J., Smith, N. & Vidler, E. (2006) The indeterminacy of choice: political, policy and organisational implications, *Social Policy & Society*, 5(3), 327-336.
- Office for Standards in Education. (2003). Excellence in Cities and Education Action Zones: management and impact. HMI 1399.
- Ruth, L. & Polina, O. (2013) Labour's Record on Education: Policy, Spending and Outcomes 1997-2010. *Social Policy in a Cold Climate*, Working Paper 3. LSE.
- Vincent, C., Braun, A. & Ball, S.J. (2010) Local links, local knowledge: choosing care settings and schools. *British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36:2, pp. 279-298.

30) Backworth Park Primary School의 Catch Up Premium 사용 계획

31) Catch Up Premium 가이드라인

소황제(小皇帝)의 등장과 중국의 가정교육

김현진(중국 대련한국국제학교 교사)



● 아이들로 붐비는 중국 베이징 왕푸징의 레고 매장 앞 ●

중국 베이징의 대표적 쇼핑가로 꼽히는 왕푸징 거리에는 미국 명품 보석 브랜드 ‘티파니’와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프라다’ 매장 사이에 덴마크 완구 브랜드 ‘레고’ 매장이 자리 잡고 있다. 전 세계의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레고의 이곳 매장은 중국 중산층 임금에 비해 비싼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과 그 부모로 인산인해다. 레고 블록을 가지고 놀면서 손 근육과 창의력을 발달시킬 수 있다는 기대심리가 근래 중국 부모들에게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곳곳에 레고 블록 교육장도 심심찮게 보인다. 한국 이상으로 높은 중국 학부모들의 교육열이 레고

판매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에 판매 수치는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 전 세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황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치열한 교육 시스템은 하나밖에 없는 자녀에게 고가의 레고를 선물하는 통 큰 중국 부모들의 지갑을 열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 중국의 인구 정책과 함께 등장한 소황제(小皇帝)

중국은 공식적인 인구가 14억 3천만 명이 넘는 세계 최대 인구 보유 국가이다. 중국의 역사에는 넓은 땅과 함께 많은 인구가 자주 등장한다. 여러 나라의 정복 전쟁이 있었고 이에 많은 병력을 동원했다는 기록들이 있다. 초한지에 나오는 한신은 백만 대군을 거느렸다고 하고, 한국 전쟁에는 인해전술을 펼쳐 연합군이 후퇴할 정도였다. 신 중국 초기 공산당은 경제정책 실패와 폭발적인 인구 증가로 식량문제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게 된다. 그래서 문화대혁명이 끝난 후인 1979년부터는 한 가구에 한 자녀만 허용하는 정책을 펼쳤다. 1가구 1자녀 정책으로 인해 태어난 세대를 바링허우(80년대 이후)와 주링허우(90년대 이후)라고 부른다. 2000년부터 2009년 사이에 태어난 링링허우 세대 이후에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노동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자녀 정책을 시행하게 됐다. 중국은 인구제한정책을 아예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은 유지하고 있다.



•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중국의 기차역 •



• 자녀들과 함께하는 중국의 가족 모습 •



• 부모교육의 중요성(출처: 바이두) •

바링허우(80後) 세대는 덩샤오핑(鄧小平)의 개혁·개방 이후 태어난 세대를 일컫는다. 정확히는 1979년 중국의 '한 가구 한 자녀 정책' 이후 1980년대에 출생한 세대를 지칭한다. 외동으로 태어나 어린 시절에는 샤오황제(小皇帝, 소황제) 또는 샤오공주(小公主, 소공주)라 불리기도 한다. 심지어 조상처럼 높이 받드는 아이라 하여 소유주중(小祖宗)이라고까지 불린다.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세대이기 때문에 이전 세대보다 상대적으로 개방적이고 개인주의적이며, 개성적이고 소비지향적인 성향이 있다. 이전 세대보다 소득이 높고 SNS 등을 통한 정보 공유에 능한 것도 바링허우 세대의 특징이다. 바링허우 세대는 경제력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중국의 강력한 소비자층으로 등장했다. 2014년 중국인 해외 여행객의 절반 이상이 바링허우 세대로 알려져 기업들의 마케팅 대상으로 주목 받았다. 그동안 중국 사회에서 바링허우 세대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많았다. 기성세대들은 독생자녀로 태어나 소황제로 성장한 바링허우 세대는 고생을 겪지 않아 나약하고 이기적이며, 국가와 사회, 국민에 대한 책임감이 결여돼 있다면서 중국의 장래가 걱정된다는 비판을 해왔다. 실제로 이들은 중국 건국 초기의 어려움이나 문화대혁명 같은 어두운 시기를 지내지 않았고, 개방개혁 이후 경제성장의 혜택을 온전히 받아왔다. 이들은 중국의 혁명과 건국의 역사나 공산주의 이론보다는 개혁개방에 따른 부의 추구, 개인적 성공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인다. 그래서 이들 세대가 인용되는 것은 소비문화, 기업들의 마케팅 공략대상과 관련된 경우가 많다.

유교 문화의 본고장인 중국은 어릴 때부터 가정과 학교로부터 예절 등을 배워 왔지만, 시대의 변화와 함께 등장한 소황제들의 문제로 인해 이제는 가정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금 이야기하고 있다. 부모의 과보호와 맹목적인 사랑 속에서 자란 소황제들은 대개 버릇이 없고 자기만 아는 작은 폭군으로 자라나고 있어 또 하나의 사회문제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교육인 학교 교육 이전에 가정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 가정교육과 부모교육의 중요성

좋은 가정교육은 좋은 학교를 선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있다.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가정교육은 학교 교육과 사회 교육의 기초가 된다. 가정교육은 살아가는 평생에 걸쳐 이뤄지며, 하나의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한 기둥이 되어준다. 아이들이 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가정교육은 학교 교육의 기초일 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확장시키는 역할까지 한다. 심리학자 Yan Bin은 가정교육은 삶의 기초와 출발점으로 인간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삶의 최종 목표 달성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고대 중국 문헌인 사마광 '가범(家範)', 양지추 '가훈(家訓)' 등에서는 가정교육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교육은 주로 학교에 의해 수행되지만 가정에서의 교육이 학교 교육 이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가정과 학교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도덕적, 지적, 스포츠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하였다. 모든 국가의 가정교육 개념의 진화 과정을 요약하면, 부모가 일상생활에서 의도적으로 생활방식, 감정, 의사소통 및 여러 수단을 통해 긍정적 영향을 주면 이런 부분들이 아이가 사회 활동을 하는 데 평생토록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최근 소황제로 지칭되는 학생 및 요즘 세대들의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가 더욱더 증가 추세에 있고, 이들과 얽힌 일들이 언론들을 통해 주목을 받고 있다. 많은 연구에서는 이 문제의 원인을 결국 성인에게 있다고 보는데, 부모, 교사 그리고 다른 성인들의 아이들에 대한 양육방법 및 교육 관념이 부정확하거나 부적절하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아이들이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환경인 가정 내 부모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올바른 가정교육을 위해서는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영향을 주는 부모교육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부모는 심리분석을 통하여 자신을 꿰뚫어 볼 수 있어야 하고, 자녀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소통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부모는 이러한 자질을 갖추기 위해 다양한 학부모 교육에 관심을 갖고 실천해야 하는 것이다.

중국 부모교육의 내용은 교육관념, 교육지식에서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중국 부모의 교육관념은 남을 교육하려면 먼저 자신을 교육해야 하며, 현대의 부모라면 반드시 먼저 새로운 관념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관념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가정의 교육문제는 잘 처리되기 어렵다. 그러므로 부모교육의 우선적인 내용은 부모의 새로운 가정교육관념 성립을 위해 부모의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두 번째 내용은 부모에게 필요한 가정교육의 지식, 즉 기본적인 교육학과 상대방에 대한 이해 교육이다. 부모교육의 세 번째 내용은 부모가 아이를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방법을 파악하도록 하는 것이다. 부모의 절대적 권위는 이미 시대에 도태되었고, 체벌과 비난의 형태는 교육에 적용되지 않고 있다. 부모가 먼저 올바른 교육태도를 가지는 것이 자녀를 가르치고 양육하기 위한 중요한 기초가 될 것이다.

부모의 올바른 교육을 위해서는 자녀의 학습 동기를 북돋우고 자녀의 흥미를 높이는 방법, 자녀의 정서와 감정을 발달시킬 수 있는 방법, 강한 의지를 갖춘 자녀로 성장하도록 하는 방법,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정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방법 등이 필요하다.

— 중국 가정교육의 문제점과 해결방법

코로나19로 인해 중국도 오랫동안 원격수업을 실시해 왔다. 중국 교육부와 각 성의 교육국에서는 이번 기회를 중국교육에 있어 획기적인 전환 기회로 보고 원격수업의 여러 문제점을 점검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원격수업의 특징상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학생의 답답하고 위축된 마음이 가족들에게 표출되면서 부모와 마찰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시대의 변화와 함께 교육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있긴 하지만, 중국의 교육은 아직도 한국의 80~90년대와 비슷한 부분들이 많다. 학교 선생님들이 엄하게 체벌을 하는 경우도 있고 부모가 길가에서 자녀를 때리며 혼내는 경우도 있다. 야기고 사랑하기에 엄하게 하는 경우도 많지만, 최근 가족교육에 관한 법률 초안이 중국 전국인민대표 상임위원회 회의에 제출되어 심의되었으며 가정교육이 어떤 형태든 가정 폭력과는 다름을 경고하고 있다.

소황제를 나오게 한 중국 가정교육의 문제점과 해결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리나라의 상황과 비교해 보자.

첫째, 집마다 하나밖에 없는 자녀로 인해 부모가 자식에 대해 과보호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자녀에 대한 지나친 관심이 때로는 아이들의 보이지 않는 심리적 요구를 무시하게 하거나 아이들의 능력에 맞는 적절한 발달이 이뤄지지 않게 만들 수 있다. 아이가 달리고 싶어 하거나 놀고

싶어 할 때, 일부 부모는 아이가 다칠까 봐 이를 못 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 부모의 배려는 행동 개입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의사소통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과도한 개입은 자녀의 잠재력 개발을 방해할 수 있다.

둘째, 지나친 애정을 가지고 있다. 자식에 대한 사랑은 당연하지만, 과도한 애정은 역효과를 낼 수 있다. 근래 아이들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부모가 바로 충족을 시켜주므로 항상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살아가면서 아이들은 항상 만족할 수 없다. 부모의 도움을 받아 언제나 만족감을 얻던 아이가 뜻하지 않게 좌절을 겪게 되면 외로움, 변덕, 이기심을 비롯해 기타 여러 문제적 성격이 나타날 수 있다. 중국의 유명한 심리학자인 Yan Bin은 부모가 자녀의 정신 건강에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성격 특성에 따라 적절한 교육 방법을 모색해야 하며, 무엇보다 거칠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문제점이 생겼을 때 전문적인 도움을 구하여 심리적 문제가 자녀의 삶과 학습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자녀의 인생에 평생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부모가 지나치게 자녀의 요구 사항에만 귀 기울이고 모든 것을 해주게 되면 정작 아이들은 스스로 하게 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이면서 의존적이고, 익숙하지 않고, 참지 못하고, 자신을 돌보는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 부모의 지나친 사랑이 아이가 약한 성격을 형성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결국 부모들은 자녀가 무능력해지도록 그들에게 친절하게 대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와 스스로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아이들로부터 빼앗는 것과 같다.

셋째는 부모가 자녀의 발달에 관계없이 일찍 배우고, 견고, 글을 쓰도록 강요한다는 것이다. 아이의 신체적, 정신적 불균형은 심리적 위축, 불안, 무관심, 퇴행 및 기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또한 학습을 거부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과의 어울림을 이해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넷째, 부모가 지나치게 독재적이라는 것이다. 종종 화를 내거나 큰 소리로 아이의 행동을 정형화하고, 자유를 제한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들은 아이를 공황 상태로 만들게 된다. 이럴 때 아이는 자신을 표현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면서 자신감을 잃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에 용기를 잃게 된다. 또 좌절로 인한 불만을 터뜨리기 위해 아이는 자신보다 어린 아이를 괴롭힌다. 아이가 자랄 때 부모에 대한 증오를 가질 수도 있다.

다섯째, 아이에게 가혹한 말을 한다. 부모는 가혹한 말로 자녀를 비난하지 말아야 하며, 아이가 잘하지 못하더라도 부드럽게 조언하여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많은 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높은 기대를



• 중국 가정교육의 문제점(출처: 바이두) •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해 자녀를 칭찬하는 데는 인색하다. 그들은 아이들을 비난하는 말을 교육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칭찬의 놀라운 교육 효과를 무시하는 것이다.

여섯째는 아이의 장점을 무시하는 것이다. 중국인은 겸손하기 때문에 일부 부모는 자녀를 칭찬하는 데 익숙하지 않아, 못한 일에 대해서 자녀를 비판하기만 한다. 사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평가에서 단점을 언급하는 경우가 많을수록 자녀는 자신에 대한 능력을 의심하게 된다. 이는 자신감 하락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잘못을 해도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기도 한다.

일곱 번째, 부모는 자녀의 좋은 행동들을 봤을 때 자녀를 칭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은 어떻게 칭찬을 받을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더 나은 행동을 강화하기 위한 칭찬이 구체적일수록 아이들은 어떤 행동이 좋은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이로써 더 나은 행동을 위해 노력을 하게 된다.

여덟 번째는 말하기를 제한하는 것이다. 아이들은 질문하는 것을 좋아하나 일부의 부모는 지루해하거나, 자녀가 질문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자녀에게 무언가를 물었을 때 어떤 부모는 아이 대신 대답한다. 이는 아이들이 말하며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 자기표현 능력의 발달을 방해하며, 더 나아가서는 부모와 이야기하지 않으려는 결과를 낳게 된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자녀의 표현 능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미래의 사회적 의사소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아홉 번째 아이의 잘못을 비판하는 것이다. 부모가 아이의 잘못을 비판하고 단점을 입에 담으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꾸짖는 것은 아이들에게 창피함을 느끼게 한다. 이런 행동은 아이의 자존심을 심각하게 손상시키고, 성장을 퇴보시키고, 자신감을 부족하게 만든다. 자녀의 자존심이 상하면 회복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결코 원래로 다시 돌아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또한 자녀가 부모를 존중하지 않게 될 수도 있다.

열 번째는 부모가 다혈질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부모의 정서적 불안정과 다혈질 성격은 자녀의 성격을 왜곡시키거나 극단적으로 만들 수 있다. 아이들은 반항하거나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고, 책임감이 부족하거나 자폐화, 불안을 겪을 수 있으며, 다혈질의 성격까지 가질 수 있다.

— 가정, 학교, 지역 사회와 연계하는 교육 환경 구축

학교 교육의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 가정, 학교 및 지역 사회가 연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한국의 경우에도 혁신학교를 중심으로 마을 교육공동체를 강조하며 가정, 학교, 지역 사회와의 연계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교육의 본질은 아이들의 발달을 촉진하는 것인데, 이 발달은 가족, 학교 및 지역 사회를 통한 경험으로 구성된다. 고대 교육의 초점은 주로 가정에서의 생활 교육에 있었다. 현대에서는 주로 학교 시스템에서 수행되는 간접 경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가정, 학교, 사회에서의 교육은 경험적 차이도 존재하지만, 중복된 내용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아이의 본질적인 경험에 있어서 가정과 학교의 연계가 매우 중요하다.

부모와 교사는 아이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화의 전달자이다. 사회적 특성은 아이들 경험의 기본 특성이며, 아이들은 특정 사회적 관계에서 성장한다. 아이들의 언어와 의사소통 능력, 다른 사람의 감정을 파악하고 배려하는 태도, 가족 내외 및 학교 안팎에서 타인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능력, 학업 성취도 및 가치, 신념, 태도의 지도와 같은 측면에서

가족과 학교는 연대하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가족과 학교는 외부의 영향에 대해 함께 관심 있게 지켜보며 아이들을 위한 조력자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경험에는 장난감, 책, TV, 컴퓨터, 교육 과정, 주말 외출, 친척 및 기타 가족 구성원과 상호 작용, 보육원, 학교 및 부모가 선택한 주거 지역 사회의 이웃 관계(수업과 과외 활동 선택 포함)가 포함된다. 부모와 교사는 이때 비로소 중요한 문화 전달자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다. 문화적 전달은 직접적인 태도와 가치관의 가르침을 통해 아이들에게 영향을 줄 것이다.

— 나가며

2,500년 전 공자는 “자식은 부모 생전에 부모 곁을 멀리 떠나지 말아야 하며 만약 어쩔 수 없이 멀리 떠나야 한다면 반드시 부모님에게 가는 목적지를 알려드려야 한다”고 하였다. 옛날에는 교통이 불편하고 멀리 길을 떠나면 소식을 듣거나 전하기가 힘들었다. 그래서 공자는 자녀가 부모 생전에 부모 곁을 멀리 떠나지 않는 것이 효도라 하였다. 하지만 과학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한 현대사회는 교통이 매우 편리하게 잘 되어 있어 멀리 가더라도 금방 다시 돌아올 수 있으며 휴대폰으로 수시로 부모님과 연락할 수도 있다.

중국의 효에 대한 계승은 주로 가정에서의 교육을 통해 이루어졌다. 중국에서는 효행(孝行)이 학교의 체계적인 정규교육 내용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효의 실천은 단지 도덕과 가정의 범위에서 유지되어 내려왔다.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소황제들의 이기적인 행동들과 함께, 현재 중국에서는 나이가 많은 부모님을 밖에 버리는 경우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자식을 사랑하는 중국의 대다수 부모들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멋진 자녀의 미래를 보장해 주기 위해 자신의 생각을 자녀에게 강요하기도 하고 여러 학원을 다니도록 압박한다. 이런 행위는 자녀의 자유를 뺏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자녀가 부모에게 효를 행할 때, 부모는 온화함과 자애로움 및 덕으로 자녀들을 대하여야 한다. 좋은 부모-자식 관계가 있어야 좋은 가정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결국 모든 것은 좋은 관계 형성에서 시작된다. 🌱





교육현장 REPORT

“나는 나를 포기하지 않기로 했다”

위(Wee) 프로젝트 우수 사례와 학교폭력

김소아(한국교육개발원 교육복지연구실 연구위원)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 새로운 교육
자치를 그리다: 마을과 학교, 행정의 교육
플랫폼 이야기**

최지니(시흥시 교육자치과 행복교육지원센터 팀장)



“나는 나를 포기하지 않기로 했다”

위(Wee) 프로젝트 우수 사례와 학교폭력

김소아(한국교육개발원 교육복지연구실 연구위원)



위(Wee) 프로젝트 우수사례공모전이 10회를 맞이했다. 위(Wee) 프로젝트 우수사례공모전은 매년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학교생활을 성공적으로 한 학생, 학생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준 상담업무담당자, 학생과 상담업무담당자가 안정적으로 상담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 기관 및 온라인상에서 학생상담에 기여한 상담자들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올해 위(Wee) 프로젝트 우수사례공모전은 3개 부문(학생 및 상담업무담당자, 기관, 온라인상담)에서 교육부 장관상(대상) 25개와 한국교육개발원장상(최우수상 및 우수상) 60개가 선정되었다. 위(Wee) 클래스 학생들의 삶은 눈물겹고, 학생들의 변화를 끌어낸 선생님들은 감동적이다. 본 원고는 대상을 받은 우수사례 중에서 학교폭력 피해와 관련된 내용이 실린 세 개의 사례를 소개하려 한다. 더불어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스포츠 스타들의 학교폭력과 결부해 우리가 학교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보려 한다.

사례1 <나는 나를 포기하지 않기로 했다>는 우울증을 앓고 있는 엄마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지은이(가명)의 이야기이다. 학교폭력피해를 당하고 있는 친구를 도와줬지만, 그 결과로 지은이가 학교폭력의 피해를 입었고 이로 인해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었다.

나는 엄마한테 “너 같은 건 태어나지도 말았어야 했어”, “차라리 죽어버려”라는 말을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들어야 했다. 나는 엄마의 감정 쓰레기통이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왕따 당하는 친구를 도와주자 오히려 친구들 무리에서 내가 왕따를 당하게 되어서 상한 유유가 사물함에 가득할 때도 있고, 책상에 나쁜 말 낙서가 있을 때도 있었다. 선생님이나 다른 어른들은 도움이 되지 못했고 엄마는 오히려 나를 탓하고 괴롭혔다. 밝았던 나는 점점 어두워졌고 작은 일에도 눈치를 보며 움츠러들었다.

사례2 <이제는 다시 시작할래요>는 아버지와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었던 소영이(가명)가 학교폭력피해를 당한 사실을 부모님과 학교에도 알렸지만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한 이야기이다.

나는 어렸을 때 학교폭력을 당했다. 그로 인해 점점 성격이 소심해지고 자존감이 낮아졌다. 나에게 안 좋은 일들이 생겨날수록 무서움에 잠을 잘 못자는 날들이 많아졌고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날들이 많아졌다. 부모님께 이런 상황을 말씀드리면 “너만 그런 게 아니다. 무시해라, 선생님께 말씀드려라.”라고 하시면서 내 말을 무시하였다. 나는 많이 슬프고 화도 나고 힘들어서 죽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고, 시도도 했다. 칼로 내 팔을 긁고, 약을 한꺼번에 복용해 병원에도 갔다.

사례3 <응어리가 풀릴 때>는 부모님이 이혼한 후에 고모네 집에서 생활하면서 학교폭력과 가정폭력을 동시에 당한 수빈이(가명)의 이야기이다.

부모님이 이혼한 후에 고모 집에 맡겨졌다. 이종사촌 언니는 늘 나를 때렸고, 부모님이 없다는 이유로 학교에서는 왕따를 당했다. ‘부모가 없다’, ‘고모네서 산다’는 이유로 틈만 나면 학교 뒤 놀이터로 불러가기 일쑤였다. 가장 친한 친구에게 ‘고모네는 나를 신경 써주지 않는다’고 말한 것이 아이들에게 퍼져서 아이들은 내 물건을 숨기고 돌려주지 않았고, 물건을 잃어버린 나는 집에 돌아가서 맞았다.

최근 스포츠계 스타들의 학창시절 학교폭력관련 사건이 화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프로배구 선수들의 학교폭력 전력과 관련하여 국가대표선발에 적용되는 기준이 강화될 예정이라고 밝혔다(‘학교폭력·성폭력 전력선수, 수개월만 징계받아도 태극마크 땀다’, 국민일보 2021년 2월 16일자 인출). 이와 관련해서 한국배구연맹은 과거 학교폭력과 성범죄 등에 연루된 선수들을 배제하기 위해 신인 선수 선발 때 학교폭력과 무관하다는 서약서와 해당 학교장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추후라도 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선수에게는 최대 영구 제명의 중징계와 학교에는 학교지원금 회수 등을 조치할 계획임을 밝혔다(‘학교폭력연루선수, 프로배구 드래프트 참가 못한다’, 조선일보 2021년 2월 16일자 인출).

십 년이 지난 일임에도 학교폭력 피해는 왜 잊히지 않는 것일까? 어떻게 해야 피해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을까? 요즘 포털사이트 네이버에는 과거 학창시절 본인을 가해한 사람을 지금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을 묻거나 아직도 진행 중인 피해 상처를 밝히는 글이 넘쳐나고 있다(교육부학교생활컨설팅센터). 학교폭력의 공소시효(처벌 유효기간)는 없는 것일까?

학교폭력사안이 발생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학생처분을 내리게 된다. 학교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행정법에 의거하여 학생을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더이상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법이 아닌 형사법이나 민사법에서 학교폭력피해사실을 밝혀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판단되면 가급적 빨리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중학교 때의 사건을 고등학교 때 신고하면 이미 학교를 졸업해 버린 후라서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처벌에 어려움이 생긴다. 학교폭력피해를 당한 사실을 학교나 117신고센터 등에 신고하면 교육장은 피해학생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학교폭력피해학생 보호조치를 하도록 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에 명시되어있다(〈표1〉참조).

•〈표 1〉 국내 실정법 체계 및 규율 •

국내 실정법 종류	처리 방법	적용 대상	적용 가능기간	결과 (보상)
행정법	학교폭력 대책심의 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학생	학생일 때	심의위원회 조치에 따라 다름
형사법	국가가 공권력을 동원해서 범죄사실을 증명	일반인	범죄의 경중여부에 따라 다름 (공소시효)	법원판결에 따른 처벌
민사법	피해자가 증명	일반인	10년이 원칙이지만 2, 3, 5년도 가능(소멸시효)	손해배상, 치료비, 위자료, 영구장애비 등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피해를 입은 학생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교육장에게 1호~6호까지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표2〉참조).

•〈표 2〉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 •

구분	내용
제1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학교폭력으로 받은 정신적·심리적 충격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학교 내·외의 심리상담 전문가로부터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도록 하는 조치 학교 내 상담교사가 없을 시 지역 내 피해학생 전담 지원기관, Wee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전문 상담기관 등 외부 기관을 통하여 진행할 수 있음
제2호 일시보호	가해학생으로부터 지속적인 폭력이나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보호시설이나 집 또는 학교상담실 등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
제3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생긴 신체적·정신적 상처의 치유를 위하여 의료기관 등에서 치료를 받도록 하는 조치
제4호 학급교체	지속적인 학교폭력 상황 및 정신적 상처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피해학생을 동일 학교 내의 다른 학급으로 옮겨주는 조치

구분	내용
제5호 (식제) 전학	피해학생의 의사와 관계없이 전학 조치를 권고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동 조치는 삭제됨 다만,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하여 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초등학교의 경우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전학 조치를 할 수 있음 ※ 성폭력 피해학생의 전학요청 시 학교장은 반드시 교육감(장)에게 학교배정을 요청하여야 함
제6호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학교폭력 피해 유형 및 연령 특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해바라기센터 지정 병원 등 의료기관 연계,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같은 법률 구조기관, 학교폭력 관련 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요청 등을 할 수 있는 조치

※ 출처: 학교폭력피해학생지원 및 전담지원기관 길잡이, 한국교육개발원·교육부, 2020

학교폭력피해로 인해 상해 등 치료비가 필요할 수 있다.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서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6항(〈표3〉 참조)).

•〈표 3〉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료비 부담 •

구분	내용	일정기간
[1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교육감이 정한 전문 심리상담기관에서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는 데 소요비용	2년 (보상심사위원회 심의로 1년 범위에서 연장가능)
2호 일시보호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일시 보호를 받는 데 드는 비용	30일
3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회귀약품센터에서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받거나 의약품을 공급받는 데 드는 비용	2년 (보상심사위원회 심의로 1년 범위에서 연장가능)

※ 출처: 학교폭력사안 처리 가이드북, 교육부·이대학교폭력예방연구소, 2020개정판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피해당한 학생을 조금이라도 치유해줄 수 있을까? 202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중 학교폭력 가해이유를 보면, '장난이나 특별한 이유없이(28.1%)', '상대방이 먼저 괴롭혀서(17.5%)', '오해와 갈등으로(13.9%)' 순으로 조사되었다. 최근 발생한 스포츠계의 학교폭력을 단순히 학창시절 '철이 없어서' 혹은 '장난'으로 치부할 수 있을까?(교육부 보도자료, 2021.1.21.)

비단 스포츠계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성공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정당화되는 과거의 관습, 일단 스타가 되면 얻게 되는 성공의 값어치, 학교폭력가해행위를 해도 공부만 잘하면 면죄부가 되는 일부 학교관계자들의 이해하기 어려운 사고 등 지금까지 용인되어온 많은 비정상적인 일들이 이제는 더이상 용납되지 않을 만큼 우리의 인식이 성숙해진 것은 아닐까. 물론 위(Wee) 클래스에서 수행하는 상담이 모두 훌륭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모든 아이들이 상담으로 변화할 수는 없다. 하지만 과거에 비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열려있다.

사례1 지은이(가명)는 고등학교 진학도 포기하려 했지만, 상담선생님의 도움으로 검정고시와 대안학교를 준비할 수 있었다. 상담 선생님의 진정성 있는 위로는 지은이가 스스로를 사랑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해주었다.

“고등학교는 가고 싶지 않아요.” 상담을 하면서 내가 말했던 내용이다. 고등학교를 가고 싶지 않다고 말했던 이유는 학교에서도 집에서조차 만신창이가 된 상태로 사람에 대한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이었다. 사회생활을 하고 싶지 않았고 더 노력하고 싶지 않았다. 동시에 고등학교를 가지 않고 방에 틀어박히는 편이, 나를 미워하고 괴롭히며 방관한 가족들에게 복수할 유일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나의 선언에 상담선생님은 온화한 얼굴로 말해주었다. “그러면 안 가면 되지.” 듣고 싶었던 말이었지만 막상 듣게 되자 당황스러웠다. 모두가 “그래도 가야지”, “철이 아직도 안 들면 어떡하니.”와 같은 말만 할 뿐이었는데... 한편으로는 선생님이 나를 포기한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하지만 그것은 오해였다. 선생님은 검정고시를 보는 방법과 대안학교를 알려주기도 했다. 나는 스스로를 포기했지만 선생님은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 더 넓은 선택지를 알려주었고, 나를 학대하는 엄마가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었다. 끝없는 위로와 조연은 큰 힘이 되었다. 아무도 나에게 알려주지 않았던, 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상담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사례2 소영이(가명)는 과거의 어려움이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상담선생님으로부터 이해받았다. 상담선생님의 공감 어린 위로를 통해 본인의 감정을 이해하게 되었다.

상담선생님은 내가 마음을 열고 말해 줄 때까지 기다려 주셨다. 하지만 이미 마음의 문이 닫혀 있었던 나는 ‘이 상담선생님도 내 말을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면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도 들고, 겁이 나기도 했었다. 그래도 나 혼자 끄고 앉는 것은 오래 버티기 힘들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천천히 말을 하였다. 상담선생님은 내 말을 무시하지 않고 귀담아 들어주셨고 힘들어하는 부분을 잘 알고 위로해 주셨다. 어릴 적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학교생활 이야기를 할 때 상담선생님은 “네 잘못이 아냐. 그건 그렇게 만든 어른들의 잘못이야.”라고 말씀해 주셔서 정말 평평 울었다.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위로’라는 게 이런 것이며, 사람의 말을 들으며 공감해 주는 것이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라고 처음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힘들 때마다 상담선생님을 찾아가게 되었다. 상담의 강점 찾기를 하면서 내 감정을 알게 되었으며, 친구들과 싸우고 갈등이 있을 때 멈출 수 있다는 것, 그 후 친구에게 어떻게 다가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



사례3 수빈이(가명)는 상담선생님에게 고민을 털어놓음으로써 고모네 집을 탈출할 수 있게 되어 폭력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다.

어느 날 친한 친구에게 자해 흉터를 들켰다. 그날 인생의 전환점을 얻게 되었다. 친구는 내게 위(Wee) 클래스 상담선생님을 소개시켜 주었고 그날부터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그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않던 내 상처들을 위(Wee) 클래스 선생님께서 털어놓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마음의 문이 열렸다. 상담선생님 도움 덕에 아버지에게 폭력 사실을 알릴 수 있었고 나는 고모네로부터 탈출할 수 있었다 ✨

참고자료

교육부(2021), 2020년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발표. 2021년 1월 21일자 보도자료
 교육부·이대학교폭력예방연구소(2020). 학교폭력사안처리 가이드북 개정판
 한국교육개발원·교육부(2020). 학교폭력피해학생지원 및 전담지원기관 길잡이
 한국교육개발원(2020). 제10회 위(Wee) 희망대상우수사례집
 국민일보(2021). 단독 학교폭력·성폭력 전력 선수, 수개월만 징계받아도 태극마크 땀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540648&code=61121811&cp=nv>, 2021년 2월 16일 인출
 조선일보(2021). '학교폭력 연루 선수, 프로배구 드래프트 참가 못 한다',
<https://www.chosun.com/sports/volleyball/2021/02/16/4SKRUHX6ZRFXPBRZPS3XA6X2GGQ/>, 2021년 2월 16일 인출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 새로운 교육자치를 그리다: 마을과 학교, 행정의 교육 플랫폼 이야기

최지니(시흥시 교육자치과 행복교육지원센터 팀장)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에서는 시민의 바람대로 마을, 학교, 자치, 협력이라는 4개의 날개가 돌아갑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곳에서 학교, 선생님, 마을 사람들과 서로 손잡고 미래 세상의 주인으로, 따뜻하고 안전하게 배우며 성장하는 공동체, '온마을이 학교'가 되는 세상을 꿈꿉니다.

-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 블로그 중에서(blog.naver.com/sh-happyedu) -

— 플랫폼 이야기 시작: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 7년, 도시 전체가 '교육'으로 물들다

2015년의 교육 혁신, 전국에서 처음으로 일반행정, 교육행정, 교사가 한 공간에서 일하는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다. 그날 경기도교육감과 시흥시장은 “학교, 학부모, 마을이 한 단위로 모이는 무언가가 필요했다. 교육자치라는 면에서 시흥 전체의 교육을 어떤 가치로 만들 것인지 학교와 도시가 함께 할 것”이라며 새로운 협력을 약속했다.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는 혁신교육지구로 연결되어 있다. 지역주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공교육을 혁신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새로운 교육협력으로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창의협동교육 시스템 구축, 혁신교육 일반화를 통한 배움과 성장 도모, 나눔과 배려의 행복한 학습공동체 실현 등을 목표로 한다.¹⁾ 2011년부터 혁신교육지구 시즌Ⅰ, Ⅱ까지 주민을 신뢰하고, 협력하는 과정에서 성장을 도모하는 마을교육공동체를 큰 축으로 이어왔다. 올해부터 시작하는 시즌Ⅲ²⁾에서는 시에서 동으로, 그리고 마을로 더 작은 단위에서 와닿는 교육자치의 변화를 끌어내고자 한다.

지역 교육 거버넌스를 통한 교육자치 실현	학교교육자치 역량 강화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미래교육 체제 구축	시흥교육과정 운영
	마을교육자치 기반 조성		마을 연계 창의적 교육과정, 예술·체육 융합 프로젝트, 학교로 찾아가는 마을교사, 창체 플러스
	시흥혁신교육포럼 및 컨퍼런스 운영		마을교육과정, 시흥창의체험학교, 평생학습 배움터, 다름의 가치를 담은 고교만들기, 학교 교육과정으로 만드는 마을축제
교육협력지원센터 운영	온라인 인문학 클래스		
학교와 마을의 교육협력력을 통한 혁신교육 생태계 강화	학교-마을 통합교육과정 지원		학생주도 '공간'
	마을융합학교 연수 플랫폼 운영		혁신(공감)학교 운영
	시흥꿈의학교	온라인 거점 플랫폼 지원	
	마을기반 방과후 시범사업	학습격차 해소	
	지역돌봄 지원 사업(온종일돌봄)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는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새로운 전환을 하려 한다.

- 시와 교육청 조직이 바뀌어도 지속 가능한가.
- 혁신교육지구를 넘어서, 시흥 전체가 교육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
- 시흥시민에게 이곳은 살아가는 곳, 미래를 함께할 곳인가.
- 마을교육공동체를 통해 마을과 학교가 변화되고 있는가.
- 마을과 학교가 온전히 주체로 바로 서는 교육자치로 나아가고 있는가.
- 온마을이 학교가 되고 있는가, 학생은 온전한 시민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플랫폼 이야기 하나: 시흥교육의 연결망,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만들어졌다. 센터에서는 시흥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행정과 교육 전문가가 ‘한 자리’에서 기획-실행-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작동된다.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시흥시청 교육자치과에 속해 있다. 현재 일반행정 6명, 교사 1명, 교육행정(지원청 파견) 1명, 기간제 1명이 행복교육지원센터팀에 있다. 2년 전 마을교육협력팀(일반행정 3명)이 신설되어 협력하고 있다.
- 둘째, 시청과 교육지원청과의 협력 관계가 중심이다.
- 셋째, 시 단위에서 마을과 학교를 지원하는 허브형 센터다.
- 넷째,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마을교육협력팀에서 실천단위로 마을과 학교 주체가 결합된 12개의 마을교육자치회를 지원 중이며, 동 또는 학군(구) 단위로 확대할 예정이다.

1) 혁신교육지구 정의(경기도교육청, 2011)
 2) 시흥혁신교육지구 시즌Ⅲ 운영계획(시흥시, 2021)

시흥은 3년 전부터 [가칭]시흥교육자치협력센터라는 새로운 지역교육 플랫폼 논의를 해오고 있다. 시청과 교육청의 공동 출자기구로 교육 지원의 중복된 역할을 하나로 담아내는 모델이다. 핵심 협력분야부터 사업-예산-조직을 공동으로 시작하며, 기초 단위 안에서 시흥에 맞는 교육자치 파트너십을 이루자는 의미다.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는 '지역과 학교를 연결'하는 교육 플랫폼이다. 협업을 전제로 한 정책 학습모임, 시청-교육지원청 교육협력 실무협의회가 실제로 작동된다. 첫 기획부터 혼자자 아닌, 민관학이 같이 초안을 그리고 다자간 입장으로 학습한다. 시청, 교육지원청의 인사이동으로 담당이 바뀌어도, 학습과 공감, 합의로 순환해나가는 시스템은 계속 된다. 새로 오는 시흥사람이라면 으레 이를 문화로 받아들인다.

그 판에서 학교와 마을의 주체들이 시흥혁신교육포럼을 펼친다. 학교와 마을이 치열하게 고민하며, 제안된 내용을 센터(행정)에서는 사업과 정책에 반영한다. 실제로 시청, 교육지원청 담당은 상당히 많이 듣고 (듣는 연습을 위해 학습모임이 그리 많이 돌아가는 것 같다) 주체별 실무협의회에서 피드백 협의를 한다. 연중 끊임없이 의견을 나누고, 토론이 이어지고, 사업과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에서 또 의견을 듣고 조정하며 한 해를 보낸다. 작년만 해도 50회 이상의 크고 작은 공론장이 이루어 졌다.

마을과 학교 분들과 정책연구와 설계도 함께 한다. 혁신교육, 마을교육공동체, 그리고 새로운 교육자치를 그리며 교육비전과 철학을 세우는 일이다. 마을단위 거버넌스, 민관학 의결구조, 마을교육에서 복지, 공간, 돌봄 등의 교육지원 근거 등을 조례에 담을 예정이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떠나는 도시에서 이제'교육'으로 남는 도시로 변모했다. 여전히 젊은 층 인구가 들어오는 시흥은 활기찬 도시의 힘을 키워나가고 있다. 센터는 평생학습, 주민자치, 학교교육까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온전한 시민으로 살아가도록 지역교육 차원에서 살핀다.

플랫폼 이야기 들: 지역이 곧 수업, 시흥 교육과정



센터를 통해 시청의 34개 팀이 '사업'에서 '교육과정'으로 다시 만들어져 학교와 매칭된다. 이 과정에는 마을교사와 학교교사, 학교장·교감, 행정실장 등이 주로 함께 한다. 현장의 요구를 모으고 새로운 마을교육과정을 개발한다. 지역의 다양한 콘텐츠를 찾아내고, 학교 안팎을 넘나들며 마을교사와 학교교사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가도 연구한다. <마을융합학교>라는 연수 플랫폼에서 주로 기획되며, 400여 명에 달하는 마을교사가 권역별, 주체별 커뮤니티로 활동 중이다. 80여 개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담은 시흥 콘텐츠가 초중고 학년별로, 급별로, 연차시 프로

젝트식 수업으로 만들어진다. 현장체험형, 현장과 교실 결합형, 온라인 협력수업형까지 여러 방식으로 개발 운영되고 있다.

마을교육공동체를 저 멀리 이야기로 접하거나, 교과서 안에서만 배우지 않는다. 학생들은 수업에서 올해의 마을축제를 직접 기획하고 동네의 어른들과 1년 농사처럼 준비해간다. 모두가 참여하고 동시에 주인공인 이 과정에서 마지막 축제날 함께 감동한다. 동 단위로 여러 학교가 연대하고 마을이 같이 준비한다. 축제일까지 학사일정에 들어간다. 교문 밖을 나서도 공동체 수업은 끝나지 않는다. 모든 과정이 수업이다.

배움과 삶이 연결되는 시흥교육과정을 모토로, 마을교사와 학교교사는 공동 교육과정을 설계하며 협력수업을 한다. 마을교육과정을 창의적 체험활동뿐만 아니라 교과 통합이나 재구성하는 경우도 참 많다. 센터는 이러한 학습공동체를 지원한다. 시흥아이가 학교생활, 특히 교육 내용, 교육방법, 교사와의 관계, 소질과 적성 개발 등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경기도 평균 44.9%보다 높은 54.1%의 비율³⁾을 차지한다. 지역과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학교명	세합프로그램	비고
군자초	소프트웨어	
군서중	매질	
논곡중	매질, 보드카레	사회적협동조합 연계 운영
신천중	육공	
장곡중	육공	학교협동조합 연계운영
은행고	음악	
군자디지털과학교	소프트웨어	



학교 공간이 지역사회 교육센터가 되기도 한다. 센터에서 지원하는 <학교안체험교실>에서는 방과후 평생학습 공간뿐만 아니라 시흥의 다른 학생들이 현장학습으로 버스를 타고 온다. 올해에는 뷰티스쿨,

온라인 거점 스튜디오 등으로 학교 공간이 새롭게 열린다. 학교에서는 공간을 내어주고, 그 시설사용 책임을 지역사회가 맡아서 마을교사 커뮤니티나 협동조합에서 운영한다. 센터에서는 공간 개방과 관계된 학교와 마을의 주체들이 자주 만날 수 있도록 하고, 방과후 안전까지 책임질 수 있는 시설지원, 법적 제도화 같은 공론도 이어준다.

플랫폼 이야기 셋: 시청과 교육지원청이 손잡은 행정, 원클릭시스템

80여 명이 넘는 교원과 행정실 분들로 구성된 학교교육분과, 마을교육자치회로 구성된 마을교육분과, 시청의 여러 부서들과 교육지원청의 장학사, 지역전문가로 구성된 행정분과, 미래교육지구를 실행하는 교육자치분과가 매월 정례적인 만남을 갖는다. 수년간 학습, 소통, 실행, 평가로 이어지는 '분과의 힘'이 안착되면서, 많은 규모의 지역 교육과정이 원클릭시스템에 담긴다. 학교와 마을의 리듬에 맞춰 수업으로 이어진다.

행정분과에서는 시청과 교육지원청 간 실무협의회를 연다. 양 기관의 부서 30여 개 팀과 12 장학, 교육복지, 돌봄, 학부모 분야까지 만난다. 교육정책에 대해 같이 학습하고, 새로운 사업이 나오면 시청에서 예산도 세우고 지원청과 교육사업을 개선한다. 학교가 내년도 교육과정 연간계획을 고민하는 당해년도 11월경에는 '시흥교육사업 원클릭 시스템' 안내가 이루어진다. 미리 보는 교육정보인 셈이다. 12월에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도 시흥의 수십 개 교육과정 사업을 학교와 매칭한다. 지자체의 회계연도 기준에도 불구하고, 1년 협업을 통해 더욱 많은 마을교육 자원이 교육과정으로 이어진다. 학교와 주고받는 수백 개의 공문도 없어졌다. 온라인 플랫폼 안에서 접수-매칭이 이루어진다. 시흥아이는 지역의 풍성한 시흥교육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3) 한국형 지방교육자치 모델 구축을 위한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 정책모델 개발 및 브랜드화 연구(경기도교육연구원, 2019)

신청부터 매칭-정산까지 하나의 화면에서



플랫폼 이야기 넷: 센터의 단독 기획? 지역교육 공론에서 정책 설계까지 다같이

센터에서는 단독 기획이 없다. 아니 어렵다. 교육 요구가 다양하고 시시각각 달라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교육현안들이 (동 단위)지역현안 분과 → (시 단위)시흥혁신교육포럼/시청-교육지원청 실무협의회 → (전국 단위)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까지 이어진다. 교육의 현안을 찾아내고 지역 주체들이 실행해나가는 셈이다. 상위 입법과제들은 대외 협의회를 통해 공식 제안된다. 포럼을 위한 포럼이 아닌, 교육 주체들이 '참여'를 넘어 '주체'로서 스스로 현안모임을 구성하고 공론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아졌다. 외부전문가들보다는 시흥 사람이 많다. 논의한 내용이 행정기관별로 진척이 된 일들도 피드백하며 공론을 심화해간다.

시흥은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이하: 미래교육지구/교육부 공모) 2년차다. 작년부터는 마을교육과정 외에도, 방과후, 돌봄, 위기지원, 공간, 진로나 마을교육자치, 지역대학까지 교육현안이 많아졌다. 학교와 마을에서 가장 시급한 교육현안을 다루고, 실천 방안을 찾아낸다.⁴⁾ 이처럼 풀뿌리 교육자치로 시작해서 시 단위 의결구조까지 이어진다.



4)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 실행계획(시흥시, 2020)

시 단위 시흥혁신교육포럼은 현재 259명의 지역교육 주체들, 교직원, 학부모, 학생, 마을교육활동가, 시청, 교육지원청, 의회, 도교육청과 교육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작년 미래교육지구에서 12개의 교육현안 TF팀이 꾸려졌다. 학교 현장, 학교 밖 마을, 교육 단체와 커뮤니티들이 공론화 주제를 결정하고, 행정에서는 첫 단계부터 함께 한다. 하나의 교육부서를 넘어, 복지, 청소년, 자치, 돌봄, 다문화 부서들까지 참여한다. 예산이나 행정 지원 등 맞물려 돌아가야 해결할 사안도 많기 때문이다.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는 교육지원청과 협력하며 지역 현안이 교육의제로 나아가도록 돕는다. 올해에는 현안을 논의한 중심 지역(동)에서 시범사업으로 확산 모델을 만들어간다. 시흥혁신교육은 현장에서 만들어진다 해도 과언은 아닌 듯싶다. 현안 TFT 주제는 다음과 같다.

- 1TFT. 동 단위 위기학생 청소년-위기학생, 청소년 지원 및 예방을 위한 동 단위 협력체계
- 2TFT. 청소년 통합지원 지역 재구조화-위기 아동청소년의 교육복지-청소년안전망-지역 협업체계
- 3TFT. 초등학교 돌봄교실 지역기반 협력모델 -학교 및 지역돌봄 확충을 위한 방안
- 4TFT. 마을 단위 자율교육과정 - 마을에서 개설하는 교육과정, 고교학점제와 자유학년제
- 5TFT. 온-오프라인 넘나드는 마을교육과정 지원체계-온라인 마을교육과정, 온라인 학습격차 해소 방안
- 6TFT. 마을교사 동반성장 연수 플랫폼 구축 - 마을교사의 수업 내용과 역할 재정립
- 7TFT. 모두가 학교이고 모두가 스승인 학교공간 복합화
- 8TFT. K-에듀파인 회계 가이드(지자체 교육경비와 간소화 방안) 및 마을교사풀 활용 내실화
- 9TFT. 마을교육자치운동의 의미와 기능 연구-학교자치, 주민자치, 교육자치를 중심으로
- 10TFT. 마을교육자치회 실행단위의 역할 정립-마을교육자치회 활동 이해와 당면한 교육현안
- 11TFT. 방과후 내실화 및 플랫폼 구축-마을기반 방과 후 플랫폼 실행안 및 제도개선 방안 논의
- 12TFT. 대학과 지역사회의 상생을 위한 사업 및 협력체계 개선- 초중고 요구(정서지원, 직업교육)

플랫폼 이야기 다섯: 동네, 마을, 동에서 학교와 연결되는 마을교육



현재 동(또는 학군구) 단위로 마을과 학교(교직원, 학부모, 학생)의 교육 주체가 만나 마을교육협의체 역할을 하고 있는 마을교육자치회가 12개 있으며, 마을교육협력팀이 지원하고 있다. 향후 주민자치회와 연결되어 교육분과 역할을 해나가며 동 단위 마을교육자치의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된다. 마을교육의 비전을 세우고 학교와 마을이 축제, 방과후돌봄, 진로체험, 마을매체 등을 고민한다. 향후 (가칭) 시흥교육자치협력센터가 구체화되면 동 단위 마을교육자치회와도 더욱 긴밀한 연결체계가 있을 것이다.

센터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아카이브로 남기고 있다. 블로그와 유튜브를 통해 생생한 교육현장 히스토리를 집적해가고 있다. 사람의 성장이며 그 과정을 돌아보며 내년도 사업의 확장과 변화를 모색하는 평가 자료로 활용된다. 올해부터는 센터에서도 기록하고 마을에서도 기록하며 하나로 모으기 시작한다.

• 코로나극복기 5쌍 이야기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 유튜브 채널> •



— 플랫폼 이야기 마지막: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실천과 이어지는지 살펴보는 일

작은 실천들이 혁신교육지구 시즌 III 안에서 촘촘히 배어든다. 지역 주체들이 스스로 교육의 문제를 논의하고 지속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일이다.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는 이런 면에서 기초 단위 안에서 교육지원청과 파트너십을 이루고, 지역교육을 위한 협력시스템을 단단히 하고자 한다. 혁신교육 10년이 지난 지금, 시와 교육지원청이 ‘누가 할 것인가’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로 전환하며 협치를 끌어내고자 부단히 애쓰고 있다. 센터에서 사업을 벌이는 일보다 끊임없이 듣고 돌아보고 정책 변화를 살피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규 수업시간에 진행되는 시흥창의체험학교(주제: 공동체)의 한 모습이다. 아이들은 동네 아파트 안에 바람길로 통하는 그늘진 쉼터에서 멍때리고 그냥 늘어져 쉬어본다. 우리 동네에 이런 곳이 있나 싶다. 지나가는 이웃과 자연스레 인사도 나눈다. 마을-학교-시-교육청의 플랫폼,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에서는 이렇게 배움이 일상처럼 편안하게 연결되는 과정을 함께 기획한다. 그리고 그것을 지향한다.

시흥교육이라 불리는 이 일들로, 지역성이 자연스레 스며들고 아이들의 교육 현장에서 실천되길 바란다.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것, 지역의 역사와 대화하고, 지역의 사람들과 대화하고, 교실의 친구와 대화하고, 자신의 삶과 대화하는 것”이 ‘실천⁵⁾’이라는 말처럼, 지역과 교육을 이으며 희망을 담은 교육자치의 첫 걸음이기도 하다. 행정에 발 딛고 있는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지만, 우리가 바뀌어도 그 흐름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

“어떠한 사업을 시작할 때는 누가 이 사업의 주인이 될 것인가 ‘주체’의 문제와 이것이 계속 진화해갈 수 있는 ‘동력’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계속 행정이 기획하고 예산을 투입하면서 나아갈 것인가 항상 고민할 것.”

- 시흥시장 -

5) 수업이 바뀌면 학교가 바뀐다(사토마나부, 2014)



교육통계 FOCUS

유치원 교육여건 변화

김혜자(한국교육개발원 교육지표연구실 부연구위원)



유치원 교육여건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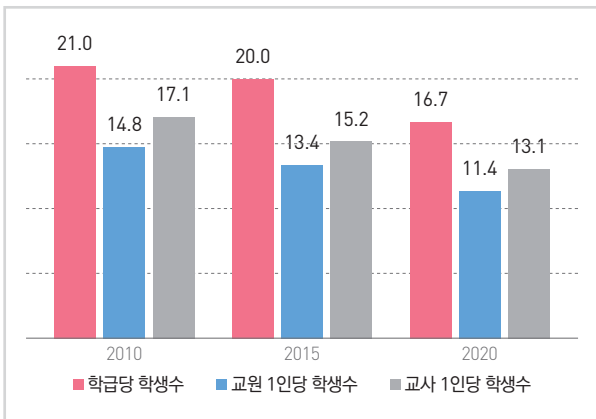
김혜자(한국교육개발원 교육지표연구실 부연구위원)



국공립 유치원 확대는 유아교육 공공성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추진되는 국정과제이며, 2020년 10월 교육부가 발표한 코로나 이후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10대 정책과제에서도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는 주요 전략으로 포함되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2010년 이후 최근까지 지역사회 단위에서 유치원 교육여건의 변화 및 개선을 대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자료 시점은 지난 10년간 5년 주기의 2010년, 2015년, 2020년이고, 교육여건을 대표하는 교원 1인당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 교사 1인당 학생수 지표를 이용했다. 교사 1인당 학생수 지표는 모든 교원이 아닌 일반교사, 보직교사, 기간제교사를 포함했다. 이에 교사 1인당 학생수는 교실에서 학생들과 상호작용하는 교사 한 명이 담당하는 학생수를 의미하므로, 교원 1인당 학생수 지표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학생들의 체감도가 고려된 교육여건 지표라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지난 10년간 지역 및 설립유형에 따른 유치원 교육여건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현재 추진되고 있는 유아교육의 공공성 현황을 파악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단위에서 유치원 교육의 소외나 사각지대 등을 검토하고자 했다.

[그림 1]은 지난 2010-2020년 유치원 교육여건 변화를 보여주는 학급당 학생수, 교원 1인당 학생수, 교사 1인당 학생수를 나타낸 것이다. 지난 10년간 유치원 교육여건은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지만, 지표별로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교원 1인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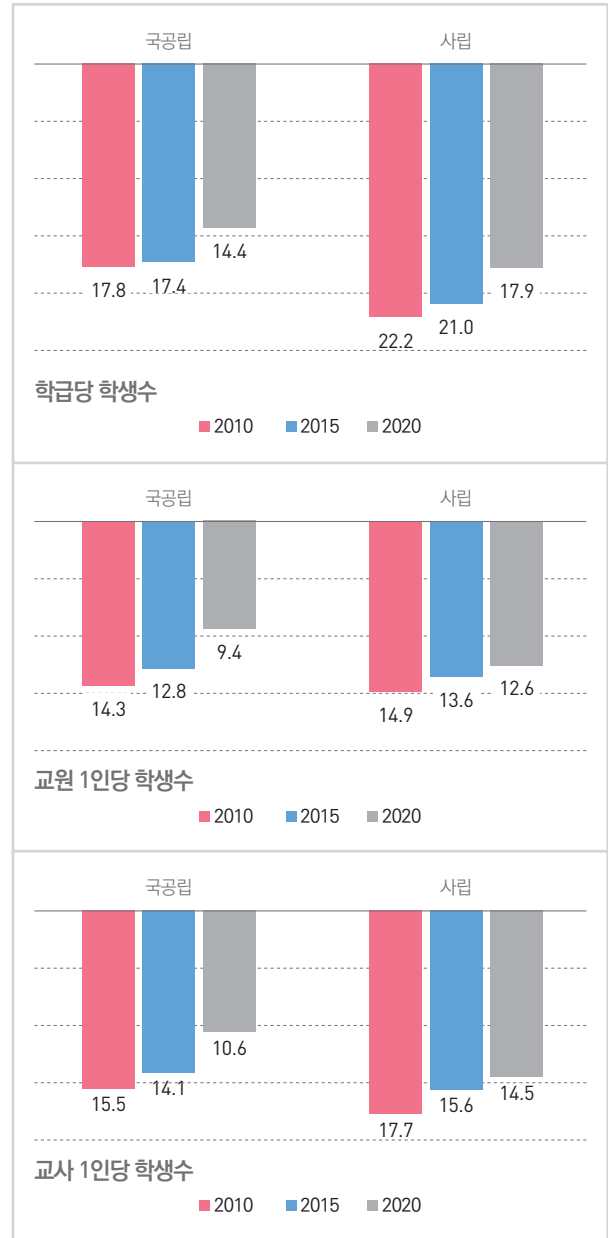
학생수는 양호한 상태인 반면, 학급당 학생수는 보다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한편 교원 1인당 학생수와 교사 1인당 학생수는 약 2~3명의 차이가 있는데, 이는 일차적으로 교사 범위에 따른 결과다. 즉 교실 공간에서 학생들과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주된 업무로 하는 교사, 보직교사, 기간제교사(시간강사 제외)만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2010년 대비 2020년 교원 1인당 학생수와 교사 1인당 학생수는 꾸준히 개선되었다. 이는 국공립 유치원 확대 등 물리적 차원의 유아교육 공공성뿐만 아니라 교사 확충 및 전문성 제고 등과 관련된 유아교육 질 제고 차원의 정책 성과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 [그림1] 유치원 교육여건 변화(2010, 2015, 202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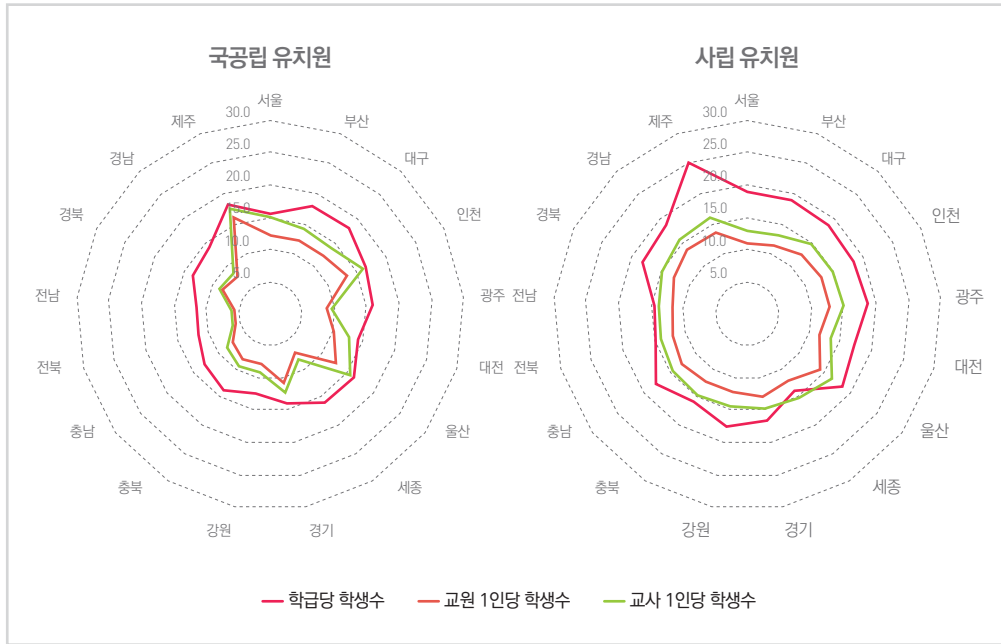
[그림2]는 유치원 설립유형별 교육여건 변화를 살펴본 것이다. 먼저 국공립 유치원 학급당 학생수는 2010년 17.8명, 2015년 17.4명으로 비슷한 규모를 유지하였으나, 2020년 14.4명으로 최근 5년간 학급당 학생수가 3.0명 감소했다. 사립 유치원 또한 2010년 22.2명, 2015년 21.0명, 2020년 17.9명으로 최근 5년간 학급당 학생수가 3.1명 감소하는 긍정적 변화를 보였다. 하지만 여전히 국공립과 비교해 사립 유치원의 학급당 학생수는 지속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교원 1인당 학생수는 2010년 국공립 14.3명, 사립 14.9명으로 설립유형 간 0.6명의 차이를 보였다. 2015년 국공립 12.8명, 사립 13.6명이었고, 2020년 국공립 9.4명, 사립 12.6명으로 설립유형 간 차이가 각각 0.8명, 3.2명이었다. 이처럼 최근 5년간 유치원 설립유형 간 교원 1인당 학생수 차이는 약 4배 증가했다. 국공립 유치원의 교원 1인당 학생수가 2010년 대비 2020년 5명 감소한 반면, 사립 유치원의 교원 1인당 학생수 감소는 2.4명으로 국공립의 절반 수준에 해당한다. 즉 최근 5년간 사립 유치원 대비 국공립 유치원의 교원 1인당 학생수 개선이 두드러진 결과에 따른 차이로 할 수 있다. 교사 1인당 학생수 지표에서도 설립유형 간 차이가 2010년 2.2명, 2020년 3.9명으로

증가했으며, 이는 사립 유치원 대비 국공립 유치원의 교사 1인당 학생수 개선이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2010년 대비 2020년 교사 1인당 학생수 개선은 국공립 유치원 31.6%, 사립 유치원 18.0%로 약 2배 정도 차이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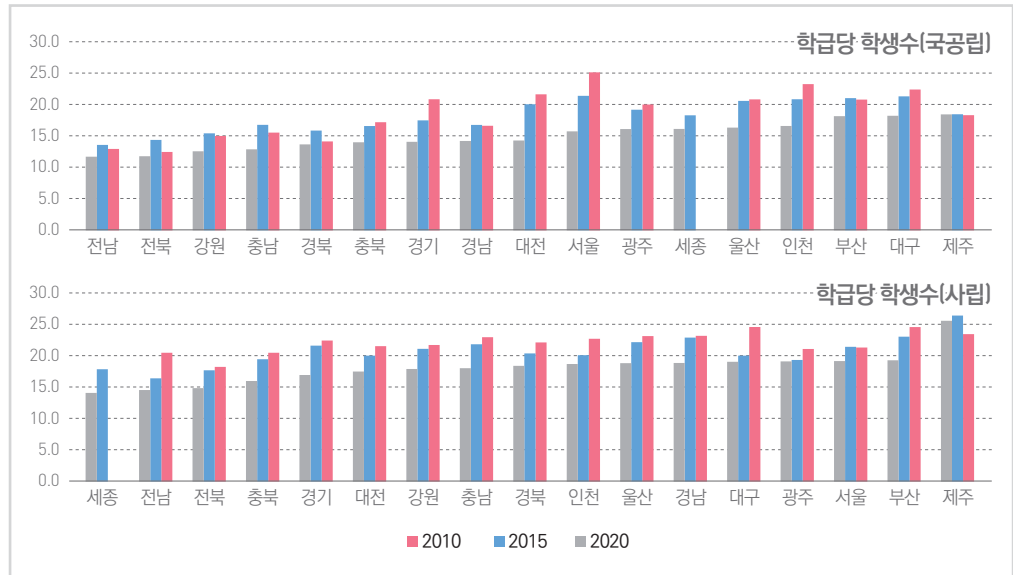
• [그림2] 유치원 설립유형별 교육여건 변화(2010, 2015, 2020) •

[그림3]은 설립유형 및 지역별 유치원 교육여건을 나타낸 것이다. 교육여건을 가능해볼 수 있는 학급당 학생수, 교원 1인당 학생수, 교사 1인당 학생수 지표의 지역별 연결에 따른 면적이 작을수록 교육여건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국공립 유치원이 사립 유치원보다 면적이 작고 교육여건이 양호한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교원 및 교사 1인당 학생수 지표의 면적을 살펴보면 사립 유치원은 타원형에 가까운 반면, 국공립 유치원은 별모양에 가까움을 알 수 있다. 이는 교원 및 교사 1인당 학생수 교육여건에서 국공립 유치원이 사립 유치원과 비교해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이지만, 국공립 유치원의 지역 간 교육여건 차이가 검토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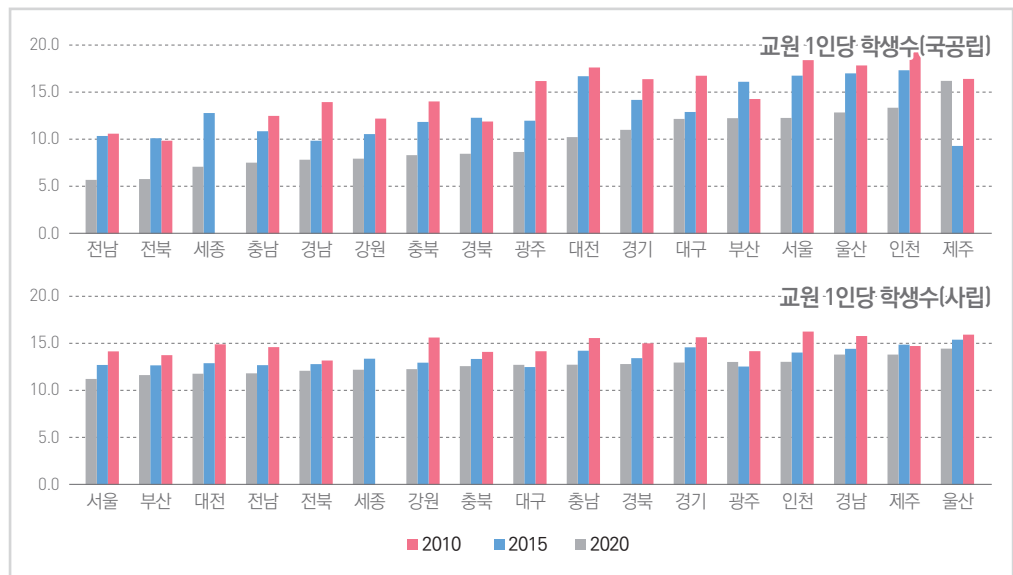
● [그림3] 설립유형 및 지역별 유치원 교육여건(2020) ●

[그림4] 학급당 학생수 변화에서 국공립 유치원은 전남·전북 11.7명, 강원 12.5명, 충남 12.8명 순으로 학급당 학생수가 양호하였고, 제주 18.3명, 대구·부산 18.1명, 인천 16.5명 순으로 한 학급당 학생수가 비교적 많은 편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과 제주의 학급당 학생수 차이는 6.7명으로 컸다. 더욱이 2010년 국공립 유치원의 지역 간 편차는 3.8명 정도였고 2020년 2.2명으로 개선된 것과 비교해보면, 사립 유치원은 2010년 1.6명에서 2020년 2.6명으로 지역 간 편차가 증가하는 상반된 경향을 보였다. 서울은 지난 10년간 국공립 유치원 학급당 학생수가 약 9.3명 감소한 37.4%의 개선을 보였고, 광주는 지난 10년간 국공립 유치원 학급당 학생수가 3.9명 감소해 19.5% 개선되었다. 또한 사립 유치원의 지역별 학급당 학생수를 비교해보면, 전반적으로 국공립에 비해 사립 유치원의 학급당 학생수가 많은 편이다. 사립 유치원의 경우에도 전남, 전북, 충북 지역의 학급당 학생수 여건이 양호한 편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는 국공립과 사립 유치원 모두 17개 시도 중 학급당 학생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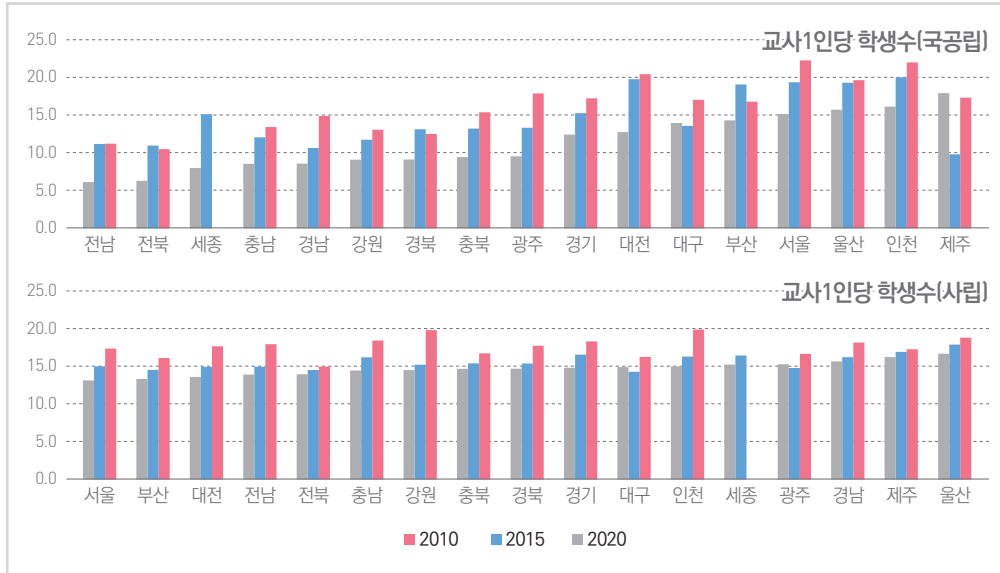


• [그림4] 학급당 학생수 변화(2010, 2015, 2020) •

[그림5]는 교원 1인당 학생수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지역 및 설립유형별에 따른 차이가 학급당 학생수 지표와 유사한 패턴으로 확인된다.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교원 1인당 학생수가 가장 적은 곳은 전남 5.7명이었고, 가장 많은 곳은 제주 16.2명이었다. 특히 교원 1인당 학생수의 지역 간 편차가 국공립은 2010년 2.9명, 2020년 3.0명으로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사립 유치원 또한 2010년 0.9명에서 2020년 0.8명으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그림5] 교원 1인당 학생수 변화(2010, 2015, 2020) •



• [그림6] 교사 1인당 학생수 변화(2010, 2015, 2020) •

[그림6]은 교사 1인당 학생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국공립 유치원 교사 1인당 학생수의 지역 간 편차는 2010년 3.6명, 2020년 3.7명이었고, 사립은 2010년 1.3명, 2020년 1.0명이었다. 앞서 학급당 학생수 지표에서 국공립 유치원의 지역 간 편차가 완만하게 좁혀지고 있었던 것과 비교해보면 교원 및 교사 1인당 학생수의 지역 간 차이는 보다 완만한 속도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표 1> 유치원 교육여건 하위 10개 지역 •

국공립			사립		
학급당 학생수	교원 1인당 학생수	교사 1인당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	교원 1인당 학생수	교사 1인당 학생수
부산연제구 21.5	제주제주시 17.2	부산남구 20.5	제주제주시 25.7	경북성주군 17.3	인천옹진군 30.0
부산강서구 21.0	부산남구 16.4	제주제주시 19.5	경북문경시 24.7	전남해남군 16.4	경북성주군 23.0
부산기장군 20.7	인천연수구 16.0	인천연수구 18.9	제주서귀포시 24.2	울산북구 15.9	강원고성군 22.0
대구달성군 20.2	울산북구 15.0	울산북구 18.4	부산연제구 23.6	경남거창군 15.7	제주서귀포시 20.4
인천연수구 20.0	부산기장군 14.5	부산부산진구 17.8	경북성주군 23	충북옥천군 15.4	경북영천시 20.1
부산수영구 19.9	인천서구 14.4	인천서구 17.5	충남보령시 22.4	경남밀양시 15.3	전남해남군 19.7
제주제주시 19.8	서울양천구 14.3	인천중구 17.4	서울용산구 22.4	강원삼척시 15.2	충북옥천군 19.6
대구남구 19.5	부산부산진구 14.2	서울강동구 17.3	서울서대문구 22.3	부산강서구 15.1	충북보은군 19.0
울산북구 19.4	서울성동구 13.8	서울양천구 17.3	대구달성군 22.2	인천옹진군 15.0	강원속초시 18.9
부산부산진구 18.8	제주서귀포시 13.8	부산강서구 17.1	강원고성군 22.0	경북경주시 14.9	강원삼척시 18.8

• <표 2> 유치원 교육여건 상위 10개 지역 •

학급당 학생수	국공립			사립							
	교원 1인당 학생수	교사 1인당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	교원 1인당 학생수	교사 1인당 학생수						
경북의성군	5.4	강원양양군	3.1	강원양양군	3.1	전남고흥군	6.4	강원평창군	5.3	전북남원시	7.1
강원양양군	5.8	전북임실군	3.4	전북임실군	3.6	충북진천군	6.6	전북남원시	5.6	강원평창군	8
전남함평군	6.1	전남보성군	3.6	전남함평군	3.6	인천옹진군	7.5	경북울릉군	6	경북울릉군	9
충북단양군	6.3	전남함평군	3.6	전남보성군	3.7	전남보성군	8	전남완도군	7.8	부산중구	9.7
경북군위군	6.6	전남곡성군	3.6	경북의성군	3.9	강원평창군	8	전남고흥군	8	전남완도군	10.3
전남보성군	6.8	경북의성군	3.7	전남강진군	3.9	충남청양군	8.2	전남보성군	8	전남고흥군	10.7
전남강진군	6.9	전남강진군	3.8	전북남원시	4.2	전북남원시	8.3	강원영월군	8	전남보성군	10.7
전남곡성군	7.1	전북남원시	3.9	전남곡성군	4.2	경북울릉군	9	부산중구	8.1	전북고창군	10.8
전북임실군	7.1	전남화순군	3.9	전북김제시	4.2	경기동두천시	9.2	충남청양군	8.2	강원양양군	10.9
경기포천시	7.2	충북단양군	4	전남신안군	4.3	강원영월군	9.3	강원태백시	8.3	강원태백시	11

<표 1>과 <표 2>는 2020년 229개 시군구 기준으로 유치원 설립유형별 학급당 학생수, 교원 1인당 학생수, 교사 1인당 학생수 상위 10개 및 하위 10개 지역을 나타낸 것이다. 우선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를 살펴보면 학급당 학생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부산연제구, 부산강서구, 부산기장군 순이었고, 다음은 대구 달성군, 인천연수구 등이었다. 특히 하위 10개 지역 중 부산이 절반을 차지했다.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제주시 17.2명, 부산남구 16.4명, 인천연수구 16.0명 순으로 많았고, 교사 1인당 학생수는 교원 1인당 학생수가 많았던 지역들이 대부분 포함되었다. 국공립 유치원의 시군구별 교육여건 지표에서 공통적으로 개선이 요구되는 하위 10개 지역에 부산, 인천, 대구, 울산, 서울 등과 같이 대부분 시지역이 포함되었다. 한편 국공립 유치원의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지역에는 대부분 도지역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상반된 모습은 시지역과 도지역의 학생수 규모 및 밀집도 차이가 일부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

이상에서 지난 10년간 학급당 학생수, 교원 1인당 학생수, 교사 1인당 학생수를 살펴보고, 유치원 교육여건의 변화와 개선이 지속되는 추세를 확인하였다. 하지만 10년 전과 비교해 유치원 설립유형과 지역사회에 따른 유치원 교육여건의 차이는 보다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교육부는 2024년까지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을 40%로 목표로 하고 있어 국공립 유치원 확대 정책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보다 실천적 의미의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 간 유치원 교육여건 차이를 줄일 수 있는 지역사회 기반의 정책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KEDI 도서회원’이라면 귀하는 이미 ‘시대를 앞서가는 교육자’입니다.

1972년 8월 설립된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우리의 전통과 현실에 맞는 새로운 교육체제를 만들어 내고, 앞선 교육정책과 제도를 개발하며, 국가교육의 어젠다에 대한 선도적 대안을 제시해 온 세계 수준의 교육정책연구기관입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교육분야의 연구성과와 사업활동의 폭넓은 보급과 활용을 위하여 1987년부터 ‘KEDI 도서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KEDI가 발간하는 최신 연구보고서와 정보자료들을 받아보시는 순간, 귀하는 ‘시대를 앞서가는 교육자’가 되시리라 확신합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 ‘KEDI 도서회원’으로 함께 하십시오.

회원자격 및 특전

- 회원자격은 가입일로부터 1년간 주어집니다.
- 우리 원에서 발간하는 『교육개발』(연 4회)과 『한국교육』(연 4회)을 보내 드립니다.
- 기관회원 : 기본연구보고서를 우송해 드립니다.

가입방법 가입신청서와 함께 회비 납부

연 회 비 1계좌당. 개인회원 120,000원, 기관회원 200,000원

입금계좌 890901-00-016715(국민은행), 예금주 : 한국교육개발원

문의처 홍보자료실 Tel. 043) 530-9245 E-mail. kedibook@kedi.re.kr

한국교육개발원(KEDI) 홈페이지

한국교육개발원은 국내외 교육분야, 다양한 영역의 동향과 정보, 교육계 소식 등을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교육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KEDI 홈페이지
www.kedi.re.kr



KEDI 영문 홈페이지
eng.kedi.re.kr



AskKEDI 전자도서관
askkedi.kedi.re.kr



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
www.edumac.kr



대학역량진단센터
uce.kedi.re.kr



디지털교육연구센터
openschool.kedi.re.kr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www.hub4u.or.kr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
edpolicy.kedi.re.kr



교과교실제
scmc.kedi.re.kr



교원양성기관평가
necte.kedi.re.kr



교육통계서비스
kess.kedi.re.kr



방과후학교 포털시스템
www.afterschool.go.kr



영재교육종합데이터베이스
ged.kedi.re.kr



인성교육지원센터
insung.kedi.re.kr



학생선수 e-school
www.e-school.or.kr



Wee프로젝트
www.wee.go.kr

한국교육개발원(KEDI) SNS

- 한국교육개발원 페이스북 www.facebook.com/KEDIPR
- 한국교육개발원 유튜브 youtube.com/c/한국교육개발원KEDI
- 한국교육개발원 인스타그램 instagram.com/iam_kedi/
-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 페이스북 www.facebook.com/edpolicy.net
- 교육통계서비스 블로그 blog.naver.com/kedi_cesi
-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페이스북 www.facebook.com/방송통신중고등학교-1732018736871708/
- 방송통신중·고등학교 블로그 blog.naver.com/openschool_master



ISSN 1228-291X

「교육개발」웹진



2021년,

삶의 질을 높이고 균등한 발전을 이루는 교육,
나눔과 배려, 소통과 협력의 가치를 높이는 교육,
미래사회에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함양하는 교육,
한국교육개발원이 ‘더불어 사는 시대를 위한
대한민국 교육’을 새롭게 디자인합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실효성 있는 교육정책과 교육제도를 만들어
정부와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학생이 행복하고 교사가 즐거움을 느끼며
학부모가 만족하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미래사회를 지향하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개발해
학생들이 새로운 것을 생각해 내고 낯선 문제에 적극적으로 맞서며
세계를 무대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미래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가 되도록 도와줍니다.

무엇을 아는가보다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지향하며
잠재력을 키워 자신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을 성취하게 하며
존중과 배려, 책임감을 바탕으로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는 능력을 길러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줍니다.

미래사회 핵심역량 교육, 혁신적인 초·중등교육이 고등교육으로 이어져
대학이 인재를 육성하고 국가발전과 인류사회에 공헌할
세계적인 연구성과와 글로벌 인재를 배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